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일시 : 2018. 7. 19(목) 14:00

장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주최 : 서울연구원

후원 : 서울특별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일 시: 2018년 7월 19일(목) 14:00

장 소: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행사 개요

- 일시: 2018년 7월 19일(목) 14:00
- 장소: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주최: 서울연구원
- 후원: 서울특별시

행사 계획

13:30~14:00		등록	
14:00~14:30		개회사	서왕진(서울연구원 원장)
		축사	신원철(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윤준병(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14:30~14:45		민선7기 시정운영 여건과 기본방향	발표 : 라도삼(전략연구실장)
14:45~18:00		중점 추진과제 제안 및 토론	
1부	14:45~15:00	(1주제) 서울시 보행도시 추진전략	발표 : 이신해(교통시스템연구실)
	15:00~15:15	(2주제) 미세먼지 대응 대기질 개선방안	발표 : 최유진(안전환경연구실)
	15:15~15:30	(3주제) 온종일 돌봄 방안과 추진전략	발표 : 이혜숙(도시사회연구실장)
	15:30~16:15	1부 토론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질 개선 방안”	
		좌장 : 김경희(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백운석(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장) 장영기(수원대학교 교수), 권민(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장) 송지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은영(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6:15~16:30		휴식	
2부	16:30~16:45	(4주제) 서울형 혁신성장 추진방안	발표 : 김목한(시민경제연구실장)
	16:45~17:00	(5주제) 서울형 지역상생 전략	발표 : 정희윤(도시경영연구실)
	17:00~17:15	(6주제)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 방안	발표 : 이민규(도시외교연구센터)
	17:15~18:00	2부 토론 “서울의 새로운 성장과 협력 방안”	
		좌장 : 변창흠(세종대학교 교수) 토론 : 남기범(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경탁(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장)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규룡(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18:00		폐회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목차

1. 개회식

개회사	7
축사	9

2. 민선 7기 시정운영 여건과 기본방향 15

3. 중점 추진과제 제안 및 토론

1부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질 개선방안”

1주제	서울시 보행도시 추진전략	25
2주제	미세먼지 대응 대기질 개선방안	43
3주제	온종일 돌봄 방안과 추진 전략	53
토론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백운석(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장) 장영기(수원대학교 교수), 권 민(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장) 송지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은영(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63

2부 “서울의 새로운 성장과 협력 방안”

4주제	서울형 혁신성장 추진방안	83
5주제	서울형 지역상생 전략	95
6주제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 방안	103
토론	남기범(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경택(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장)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규룡(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111

1. 개회식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입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오늘 ‘서울연구원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7기를 맞이하는 서울시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저희 서울연구원이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서 엄선된 공약이 제시되었고, 서울시 행정부서에서도 민선 7기의 중요 실천과제가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약을 준비한 전문가들과 서울시 행정부서는 ‘더 깊은 변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는 앞으로 작성될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에 앞서 무엇이 핵심 정책과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려할 원칙과 방법은 무엇일지를 서울연구원과 전문가, 시 행정부서,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 서울연구원은 민선 7기 시정 여건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6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료집과 별도로 마련된 종합 자료집에 포함된 것처럼 연구원의 각 연구 단위의 다양한 정책제안 중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1부에서는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질’이란 주제 하에 보행도시와 미세먼지 대응, 온종일 돌봄 등을 제안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최우선 과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분야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에 대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제2부에서는 ‘서울의 새로운 도전과 협력’이란 주제 하에 혁신성장과 지역상생 전략, 서

울-평양 도시 교류 협력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과제는 곧 국가적 과제가 되고, 국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공간이 곧 서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지역상생, 남북 협력은 이러한 범주에 있는 핵심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이 선도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것입니다.

민선 7기 시정 우선 과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서울시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민선 7기 서울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날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 준비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무더위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며 토론회 개최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입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민선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님과 서울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지방에 민선 정부가 들어선지 23년이 되었고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7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긴장한 청년이 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번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정책들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수없이 경험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20여 년 전과 비교 할 수도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렇듯 ‘시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세밀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온종일 돌봄, 대기질 개선, 보행도시, 혁신성장, 지역상생, 남북교류 등 현재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6가지 과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 모이신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제안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서울시의회도 이곳에서 나온 의견을 꼼꼼하게 살피고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발판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원철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윤준병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를 맞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시정방향을 논의할 장으로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서울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지난 6년간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토건중심의 개발이 아닌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개선하는 ‘사람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에 목말라 있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육아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시민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이나 중앙·지역 간 격차 심화는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인 ‘수도 서울’이 수행해야 할 새롭고 발전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도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앞으로 4년 동안 위와 같은 시민의 생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할 온종일 돌봄과 미세먼지 대응, 보행도시 추진전략과 혁신성장, 지역상생,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등은 민선 7기의 시정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고 만들어 주신 서울연구원과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민선7기 시정을 이끄는 데 중요하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윤준병

2. 민선 7기 시정운영 여건과 기본방향

라도삼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

민선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민선 7기 시정운영 여건 및 기본방향

CONTENTS. 1	민선 7기 시정 여건
CONTENTS. 2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
CONTENTS. 3	민선 7기 시정 운영 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라도삼 전략연구실장

CONTENTS. 1

민선 7기 시정 여건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정치적 여건

- 시 최초 3선 시장, **“10년의 변화에 기반한 확실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때”**
 - 민선 7기는 민선 5~6기 시정 전반을 혁신하고자 했던 성과를 창출하고, 민선 7기 이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
- 시의회, 자치구, 수도권 모두 같은 당, **“성과 창출을 위한 최적의 기반 형성”**
 - 지방선거(18.6.13.)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 차지
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청장,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을 석권, 협력의 기반 마련
 - 형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정부-시의회-자치구-수도권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력체계 마련
⇒ 성과창출 주력 필요
- 신 남북교류 협력시대 등장 … **“서울-평양 간 교류협력 등 새로운 정책의제 대응도 필요”**
 - 남북정상회담(18.4.27.)과 북미정상회담(18.6.12.)을 계기로 급격한 북한 개방과 남북화해협력 분위기 형성
 - 서울시는 이미 광복절 ‘경병 축구대회’ 개최 및 ‘2019년 전국체전 남북공동개최’를 요청한 상태
 - 정부를 비롯한 각 시도가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류 기반 마련 및 서울 특성에 기초한 사업 추진 필요

민선 5~7기 시정운영 방향비교

시정방향	기본방향	추진사업
민선5기 (시정방향 전환)	신자유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마을, 공유도시,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청년허브 등
민선6기 (시장가치 확산)	시장 내공동체적 가치의 확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협치, 사회주택, 완전하루돌이 등
민선 7기 (시장성과 창출)	시장혁신의 지속화 기반 마련	민선 5~6기 성과지속 혁신정책의 시민체감강화

CONTENTS. 1

민선 7기 시정 여건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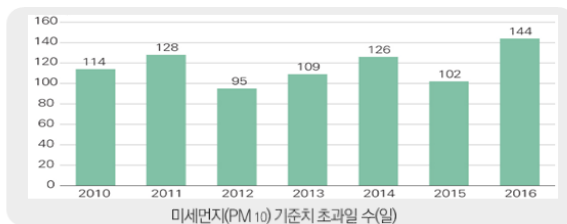
사회적 여건

• 거세지는 사회갈등과 세대교체 양상 ... “시민 의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 Me Too 운동과 더불어 촉발된 자기 권리 운동의 증폭 ⇒ 일상 폭력의 고발을 넘어 세대교체로 나아가는 중
- 또한 예민 난민 사태에서 보듯 시민과 시민 사이 의제를 놓고 충돌하는 시대의 등장 ⇒ 차이와 다름을 어떻게 포용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 의제로 부상

• 우려되는 대기오염과 시민안전 ... “이제는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

- 대기질이 악화되며 점차(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일 이상 일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50 $\mu\text{m}/\text{m}^3$ 를 초과
- 용산상가건물 붕괴사태에서 보듯, 건축물 안전도 또한 시급한 문제
2015년 기준, 3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무려 25.1%. 준공 후 1년 미만 건축물은 5.1%



3

CONTENTS. 1

민선 7기 시정 여건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경제·기술적 여건

• 심각한 고령화와 경제위기로 답답한 경제 상황 ... “새로운 해법 찾기 필요”

- 서울의 인구는 급격히 노령화(2025년까지 노인인구 49% 증가 / 생산가능 인구는 10% 감소 전망)
-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또한 만성적인 실업률에 허덕이는 상태
(2018년 5월 청년 실업률 10.5%)
- ⇒ 근본적 위기를 혁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혁신 성장 등)

• 증가하는 주거비 등으로 인한 위기의 시민 삶... “적극적 대안 마련 필요”

- 저소득가구 및 39세 이하의 가구주 연령에서 주거 부담 가중
- 그 결과 수도권 등 서울 외곽으로 이주하는 시민 증가(2010~2017년간 연평균 11.2만 명 유출)
✓ 20~29세만 증가, 나머지 연령 특히 30대의 유출 인구가 커
- ⇒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사회적 돌봄, 주거 안정 등)

•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 “신속한 대응 필요”

-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도시 등은 새롭게 주어진 과제
-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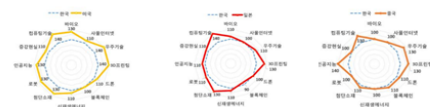
연령대별 서울 인구수 변화(만 명)

구분	2016년	2020년	2025년	증감률('16~'25)
계	980.5	963.5	954.5	-2.7%
유년인구				
0~14세 이하	113.0	104.7	100.0	-11.6%
15~39세 이하	360.2	336.2	306.9	-14.8%
생산가능인구				
40~64세 이하	382.5	374.5	361.7	-5.4%
소계	742.7	710.7	668.6	-10.0%
노인인구				
65세 이상	124.8	148.0	186.0	49.0%

연령별 가구원수별 순이동 현황(만 명, 만 가구)

구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5세이상	계
2010년	-2.3	1.2	-4.8	-1.8	-2.6	-1.2	-11.5
2017년	-1.9	3.2	-3.7	-2.2	-3.4	-1.9	-9.8

4차 혁명 기술력 비교: 바이오 분야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한국경제연구원, 2018)



CONTENTS. 2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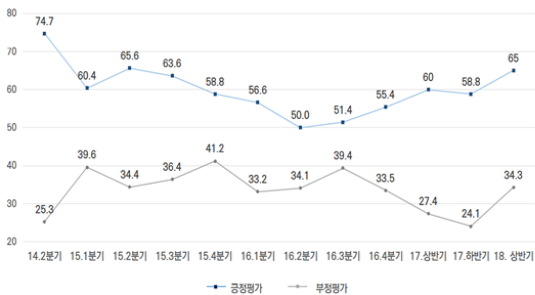


1 시민 여론 조사 : 민선 6기 시정 만족도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모색을 위해 시민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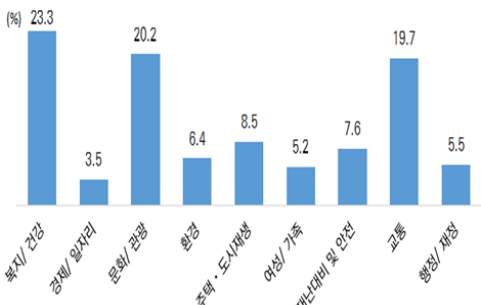
- ✓ 조사기간: 2018.6.7.~8.(2일간)
- ✓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
- ✓ 조사방식: 전화조사

- 박원순 시장의 만족도, 민선 6기 내 출공 50%를 상회
 - 긍정평가 중 41%는 시민과의 소통 노력을 언급
 - 부정평가 중 32%는 전신행정, 이미지 정치를 이유 거론 : 노력에 비해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 추이(점)

- '잘했다'고 평가한 분야, 복지·건강, 문화·관광, 교통 등의 순
 - 경제/일자리, 여성·가족, 환경, 행정/재정, 재난대비 및 안전, 주택·도시재생 등은 낮은 만족도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잘해온 분야(18.6, 전화조사(n=661))

5

CONTENT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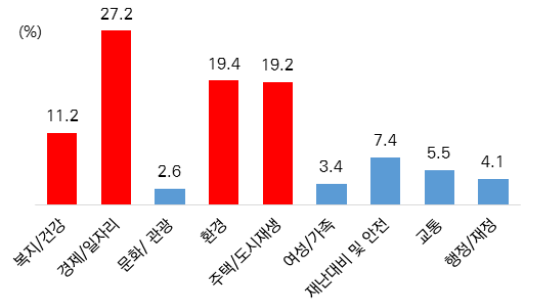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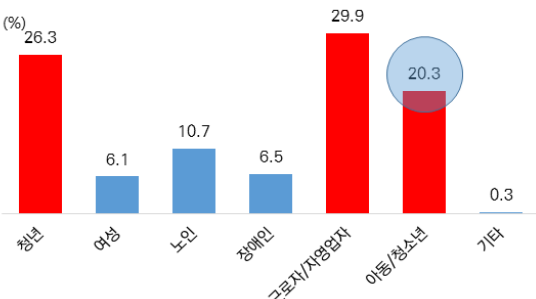
1 시민 여론 조사 :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 분야, 경제/일자리, 환경, 주택/도시재생 순
 - 점차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
 - 환경문제는 미세먼지등 민감한 환경 주제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민선 7기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 분야(18.6, 전화조사(n=661))

-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근로자/자영업자, 청년, 아동/청소년 순
 -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아이/청소년이 중요 정책대상으로 부상, 돌봄의 중요성 강조



민선 7기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18.6, 전화조사(n=661))

6

CONTENT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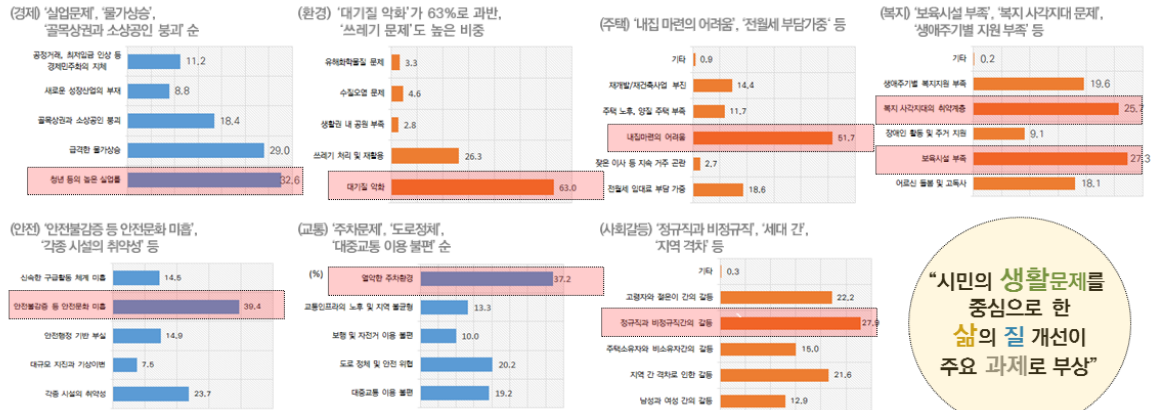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시민 여론 조사 :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 분야별 주요 정책: (청년)실업, 대기질 개선, 내집 마련, 복지 사각지대 지원, 보육시설 확충, 안전문화 확산, 주차환경 해소, 사회갈등 해소 등이 지적



7

CONTENTS. 2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후보 공약 검토 : 박원순 시장 공약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열겠습니다” 하에 『5대 중점 공약』과 정책대상별·영역별 공약 제시

5대 중점 공약	대상별 핵심공약	영역별 핵심공약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산업혁명 선도	서울인터넷 등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육성 / 스마트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5,000개 서울형 벤처기업 육성 / 시민주도형 추진체계 마련 등	자영업(3)
균형 발전하는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3도심, 7광역 중심 일자리 혁신거점 개발 / 12개 관문도시 조성 등	노동자(3)
격차 없는 서울	서울형 자영업자 실질 안정망 추진 /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도입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청년(3)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서울 돌봄 SOS /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아동 50%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 서울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여성(3)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로 한반도 평화선도	2019년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 경평속구 부활 서울-평양 간 도시협력 / 서울-평양 문화예술교류 확대 등	장애인(3)
		어르신(3)
		미래특별시(8)
		상생특별시(10)
		사람특별시(9)
		안전특별시(9)
		일상특별시(9)
		민주주의특별시(3)

8

CONTENTS. 2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후보 공약 검토 : 각 후보 공약 비교

박원순 시장 외 공약 검토	
후보명	주요 공약사항
김문수	도로 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미세먼지 30% 저감 4차 산업혁명 특구 개발, 재개발·재건축 완화
안철수	스마트 도시/디지털 행정혁신 도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도시, 창업도시, 따뜻한 공동체
김종민	사대문안 혼잡통행료, 공정임대료위원회 설치, 계속주거권 보장, 미세먼지·석면·GMO 3無 안전학교
신지예	서울시민인권헌장 채택, 전더건강센터 설치, 성평등계약제, 청년기본소득 실시, 독박육아방지,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등



주요 의제별 후보 간 공약 비교

중심 분야	박원순 후보 공약	타 후보 공약
스마트시티	6대 스마트전략 산업 지정·육성 벤처육성펀드 1조 2천억 원 조성 스마트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기술 벤처 기업 5,000개 육성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김문수) 공공와이파이존 확대(김문수) 벤처기업 육성 등 창업활성화(안철수) 광역별 창업혁신조성(안철수)
미세먼지	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 1백만 가구 미니 발전소 설치(태양광 도시) 보행·자전거 중심 도시 실현 대중교통 2단계 혁신	경유차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김문수) 4대문안 혼잡통행료 징수(김종민) 대체에너지 보급(안철수) 에너지 자치(신지예) 재생가능환 에너지로 지역자산화(신지예) 수도권 환경협력체 구성(김문수)
교육과 돌봄	서울 돌봄 SOS 시스템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동네인프라 개선	보육시설 확대(안철수) 공립유치원 확대(안철수) 온종일 초등학교 전면 도입(안철수) 서울 부임자제도 도입(안철수) 아동육상인력(김종민) 독박육아 방지 조례 제정 (신지예) 노동시간 단축(신지예)
청년·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서울형 자영업자 실직 안전망' 추진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가족자 기준 폐지 권역별 공공시립병원 설치 청년창업과 도시재생 허브 캠퍼스타운 조성	최저소득보장제(김문수) 청년취업확대/청년기본소득(안철수) 서울미래통장(안철수) 청년만강주책 공금(안철수) 계속주거권 보장(김종민) 노동복지시 구현(김종민) 보육급부제도 운영(신지예)

*중복률이 높은 주요 공약은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교육과 돌봄, 취약계층 등 4개 분야
*단, 신지예 후보는 성평등 공약에, 김종민 후보는 노동에 집중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교육과 돌봄, 취약계층 보호 등을 바탕으로 한
시민 삶의 혁신 속에서 답을 찾아야 *

CONTENTS. 2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시정 여건과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

시정운영 여건	시민이 원하는 방향	박원순 후보 공약	후보 간 공동 공약	민선 7기 시정의 핵심과제
성과 창출의 긍정적 기반 형성 • 정부·사·학·산·유·연 협력 기반 형성	경제/일자리 청년실업 해소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 혁명 선도	스마트 시티	시민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창출
새로운 기회 창출 • 남북간 교류협력시대 개막 •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기술시대	대기업 개선 안전문제 해소	균형발전하는 서울	미세먼지 대응	시민 삶의 의제 해결 (돌봄, 일자리, 주거 등)
심각해지는 사회환경 • 성, 세대, 계층 등 사회갈등 격화 • 미세먼지 등 시민안전 위협 • 주거난민, 탈세율화	내집마련 전월세 임대료 부담완화	격차 없는 서울	교육/돌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 (스마트 도시, 혁신 성장)
열악한 경제상황 • 민영화 된 청년실업 • 위기와 자영업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보육시설 확충 사회적 돌봄 강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청년·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남북교류 협력 추진 (서울-평양 간 도시 교류)
급격한 기술발전 • 스마트 환경 • 기술격차 확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로 한반도 평화 선도		수도권 등 지역과 상생협력 (미세먼지,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 등)

CONTENTS. 3

민선 7기 시정운영 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시정 운영 전략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사업 추진**
- 몇 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을 통해 시민 체감 성과창출
- **선도적 사업 추진**
- 남북교류협력, 혁신 성장, 지역 상생 등 주요 분야에서 선도적 사업 추진
⇒ 시정 성과의 전국적 공유 및 확산 추진
- **시민 체감 강화**
- 온종일 돌봄, 대기질 개선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 집중
- **정부 및 수도권과 협력**
- 온종일 돌봄, 혁신 성장, 지역 상생, 남북교류 등 주요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
- 보행도시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
- **민선 6기 혁신성과의 지속**
- 찾동 등 마을 시스템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따릉이의 성과를 잇는 보행도시 구현
- 마곡, 홍릉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

2

6대 중점 추진과제 제안

과제	제안 사유 및 추진 방안
보행도시	민선6기 보행친화도시 선언, 따릉이 사업 성과 확대 보행자 전용길, 보행특구를 잇는 보행네트워크 구축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 제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서울 대기질개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 민선6기 미세먼지 대응 시정 성과 지속 수도권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해법 마련
온종일 돌봄	민선6기 찾동, 마을사업 등을 잇는 성과 창출 마을 기반 돌봄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교육청-자치구 등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정협력 강화
서울형 혁신성장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 과제와 협력 마곡, 홍릉 등 민선6기 지역혁신 기반 형성 적극 활용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4차 혁명 주도
서울형 지역상생	민선6기 지방과 교류(상생상회 등) 성과 지속 및 확대 분권 시대 지방과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 제시 서울과 지방 간 역량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 모색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대응 서울-평양 간 오랜 교류 역사에 바탕 한 도시 간 교류 추진 미래 남북공동 발전 및 새로운 성장과 발전 기회 창출

11

감사합니다



3. 중점 추진과제 제안 및 토론

1주제

서울시 보행도시 추진전략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민선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제 1주제 서울시 보행도시 추진전략

CONTENTS. 1	그간의 추진경위
CONTENTS. 2	계속 추진 필요성
CONTENTS. 3	해외사례
CONTENTS. 4	추진 방향 및 전략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CONTENTS. 6	조직 개편안

CONTENTS. 1

그간의 추진경위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민선 5·6기 보행 정책

2012.4	보도블럭 10계명 선언
2013.1	보행친화도시 선언
2014.1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2014.12	인도 10계명 선언
2016.1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



정책 방향

비전

함께 걷고 함께 만드는 걷는 도시, 서울

지향
가치

시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완전한 보행시설

도시를 쾌적하고 즐겁게
삶의 질을 높이는
보행환경

추진
방향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기 쉬운
도시

걷고 싶은
도시

함께 걷는
도시

CONTENTS. 1

그간의 추진경위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걸을 수 있는 도시 >

< 걷기 쉬운 도시 >

[보행 기본환경 정비]

1 기본이 탄탄한 서울 길

- ① 이면도로 Zone30 시행 추진
- ② 보행환경개선지구 25개 지구 확대
- ③ 보도상 보행자정착시설물 관리 개선
- ④ 서울형 가로설계 및 관리 매뉴얼 개발



[보행 안전시설 확충]

2 보행자가 안전한 서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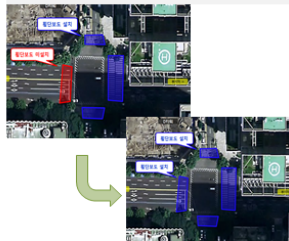
- ① 비규격 볼라드 일제 정비
- ② 골목길 재구조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 ③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 ④ 횡단보도 보행신호 본격 개선



[보행의 연결성 제고]

3 어디든지 연결되는 서울 길

- ① 도심권 전체 교차로 모든 방향 횡단 보도 설치
- ② 보행단절구간 전수조사 및 개선
- ③ 도심 일체 보행네트워크 조성



[보행의 편의성 제고]

4 차보다 보행자가 편한 서울 길

- ① 도로 다이어트
- ② 종로·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③ 시민 이동성 케어센터 운영



3

CONTENTS. 1

그간의 추진경위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걷고 싶은 도시 >

< 함께 걷는 도시 >

[이벤트와 스토리가 있는 보행공간]

5 재미난 이야기가 넘치는 서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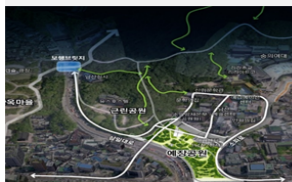
- ① 걷자 페스티벌 등 시민참여 이벤트 다양화
- ② DDP 등 보행전용거리 확대
- ③ 도심보행길 조성
- ④ 덕수궁 둘따길 회복
- ⑤ 서울 두드림길 확대 조성



[걷는 도시, 서울 랜드마크 조성]

6 세계적 보행 랜드마크 서울 길

- ① 지역 중심 대표 보행거리 확산
- ② 광화문광장 공간 재편
- ③ 서울역 7017 프로젝트
- ④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교통약자의 보행권 증진]

7 교통약자도 편안한 서울 길

- ① 엘로카펫 확대 추진
- ② 점자블록 전수조사 및 정비
- ③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 ④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 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 ⑥ 연령대별 맞춤형 보행안전교육



[제도과 문화혁신]

8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길

- ① 교통분야 LOUD 프로젝트 추진
- ② 서울시민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
- ③ 시민참여 통한 '걷는 도시 서울' 개선
- ④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
- ⑤ 교통안전분야 제도개선 추진
- ⑥ 민간기업의 보행대책수립 의무화 추진



4

CONTENTS. 1

그간의 추진경위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민선 5·6기 자전거 정책



정책 방향

비전

자전거와 함께 하는 건강한 도시, 서울

지향
가치

시민건강 증진 실현하는 건강한 도시
CO2 발생 감소시키는 깨끗한 도시
지속가능 교통을 통한 녹색 성장 선도 도시

추진
정책자전거
도로망
구축안전문화
확산자전거
이용
생활화자전거
법령·제도
개정

5

CONTENTS. 1

그간의 추진경위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인프라 구축 >



✓ 자전거 도로: 482km(2001)⇒868.7km(2016)



✓ 자전거 도로율: 6.1%(2001)⇒10.5%(2016)

✓ 자전거 주차시설: 5,109곳 145,159대 규모

도로망 구축, 유지보수 및 주차시설 마련



< 안전문화 확산 >



서울시 자전거 축제 및 포럼 개최



어린이 운전 인증제



대상별 맞춤형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캠페인 개최

6

CONTENTS. 1

그간의 추진경위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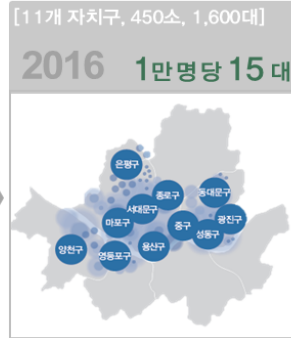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공공자전거 따릉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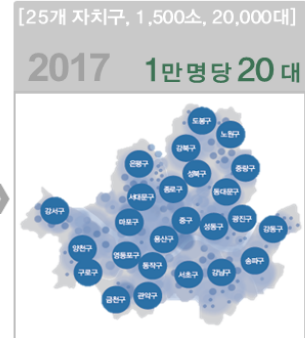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생활권 및 거점 간 이동수단



거점확장 → 생활교통수단



공공자전거 서울 전역 확대

7

CONTENTS. 2

계속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동일한 교통 VISION ‘사람+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추진

2030 교통정비기본계획 (2014)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

「서울교통2030」 11대 약속

-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자전거가 중심인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일반인과 교통약자의 경계가 없는 무장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교통수단과 시설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이동자감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행친화도시 시군2 (2016)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



- 도로공간 재편
- 도로 공간재편/ 유휴공간 효과적 활용



- 교통수요관리
- 녹색수단/물류 등 자원공간 확대



- 녹색교통 활성화
- 개인 녹색수단 활성화/ 친환경 수단 도입



- 대중교통 육성 및 활성화
- 대중교통체계 개선

녹색교통진흥지역 기본계획 (2017)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대행동
교통정책 강화, 공간 관리 수행

8

CONTENT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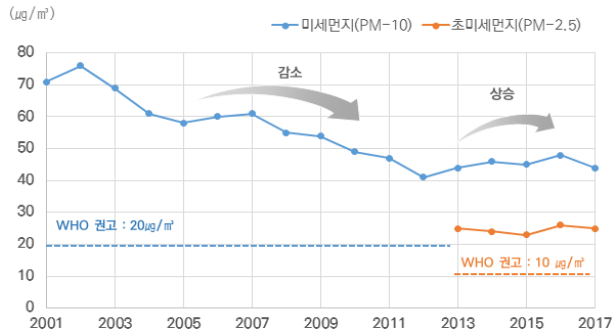
계속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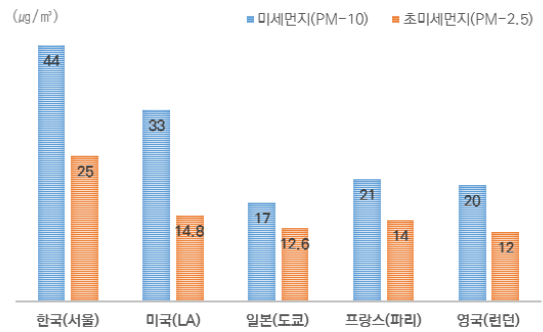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서울의 대기 오염도

<서울시 대기환경 오염도>



※ 출처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평균대기오염도(시계열)

<주요 선진국 비교>



※ 출처 : 한국환경공단, 국내외대기오염현황

※ 주 : 한국, 미국, 프랑스는 2017년 기준, 일본, 영국은 2016년 기준

9

CONTENTS. 2

계속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다각적 노력은 있었지만...



일부 정책은 실효성 논란
미세먼지에 대한 즉각 대응이 아닌,
도시환경 차원의 개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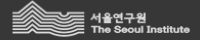


10

CONTENTS. 3

해외 사례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승용차 중심 도로 공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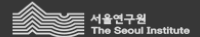
※ 출처 : Broadway: Greenlight for Midtown - After Photos, New York DOT (2009)
Google Streetview

11

CONTENTS. 3

해외 사례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승용차 중심 도로 공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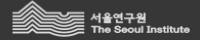
※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31363949@N02/8531072464>, Google Streetview, 서울연구원 내부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0514.html>

12

CONTENTS. 3

해외 사례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승용차 중심 도로 공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회복

파리, 프랑스



도로망계획



6차선 도로를 버스 2차선, 자동차 2차선으로 축소
나머지 공간은 인도 및 가로수로 계획

버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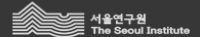
버스 전용차선(bus corridors), 버스 우선신호
노상주차장에서 버스에 대한 우선권

13

CONTENTS. 3

해외 사례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녹색교통수단을 도심 주 교통수단으로 육성

런던, 영국



※ 출처 : London Cycling Design Standards, 2014, TFL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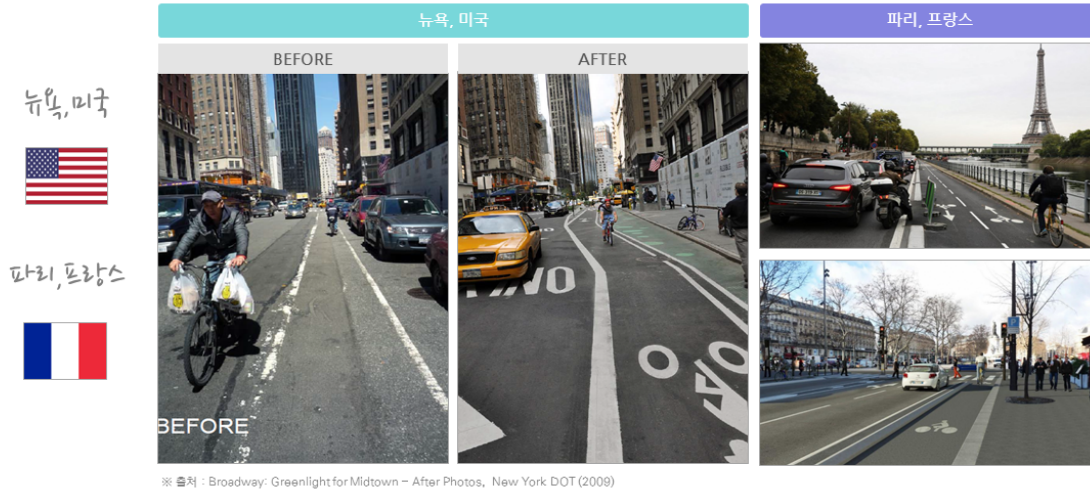
CONTENTS. 3

해외 사례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녹색교통수단을 도심 주 교통수단으로 육성



15

CONTENTS.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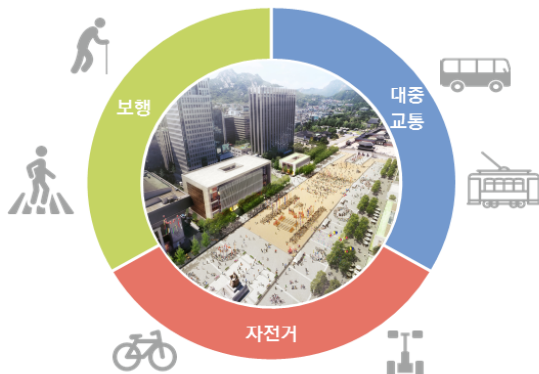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보행 중심 통행 체계 구축

- : 한양도성 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속 추진
- :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수단 간 연계
- : 생활권도로 개편 등 보행친화도시로 개편



자전거, '실질적 생활 수단화'

- : 2020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188km 확대
- : 따릉이 대여소 500m 간격 유지, 자전거 중심 이동
- : 문정, 마곡, 종로 대상 '따릉이 특화지구' 조성



16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보행 도시' 서울 실현

01 한양도성 녹색교통특별대책 시행추진

〈 녹색교통진흥지역 도로공간 재편 〉

> 방향

- 자동차 중심 교통의 폐해 시정
- 사람 중심 교통으로 회복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정책수단의 실행

> 원칙

- 승용차 도로 : 4차로 이하로 운영
- 버스 통행 도로 : 6차로 이하로 운영
- 자전거 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네트워크 설치
- 회복 공간 : 도로 특성에 따른 기타 활동 지원
 - 경제활동 지원가로(보행쉼터, 조업주차공간, 플리마켓 등)
 - 문화활동 지원가로(전시활동, 공연활동, 푸드트럭 등)



17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보행 도시' 서울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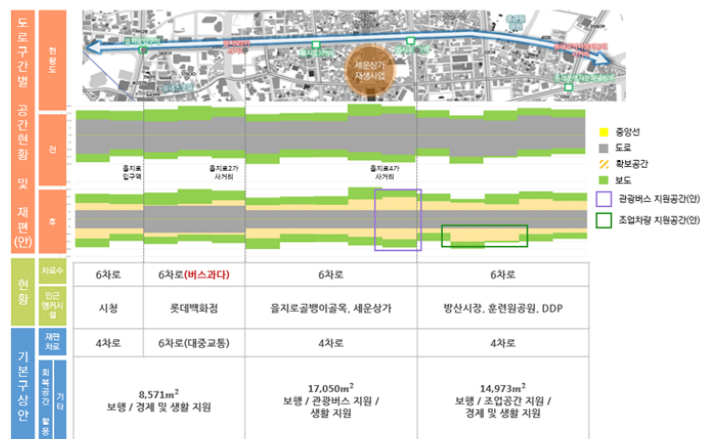
01 한양도성 녹색교통특별대책 시행추진

도로공간 재편 구성(안)

[예시] 을지로 공간재편



➡ 수요관리형 도로공간 재편



18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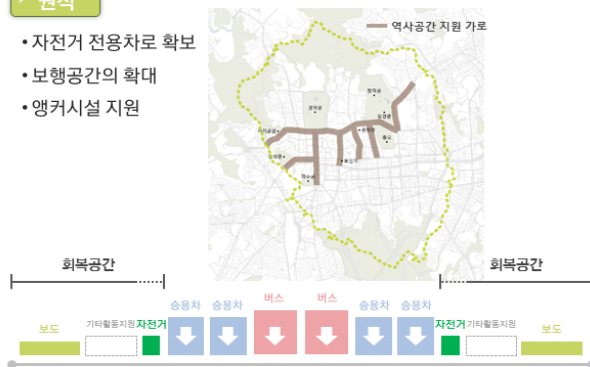
1. '보행 도시' 서울 실현

01
한양도성 녹색교통특별대책 시행추진

〈녹색교통진흥지역 회복공간 관리〉

> 원칙

- 자전거 전용차로 확보
- 보행공간의 확대
- 앵커시설 지원



[예시] 광화문 광장 조성(안)



※ 출처 : 서울연구원, 광화문광장 기본계획(안), 2018.4.

19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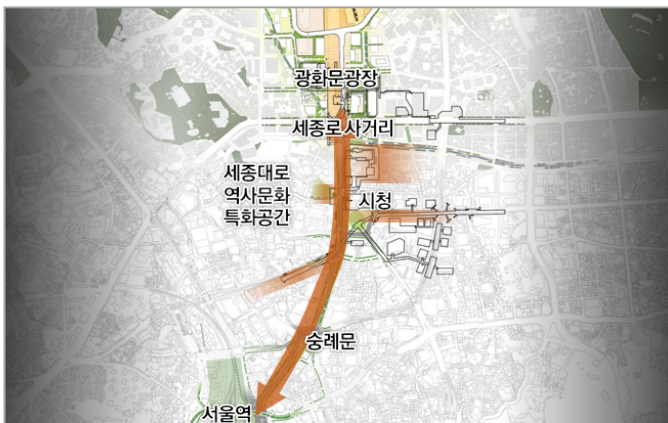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보행 도시' 서울 실현

01
한양도성 녹색교통특별대책 시행추진

걷기 편한 보행환경: 광화문 광장-서울역 연결



※ 출처 : 서울연구원, 광화문광장 기본계획(안), 2018.4.



20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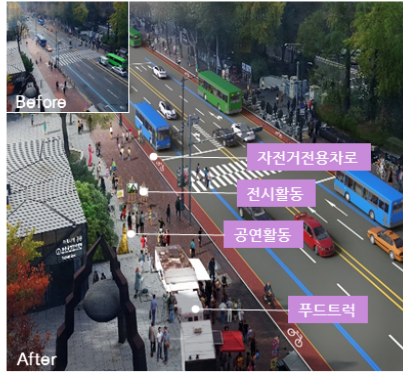


1. '보행 도시' 서울 실현

01 한양도성 녹색교통특별대책 시행추진



장충단로 도로공간재편(안)



대학로 도로공간재편(안)



삼일대로 도로공간재편(안)

21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보행 도시' 서울 실현

01 한양도성 녹색교통특별대책 시행추진

〈 통행 특성에 따른 수요관리로 교통량 감축시책 추진 〉

목표: 수요관리 대상의 30% 감축



제한방안

진화방안



22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보행 도시' 서울 실현

02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수단 간 연계

〈 보도환경 지속개선 〉

대중교통 주변 보행환경 개선

- 물리적 시설 이용한 보행환경 향상, 노점상 차단
- 보행권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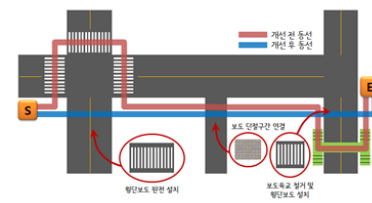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유지관리

-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 보도 설치(확장), 차량 진출입 억제, 편의시설 정비



보행 단절 구간 연결

- 'L', 'C' 형 불완전한 횡단보도 'O'형으로 개선



사고다발지점 교통안전시설 집중 개선

- 교통사고 다발지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에 방호시설 (무단횡단 금지시설, 횡단보도 등) 설치

23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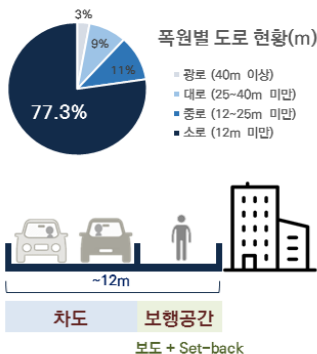
1. '보행 도시' 서울 실현

03

생활도로 재구조화를 통한 보행환경 지속

보행공간이 부족한 서울시 생활도로

- 12m 미만 소로가 전체도로의 77% 차지
- 차량과 보행자 공존,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로 단절 및 안전문제 발생



생활도로 재구조화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관리주체 명확화

- 생활도로는 자치구에서 담당

(예) 보행공간 확보된 생활도로

자치구 도로관리 DB 구축

-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DB 구축
- 도로구간과 보행공간 구분한 DB 구축

생활도로 재구조화 운영방안 수립

- 보행공간 중심의 도로공간 유형별 구분
- 공간계획 우선순위



1 보행 공간 > 2 거주민 주차 공간 > 3 통과 차량 > 4 외지인 주차

24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자전거' 실질적 생활화

01

3도심 연계 자전거 도로망 확충

〈한양도성-영등포-강남 연계 자전거 도로망〉

- 중거리 이동 위한 인프라 확충
- 자전거 특화지구 확대 지정 운영



25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자전거' 실질적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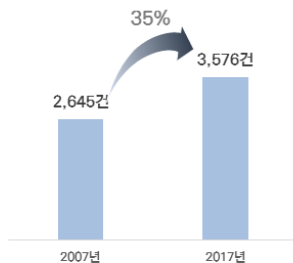
02

자전거 도로 공간 질적 개선

〈자전거 주행환경 안정성 강화〉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서울시, 2017)

-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는 10년간 35% 증가



안전에 취약한 자전거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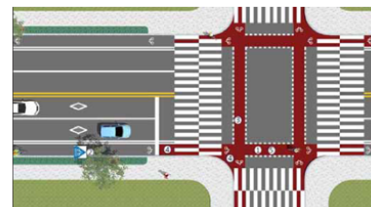
- 턱이 높은 자전거 횡단보도로 이동 불편
- 자전거 우선도로 관리 취약



※ 출처 : 한국일보, 2016.9.4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구현

- 안전성 확보 위한 설계방안 신규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 개선에 적용
- 자전거 이용공간 확보방안 마련



※ 출처 : 자전거이용시설 점검 가이드, 한국교통연구원, 2015

26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자전거' 실질적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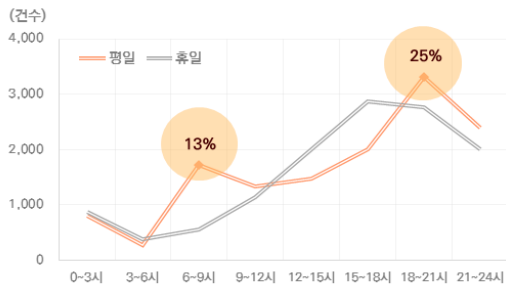
03

수요분석 기반 따릉이 관리 및 이용환경 개선

〈수요분석 기반 '따릉이' 관리로 이용 편의성 증대〉

따릉이 시간대별 이용현황(서울시, 2017)

- 평일은 출근(13%), 퇴근(25%) 시간대 많이 이용
- 휴일은 오후(23%) 시간대 가장 많이 이용



수요 분석 기반 따릉이 관리 및 이용환경 개선

따릉이 이용DB에 의한 효율적 공급

- 지역별 시간대별 수요 DB 구축
- 이용자 특성 분석을 통한 따릉이 공급



따릉이 이용환경 개선

- 대여소 지속 확대
- 공공자전거 설치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따릉이 특화지구 확대 조성

- 따릉이만으로 생활이동 가능한 특화지구 조성
- 따릉이 인프라 집중 구축



[따릉이 특화지구]

27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초고령사회 대비한 보행인프라 개선

01

고령자 위한 보행 인프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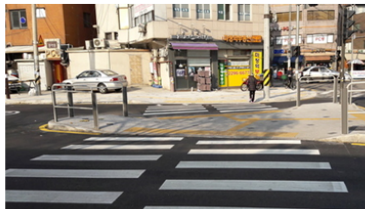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개선〉

-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지역 내 보도, 횡단보도,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 보행 편의성 향상



〈보행섬 신설 및 교통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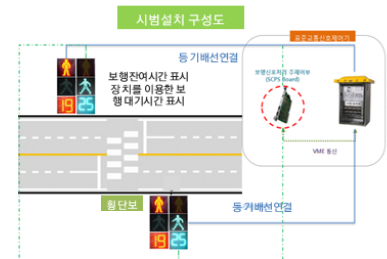
-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도로 효율성 저하되는 지점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 횡단 편의를 위한 교차로 내 교통섬 턱 낮추기
- 횡단 도로폭이 12m 이상(프랑스), 15m 이상 (런던, 도쿄)일 때 안전섬 설치 권장



※ 출처 : 네이버 뉴스, 2016.12.18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신호 시스템 운영
- 횡단보도 대기시간 단축, 보행신호 연장, 보행신호 전 시간 부여 등



28

CONTENTS. 5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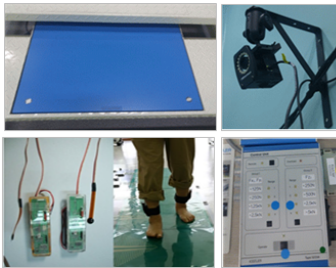


3. 초고령사회 대비한 보행인프라 개선

02 고령자 맞춤형 인프라 설계 기술 마련

〈고령자 등급 맞춤 지원 시스템〉

- 고령자 보행 특성 시스템 구축
- 복합적 보행, 경사로, 계단 등에서의 고령자 신체 특성 지표 산출
- 고령자 스트레스 측정 지표 개발



※ 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보행지원시스템 개발, 2018.6.

〈고령자 판별 통한 교통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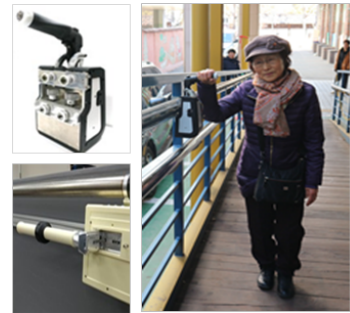
- 얼굴 검출을 통한 고령자 판단 시스템 구축
- 고령자 판단을 통한 공공교통 서비스 지원 S/W 개발



※ 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보행지원시스템 개발, 2018.6.

〈경사 구간 보조시설 마련〉

- 경사로 이동 핸드레일 설치로 고령자 보행이 어려운 노후주거지역 경사 구간 이동편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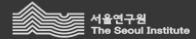
※ 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보행지원시스템 개발, 2018.6.

29

CONTENTS. 6

조직 개편안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서울시 보행도시 추진전략 조직 개편안



● 보행 정책 통합 추진 위한 조직 일원화 필요

- ✓ (현재) 보행관련 정책은 도시교통본부 물리적 환경개선은 안전총괄본부

● 통합 관리는 안전총괄본부에서 담당

- ✓ 인간 중심 패러다임 반영한 정책 설계: 도시교통
- ✓ 설계, 보도개선 등 보행안전 통합 관리: 안전총괄



● 자전거 정책은 현 조직에서 대응

- ✓ 자전거 정책은 팀 신설보다는 인력보강 통해 운영
- ✓ 교통정책수립, 설계 등 업무 담당

● 자전거 + 개인형 교통수단 통합관리 조직 필요

- ✓ 자전거 정책과 ⇒ 자전거+PM 통합관리 부서 전환
- ✓ 관련 정책, 규제 및 안전 분야 업무 보장



● 교통수단별 ⇒ 시민 친화형 조직으로 개편

- ✓ 교통정보분석 강화한 종합 교통정책 수립
- ✓ 교통민원분석 대응
- ✓ 대안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중심의 사전적 대응 조직으로 재설계

30

감사합니다



2주제

미세먼지 대응 대기질 개선방안

최유진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민선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제 2주제 미세먼지 대응 대기질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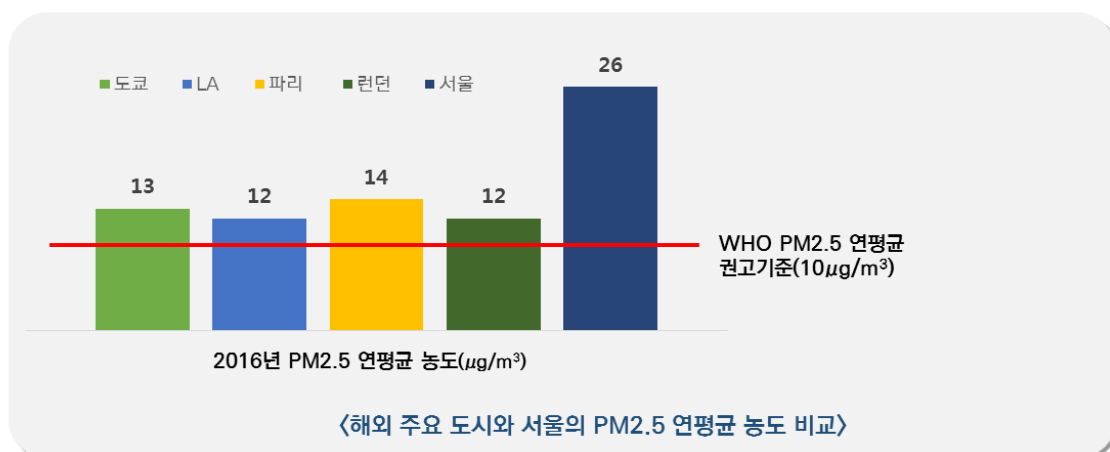
- CONTENTS. 1 추진 필요성
-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CONTENTS. 1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과 해외 주요 대도시보다 약2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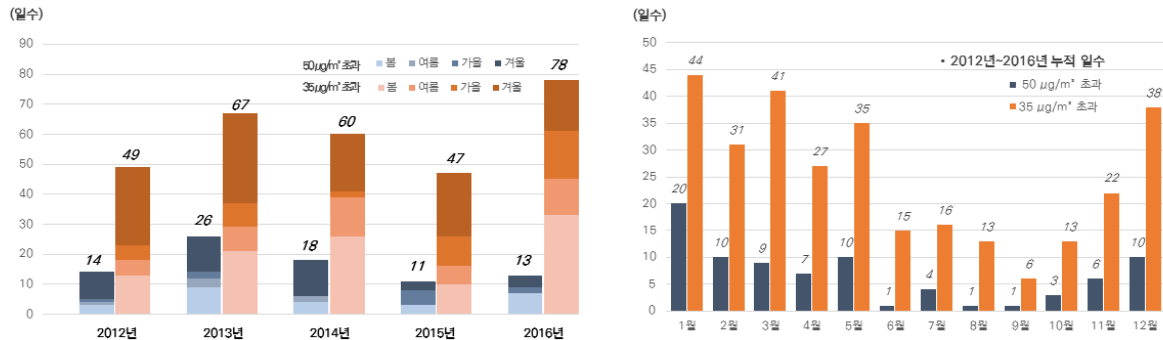
CONTENTS. 1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 시민들의 체감오염도는 연평균 농도의 변화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에 더욱 민감
- ✓ 국내 PM2.5 대기환경기준 강화로 시민들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요구도 더욱 증가 예상



〈대기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서울시 PM2.5 고농도 사례일수비교 : 50 µg/m³ 초과일수 vs. 35 µg/m³ 초과일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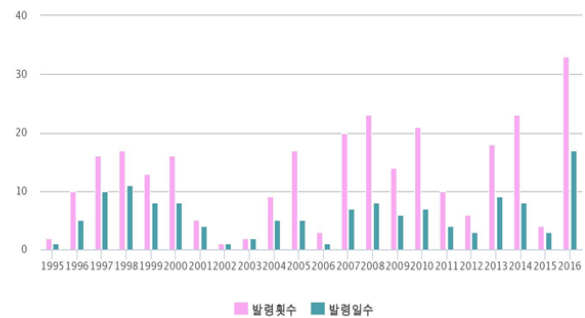
CONTENTS. 1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 여름철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오존 농도 증가
- ✓ 오존 주의보 발령 시기도 앞당겨지는 경향
 - (수도권 기준) 첫 오존 주의보 발령
 - 2012년 6월3일 발령 → 2015년 5월27일 → 2016년 5월17일 → 2017년 5월1일 → 2018년 4월19일
- ✓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도 발생
 - 서울에 오존 주의보가 발령된 2018년 6월 24~25일
 - PM2.5 일평균농도 각각 37 µg/m³, 38 µg/m³로 기준 초과
- ✓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오존, 대비와 관심은
미세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서울시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 및 일수의 연도별 변화〉

4

CONTENT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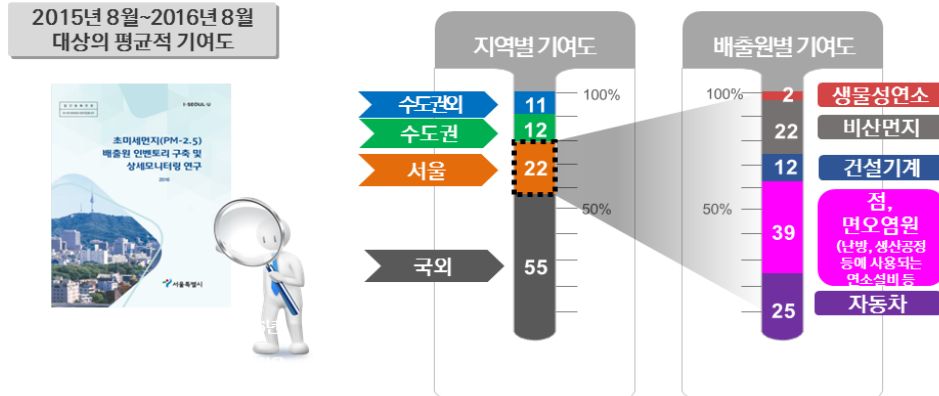
추진 여건 및 현황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서울시 단독의 노력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은 불가능

- 그동안 같은 대기오염 영향권역에 속하는 수도권조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공동협력추진은 미흡



※ 생물성연소 기여도 과소평가 가능성: 가정, 상업 취사 등의 부문에서 배출량 자료 누락

5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017년 9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 핵심내용

-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도입하여 건강민감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실시 시,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화 단계적 확대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 환경외교 강화 및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2018년 2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8대 개선대책” 발표

- 공공부문 주도의 배출량 저감의 한계, 시민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 정책의 강화 필요성, 시민주도의 실효적 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 등을 인식

•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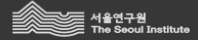
- 시민주도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및 친환경프로그램 참여 시민 인센티브 확대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유발차량 운행 제한
- 미세먼지 배출저감 집중 단속
-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확대와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마련
- 수도권 정책협의회,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등 국내외 지속적 협력 강화

6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고농도 상황
완화·개선
정책 추진

➤ 시민의 체감오염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고농도 상황 완화 및 노출피해저감 정책 추진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겨울, 봄철을 고려한 고농도시즌 제도 도입
- 고농도 발생시 노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응책 마련

통합관리
추진

➤ 미세먼지, 오존 등 전통적 대기오염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까지 모두 고려하는 통합관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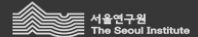
- 온실가스, 대부분의 대기오염문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와 생활양식의 문제
→ 미세먼지, 오존, 온실가스 문제 통합적 관리로 접근,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추진 필요
- 이동오염원 부문: 보다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로 차량 운행의 대폭 저감과 친환경차량 중심으로 전환 필요
- 난방발전 부문: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등 에너지 및 기후변화정책과 연계한 에너지 소비구조(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강화 등)의 변화 유도 필요

7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소통체계
구축

➤ 시민의 정책 수용성 확대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 정부 주도의 규제적 또는 하향식 접근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한계 명확
→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를 이끌 소통 전략 필요
- 정부는 불명확한 과학적 한계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 시민들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모니터링
→ 일원화된 쌍방향 소통 창구 마련 필요

공동협력
강화

➤ 수도권 광역 대기환경 관리 공동협력 강화

8

CONTENTS.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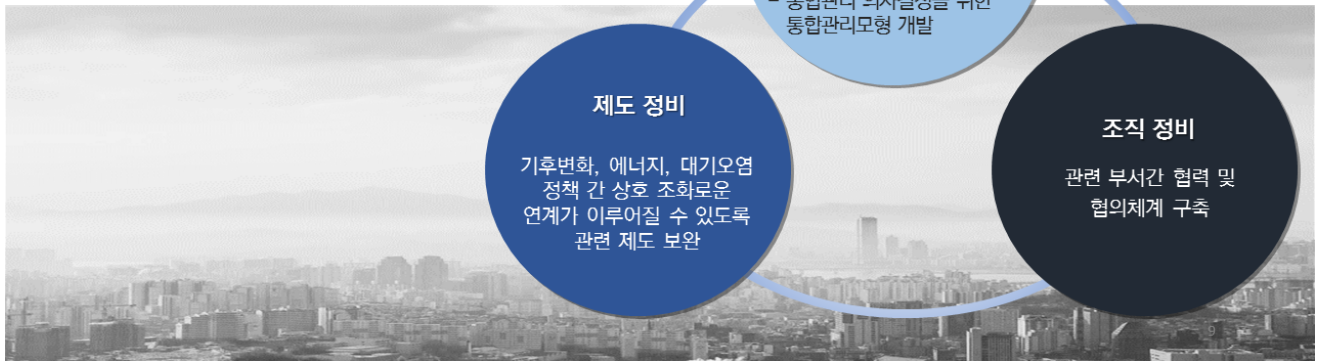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대기오염·에너지 통합관리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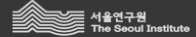
- 온실가스,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오염 문제의
핵심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구조와 생활양식
→ 에너지와 대기오염 통합관리 기반 구축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대기오염·에너지 통합 시민소통 및 참여 방안 마련



기후변화, 에너지, 대기오염
각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던
시민참여 및 소통 창구의 일원화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정부는 불명확한 과학적 한계를 포함한 관련 정보 전달, 시민들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모니터링



고농도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민, 기업, 자치구 등 소통 및 참여
방안 마련

-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시를 위한 차별화된 소통 전략 마련
- 시민, 기업, 자치구 각각이 사전에 정책이나 사업에 동참하여 실제 고농도 발생 횟수를 줄이고 발생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대기오염 고농도시즌 제도 도입

-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시즌 설정,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 시행으로 고농도 발생 횟수와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고농도 발생횟수 증가가 시민의 대기오염 체감도를 악화, 고농도 발생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시즌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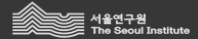
- 현재의 대응은 미세먼지,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적 대처 주요
→ 사전 고농도 발생 저감 방안 준비·실행으로 고농도 발생의 횟수와 강도 저감 유도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봄철과 겨울철(예: 10월~4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으로 설정
→ 평상시보다 강화된 1단계 배출원 관리 정책 추진, 실제 고농도 발생시 2단계의 비상대책시행
ex) 이탈리아의 경우 동절기(10월~3월) 비상대책시행 중
- 오존은 우리나라도 4월~10월 오존시즌으로 정하고 있으나 예·경보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그쳐
→ 고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배출저감 방안 등 적극적인 방안 검토

11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대기오염 고농도시즌 제도 도입

-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밀리아로마냐, 베네토,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 동절기 비상 대책 시행(winter emergency measure)

2017년 10월 1일~2018년 3월 31일
(2018년 이후 매년 10.1~3.31일 시행)

적용시기	월~금 8:30~18:30	PM10농도 기준 연속 4일 초과시 다음날 8:30~18:30	PM10농도 기준 연속 10일 초과시 다음날 8:30~18:30
운행허용 대상	휘발유차 (Euro 2 이상) 경유차 (Euro 4이상)	휘발유차 (Euro 2 이상) 경유차 (Euro 5 이상) 이륜차 (Euro 1 이상)	
	2020년 강화예정: 경유차(Euro 5) 2025년 강화예정: 경유차(Euro 6)	운행 제한: 8:30~12:30 영업용 경유차(Euro 3 이하)	운행 제한: 8:30~12:30 영업용 경유차(Euro 4이하) 8:30~18:30 영업용 경유차(Euro 3이하)

12

CONTENTS.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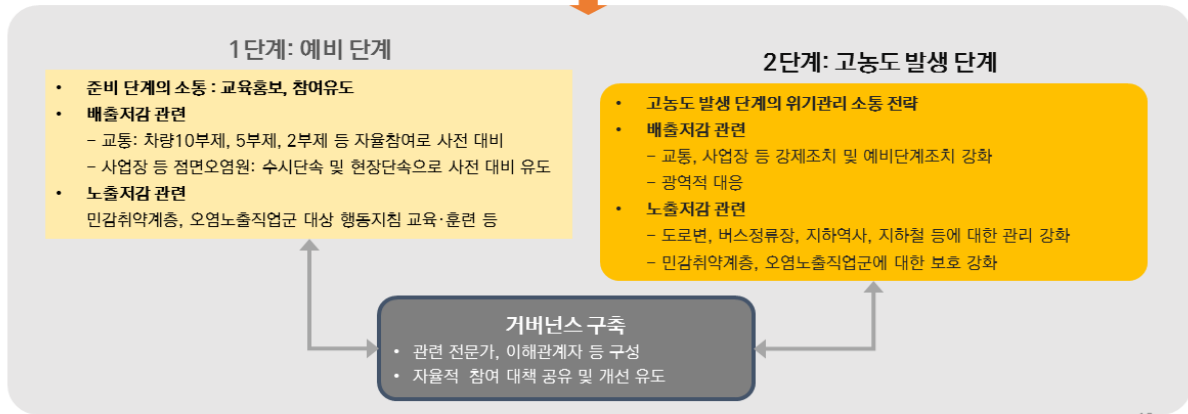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대기오염 고농도시즌 제도 도입

“고농도시즌제 도입에 따른 대응 흐름도(예시)”



13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4) 수도권 광역 대기환경관리 상생협력체계 구축

• 수도권 광역 환경협의체 구성·운영

- 3개 시도 대기환경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실무 TF팀 구축
→ 시도별 대기질 개선사업의 벤치마킹, 정보 교류 등 실무 중심의 협력 강화
- 향후 충청권까지 확대 운영

•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수도권 대기관리 기반 구축

- 수도권 광역 상세모니터링 측정망 구축 : 복잡해지는 수도권 대기오염 현상의 과학적 해석을 위해 3개 시도에서 상시적으로 미세먼지 성분, 유해대기물질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망 구축 → 3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하며 자료 공유
- 3개 시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배출량 자료 조사 및 구축
- 상세모니터링자료, 지역 배출량 자료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 원인 분석 및 시도별 맞춤형 정책 도출 등 → 3개 시도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진행

14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5) 수도권 교통 부문의 광역적 대응 우선 시행

- 현행 LEZ 제도의 실효성 개선 → 수도권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의 실질적 운행제한
 - 단속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장비 등 시스템 구축, 행정 협력 및 벌금부과 시스템 현실화
- 친환경등급제의 수도권 확대 도입을 위한 협력
-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광역적 대응 체계 구축
- 광역버스 친환경 전환, 물류부문 배출 관리 등 교통 관련 사업 및 제도 협력

15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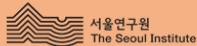
3주제
온종일 돌봄 방안과 추진전략

이혜숙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민선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제 3주제 온종일 돌봄 방안과 추진전략

CONTENTS. 1	추진 필요성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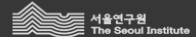


이혜숙 도시사회연구실장

CONTENTS. 1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경제활동 지속과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위한 여성들의 육구로 돌봄 수요 증가
 - 초등학생의 공적돌봄의 이용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33만/267만 명)에 불과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8.4.4),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운영 계획」

CONTENTS. 1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학령기 아동 양육 부담은 출산에 이어 여성 경력단절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

- 7~12세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 비중은 22.8%,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4.1%(7.5만 명)가 초등학교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통계청, '17년 4월 기준)

- 아이 돌봄 문제로 직장을 포기한 여성은 1만5841명(국민건강보험공단, '17년 12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단위: 천명, %, 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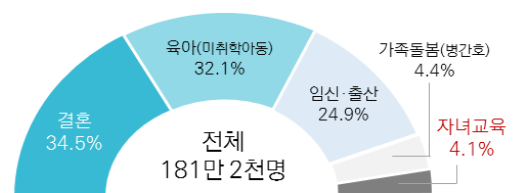
구분 ¹⁾	2016.4.			2017.4.			증감	증감률
	전체	구성비	경력단절 여성비중 ²⁾	전체	구성비	경력단절 여성비중		
18세 미만 자녀 있음	1,535	100.0	29.5	1,462	100.0	28.7	-73	-4.8
6세 이하	1,032	67.2	44.3	963	65.8	42.4	-69	-6.7
7~12세	330	21.5	22.7	332	22.7	22.8	2	0.7
13~17세	174	11.3	12.2	168	11.5	12.3	-7	-3.7

주1)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기준

주2) 18세 미만 각 자녀연령별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11.29),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경력단절 사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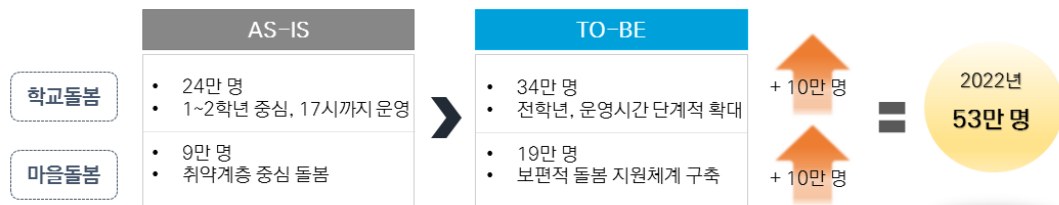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돌봄 체계 구축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 중
- 2018년 4월 4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발표



4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서울시장 공약

“ 부모와 나란히
함께 돌보는 서울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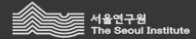
- 공공책임 지역기반 보편적 방과 후 돌봄 강화
 - 학교 초등돌봄교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추가 확대로 방과 후 돌봄의 공립형 모델 정립
 - 온마을 돌봄키움센터 설치로 공공보육의 책임을 강화
- 아침, 방과후, 저녁, 방학 초등 돌봄 등 틈새 초등 돌봄 체계구축
 - 아침(7~9시), 방과후, 저녁(17시 이후)돌봄, 방학돌봄 등 초등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협의체 운영을 통해 틈새돌봄 전담기관, 마을학교, 마을돌봄센터 등 운영

5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 교실 수는 1,453개실
 - 초등학생의 약 12%(3만/45만명)가 이용(서울시교육청, '17년 4월 기준)
- 지역아동센터 또한 서울지역 435개소 운영
- 방과후 이후 저녁돌봄에서 공백 발생
 - 초등돌봄교실은 대체로 17~18시까지 운영,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원대상 및 정원이 제한적

공간 사진



주요 주체별 운영 현황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계 ¹⁾
운영 기관 수(개)	574	435	23	1,019
이용자 수(명)	31,196	11,284	593 ²⁾	43,169

주 1) 초등돌봄교실 현황('17.4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현황('17.12월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17.12월 기준)

2) 전체 이용자수에서 중학생 인원 제외

6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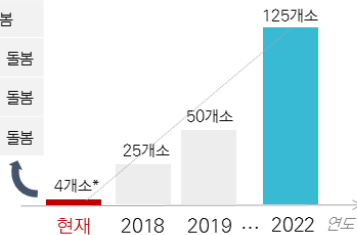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운영

- 2022년까지 125개소로 확대
- 올해 상반기 운영기관 4곳 지정·운영(2018.5.1)

자치구	단체명	구분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	다함께 돌봄
도봉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우리동네키움 돌봄
마포구	친한친구방과후	우리동네키움 돌봄
성북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우리동네키움 돌봄



자료: 서울시·서울시교육청(2018.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

2 | 방과후 교육 지원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 공립형지역아동센터 확대 지원 설치 ('17년→'22년 25개소)

3 | 온마을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용역」 추진
- 현재 수탁 연구기관 선정('18.12)
- 돌봄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19년)

7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주체별 돌봄 서비스 강화와 연계 시스템 개발

- 시와 자치구, 학교 및 교육청,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성
- 지역별(마을단위)로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플랫폼
- 서울시-자치구-교육청-학교 간 돌봄협약체 설치·운영

전폭적 확대보단 단계별 확대 전략 구상

- 시범사업 추진
- 여러 단체와 기관 등이 돌봄에 참여하는 사업 추진
-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서울형 돌봄 모델 개발과 운영체계 구축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령기 아동에게 돌봄 제공

8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시범사업을 통한 서울형 돌봄 모델 개발

- 2개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공모) 추진
 - 시와 교육청, 자치구, 학교, 지역사회기관 등이 참여 ⇒ 가능한 모델 운영 검토
-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추진상황 검토로 실제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 ⇒ 방향 수정 및 서울형 돌봄시스템 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서울형 돌봄 모델 제시 → 자치구 대상 사업 확대(3년 이내 모든 자치구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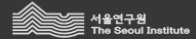


9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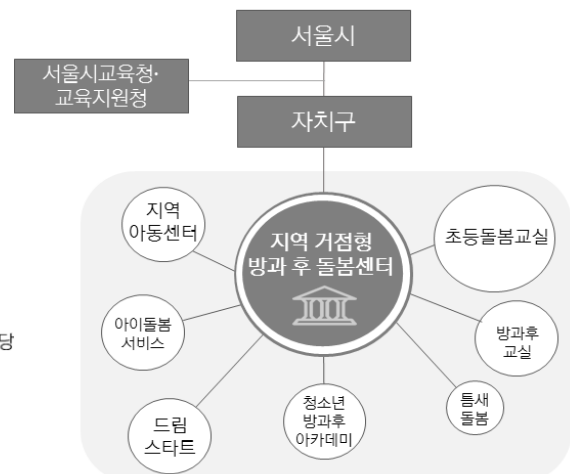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지역 거점형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

-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로 방과후돌봄의 책임성 제고
 - 양질의 전담 코디네이터 상시 배치로
안심하고 학부모가 학령기아동을 맡기도록 함
- 자치구별 지역 거점형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
 - 2018년 자치구 공모, 시범 실시 후 지속적 확대 운영
 - 자치구별 최소 1개씩 운영으로 접근성 강화
- 24시간 운영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마련
 - 24시간 상시 운영으로 맞벌이 및 전업주부 학령기아동의 긴급 방과 후 돌봄 담당

(예시) 자치구별 지역 거점형 방과 후 돌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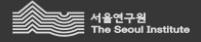


10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100% 연계체계 구축으로 방과후돌봄 공백 제로화

• 방과후돌봄 시설 연계로 방과후돌봄 종료 후 돌봄 제공

- 방과 후 돌봄 기관(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필요아동에게 돌봄 시간을 연장 제공

운영시간		운영 시간										비고	
구분		7~9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현행 주요 돌봄 주체	초등돌봄교실	아침 돌봄	1~2학년	3~4학년	5~6학년	오후돌봄				저녁 돌봄		토·공휴일 제외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시간: 14~19시 (일일 8시간)										토요일(5시간 이내), 공휴일 운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고학년: 15시~19시 중학생: 16시~20시						토요일 비정기 운영 (주5~6일, 10~15시)	
	마을돌봄 기관*							저녁돌봄				-	

주: 기관마다 운영시간은 상이하나, 학기중 주로 통용되는 시간으로 작성

* 우리동네마을센터 등

사각지대

11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100% 연계체계 구축으로 방과후돌봄 공백 제로화

• 방과 후 돌봄 일자리 마련으로 학령기 아동 돌봄의 공백을 제로화

- 1차 방과 후 돌봄 기관에서 거점형방과 후 돌봄관으로의 아동 딜리버리(이동)은 경력단절여성과 여성노인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운영대상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현행 주요 돌봄 주체 	초등돌봄교실	돌봄교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18세 미만(초등/초·중/초·중·고 혼합)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초4학년~중3학년 (초등/중등/초·중 혼합)						
	마을돌봄 기관	초등학생									

아동 이동 시
여성,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

12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4 방과 후 돌봄 지역 자원 지도 작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지역사회에서의 방과 후 돌봄기관, 장소, 인력 등 가용 자원의 파악과 이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이용 학부모, 아동이 학교 및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 자원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제공

은평구 돌봄 자원지도



성북아동청소년통합망



13

감사합니다



1부 토론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질 개선 방안”

1주제 토론문 1

송상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변죽만 울리는 서울시 녹색교통정책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잘하자

- 서울시 교통정책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보행자 중심 녹색교통 중심으로의 재편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
- 일상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지는 의문임. 생활도로는 여전히 교통약자에게 위험하고 자동차 점유율에는 변화가 없음
- 어린이 통학시간대 교통통행 제한 같은 대안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시범사업 일변도로 진행
- 서울광장 조성, 광화문 광장 조성, 서울로 7017과 같은 광로 및 대표가로 사업도 의미가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고 요구하는 정책은 내 집 앞 골목길의 혁명임 → 보여주시기 식 행정 관행은 여전
- 시정 전반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공무원부터 교육하고 마인드를 바꿔야 할 듯
ex)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 삭제,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에 발생하는 민-민 갈등에 대한 행정의 조정역할은 부재
- 골목길 불법주차 단속은 안하나? 못하나?
- 실제 불법주차 빈도가 낮은 곳은 강력한 주차단속 병행, (내 집 앞 골목길 내 대문앞 도로는 내 땅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구역이다!)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달성할 교통량 저감 목표가 불분명하다

- 녹색교통진흥지역, LEZ, 자동차환경등급제,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요금 인상 등은 병렬식 정책이 아닌 유기적 정책이며 각각의 정책목표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통한 시설물 개선으로 얼마를 줄일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LEZ)로 얼마를 줄일까?, 자동차환경등급제로 얼마를 줄일까?, 혼잡통행료 징수로 얼마를 줄일까?,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요금 현실화로 얼마를 줄일까? 구체적인 억제목표가 불분명하고 추진부서(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등)가 다르다보니 칸막이 행정의 한계로 유기적 정책추진 매우 미흡
- 도착지 수요관리가 강화되면 출발지 주차수요는 늘어날 경우 대책은 있는가?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를 경쟁시키지 말고 자동차와 자동차를 경쟁시키자!

- 종로 자전거도로의 한계를 보면 결국 자전거와 자동차가 경쟁하는 구도에서 탈피하지 못함
 - 따릉이 이용자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여야 한다!



(자전거가 자동차와 직접경쟁하지 않는다!)



- 자전거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매일매일 자전거 좀 타면서 정책을 만들자! 그게 힘들다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맡겨주자!



(차이점은?)



그럼 더 이상 서울시에 기대할 것이 없나? 우리는 선진도시처럼 안 되는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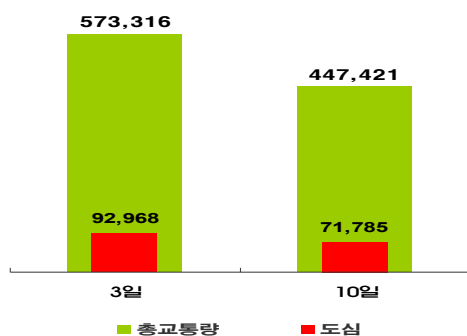
- 서울시 보행환경 시민공모전 개선사례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발견. 호응할 시민들은 있다. 그들에게는 격려와 호응이 필요하다!



- 지역주민이 전문가는 아니라도 그 지역을 모든 면에서 가장 잘 안다! 합의한 만큼만!

- 시민참여를 통한 교통량 줄이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 2007년 9월 10일(월) '서울 차 없는 날' 종로일대 차 없는 거리 조성
- 서울시 전체 교통량 22% 저감, 도심 유입 교통량 23.6% 저감



1주제 토론문 2

백운석(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장)

서울시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 2012년 보도블록 10계명 발표를 시작으로 2013년 보행친화도시 서울 선언, 2016.1월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역 남은 고가는 전국 최초 보행자 전용길로 재탄생되었고,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했던 서울 도심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촌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세종대로, 덕수궁길 등 ‘차 없는 거리’ 117개소(30,184m)는 남녀노소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및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람들이 차를 피해 걷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걷기 편한 서울로 변화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는 도심부 내 녹색교통 공간 확대 및 보행 질 개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한 생활권 보행친화공간 확대, 교통사고 사망자 70% 감축 및 시민참여를 통한 보행문화 확산을 통해 ‘걷는 도시, 서울’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도심부의 녹색교통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의 차로수·차로폭을 축소하고 보도,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또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역을 보행특구로 조성하여 단절없는 보행길 연결 및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연계 강화로 녹색교통 이용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모든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UD) 가이드라인 적용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도입을 통해 휠체어, 유아차 등 모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심부에 집중된 보행 사업을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역세권 및 생활권 이면도로까지 확대하여 교통수단으로서의 ‘걷기’가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행수요가 많고 보행서비스 수준이 낮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환승 네트워크에 파랑이 배치 및 환승안내체계 강화 등을 통한 보행네트워크를 정비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즉각적인 수요맞춤형 보행환경개설 설치 방식을 도입하여 보행안전에 위한 쉼터 등의 공간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임시시설물을 설치 후 시민평가로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반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과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70% 감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전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행사고 다발지점 분석을 통한 집중 시설개선 추진 및 보행 사망자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를 위한 서울시만의 더 강화된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적용·시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종대로 등의 차 없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참여 거리 이벤트 다양화

및 도심 속 휴게공간 제공으로 시민중심의 보행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15년 2천 대로 시작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8년 6월 현재 서울시 전역에 2만대를 구축하였고 '17년 말 현재 888.7km 자전거 도로가 구축되어 80만 명의 시민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서 따릉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릉이 이용실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민 이용 패턴에 따라 장소별·기능별로 따릉이로, 재정부담,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연차별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대여소간 평균 거리 500m 간격에서 지하철, 버스 환승, 근접 생활 밀착형으로 대여소 간격을 촘촘하게 조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연계 환승 마일리지 확대, 네이버 길 찾기 서비스 제공, 자전거 안장높이 조절, 프레임 강화 등 사용자 중심으로 이용 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실태 분석 결과, '18년 따릉이 이용자 평균 이동거리는 4.9km, 이용시간은 29분(속도 9.5km/h)으로 단거리이동이 많으며, 지하철역사 인접 대여소(여의나루역, 독점역, 홍대입구역, 잠실역 등)의 이용률 높아 대중교통연계수단으로 이용, 휴일보다 평일 이용이 많고, 출퇴근 시(07~09시, 18~20시) 이용(30.8%)이 많아 레저보다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친화 도시 서울에 필요한 자전거인프라 기반 조성은 주요 간선 도로망 보다는 마을 단위의 생활형 자전거 도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단계로('18~'20) 출·퇴근, 등·하교 이용자가 많은 마을단위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18년도 완공예정인 종로~청계천 도심 순환 노선을 비롯, 녹색교통진흥지역, 도시재생사업, 보행환경개선 사업 등과 연계한 자전거 도로 구축 및 자치구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단위 특화지구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 주요 간선도로를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 구축('19~'22)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양도성~여의도~강남권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구축하고 자전거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자전거우선도로 시인성 강화 등을 연도별·단계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계획 수립 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의무화와 자전거 도로 공간적 확대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사업도 병행하고 대중교통 환승이 활발한 지역 중심으로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방치자전거 관리 강화를 통해 주차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 운전자, 보행자 등에 맞춘 안전교육 및 시민참여 캠페인의 지속적 추진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상별 맞춤형 자전거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신호 방법, 음주 주행 금지, 헬멧 착용 등 자전거 안전이용에 필요한 매너 교육을 운영하고, 자발적 시민참여 캠페인을 지속적 추진 및 시민의견 수렴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주제 토론문 1

장영기(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주제 발표에서 현재 서울시 미세먼지와 대기관리의 총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오존, 온실가스를 모두 고려하는 통합관리의 추진 필요성과 수도권 광역 대기환경관리 공동협력 강화는 중요한 추진 방향과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미세먼지와 함께 오존농도 증가에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기오염 개선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오존농도 증가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존 농도 증가는 단순히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고 광화학 스모그 상태가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미세먼지 대책, 오존농도가 높을 때는 오존 대책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초미세먼지와 오존과 같이 2차 생성의 기여도가 큰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기관리정책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대기질은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없다

서울의 면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1/20 이다. 확산 이동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서울의 대기질은 주변 수도권 지역의 영향을 항상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대기질은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권역의 문제이다. 당연히 서울의 대기질은 수도권 대기질과 함께 파악하고, 함께 개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대기질의 집중 분석과 배출원 실태 파악 그리고 배출저감 대책이 수도권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발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 대기관리 협력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 대기관리 협력은 3개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오염 고농도에 대처하는 시즌 관리제도 필요하다

최근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고농도 발생은 고농도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이 고농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농도가 예상 되는 일정 기간 동안 시즌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책으로 평가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농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물질과 관련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이 동시에 예상되는 4, 5월에는 두 오염물질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관리를 강화하여 저감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오염 위해성은 항상 감시해야 한다

현재 미세먼지는 농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대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여러 화학물질의 복합체인데 직경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농도에 더하여 미세먼지의 어떤 성분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위해도에 노출되는 지역이 어디이며, 어떤 배출원이 위해도를 높이는지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석면, 라돈과 같이 환경기준물질이 아니라도 우리 생활환경 속에서 위해성을 높일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주제 토론문 2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 $46\mu\text{g}/\text{m}^3$ 에서 2017년 $25\mu\text{g}/\text{m}^3$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13년 이후에는 풍속 감소로 인한 대기정체, 강수량 감소로 인한 세정효과 감소 및 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요 대도시인 동경, 파리 및 런던보다 2배 정도 높으며, 대기환경기준인 $15\mu\text{g}/\text{m}^3$ 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발생원별 맞춤형 상시 대책과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해 왔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시민 3,000여명이 함께 한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반영하여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조치 강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건설기계 의무화 단계적 확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도입,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 환경외교 강화 및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 협력 확대 등을 공표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전월에 최초로 시행된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인식하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8대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유발차량 운행제한,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확대와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마련, 시민주도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및 친환경프로그램 참여시민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천저닝 베이징 시장을 만나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 도시간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구성·발족(18.9, 서울 대기질 포럼), 둘째, 서울-베이징 환경 연례보고서 공동 작성·발표 및 핫라인 구축, 셋째, C40 등 국제기구 가입으로 환경문제 공동 대응 등 국제공조 강화, 마지막으로 환경정책 교류 연수 프로그램 교차 운영('19년 서울, '20년 베이징)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북아 13개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포럼을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시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동북아 등 해외 도시와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지역별 기여도 중 서울시 자체 배출원의 영향은 22%입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7월 9일 언론을 통해 서울시 자체 배출원의 영향을 12%로 발표하는 등 서울시 단독의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지난 7월 6일에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서울, 인천, 경기를 일상공동체, 호흡공동체로 규정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목표 재설정, 평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보완, 고농도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등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제한을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친환경등급제

를 공동시행하며,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시키는 것 등에 대한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대기환경관리 정책 방향을 에너지 생산 및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의 관점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 건물은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시간 공개 의무화,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녹스보일러 설치 의무화 및 옥상 녹화 등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입니다. 일반 가정에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의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국내 기여도의 39%가 난방 발전 부문입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2014년 서울시 난방 발전 부문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399톤/년(전체 배출량의 32.7%)이고 이 중 가정용 난방 부문은 45.6%를 차지합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10% 이상 높고,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5~10배 정도 적기 때문에, 친환경콘덴싱보일러의 구입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와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도입으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운행제한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운행제한을 겨울철, 봄철 고농도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 조정, 경유차 퇴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부 및 주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 선진 도시의 대기환경 정책 방향은 대기오염물질의 환경 기준 달성에서 시민 건강 피해 예방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민감취약계층, 오염노출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노출 저감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버스정류장, 지하역사 및 지하철 내부 등에 대한 고농도 노출저감 방안을 강구하며, 민감군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학교, 병원 및 노인정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좀 더 체계적인 대기질 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후환경본부 또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대기질통합관리센터(가칭)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업무 범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정밀 관리,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석, 평가 등에 대한 일원화 및 대기오염물질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진단 및 평가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며, 대기환경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기환경관리 정책의 전 방위적인 이행을 통해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0년에 $20\mu\text{g}/\text{m}^3$, 2025년에 국가 대기환경기준인 $15\mu\text{g}/\text{m}^3$ 까지 낮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주제 토론문 1

송지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초등 2학년 학부모가 보는 돌봄, 그리고 온종일 돌봄

□ 사례로 보는 ‘온종일 돌봄’의 당위성: 9년차 워킹맘의 돌봄 수난사

#거 이직이 왜 그리 잦나요?

아이가 학령기에 접어들 무렵까지 아이의 유일한 양육자이자 가장인 나는 각기 다른 고용형태의 직장 다섯 군데를 거쳤다. 대기업, 재택근무 프리랜서, 외국계 파트타임 계약직, 5인 미만 중소기업, 공공기관 풀타임 계약직.

나는 이렇게 시간과 돈의 우선순위 사이에서 때마다 줄타기를 하며 생계를 걸고 고용형태를 바꿔 보는 모험을 감행했다. 아니, 감행 당했다. 물론 아이의 어린이집·유치원 역시 내 직장만큼 자주 바뀌었다. 일-가정 양립 가능한 노동환경 및 돌봄환경이 동시에 충족되는 기회가 이 사회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는 희박한 희망을 부여잡은 채.

끝내 별다른 보조양육자 없이 육아와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은혜로운 환경을 쟁취해내기도 했다. 그것은 그동안 고용 불안정, 경력 단절, 그리고 경력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줄어드는 불합리 등을 감수한 대가로 얻은 기회였다. ‘내가 돈 벌어 내 아이 내가 키우는’ 그 당연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토록 요원하다.

#다 키웠다고 방심한 순간 진짜 돌봄 절벽에 섰다

드디어 아이가 어설프게나마 글을 읽고 시계를 보고 혼자서 바르게 옷을 입는 때가 왔다.

초등돌봄교실 입소를 위해 가족이라고는 우리 둘만 등재된 단출한 등본과 내 재직증명서를 조용히 제출했더니 (18년 기준) 월급 약 148만원 미만 저소득 한부모에게만 발급되는 ‘법정 한부모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그 서류가 없는 한부모는 입소 자격 미달이라며 꼭 입소해야겠다면 ‘맞벌이’ 증명 서류를 내란다.

“맞벌이한테는 안 따지는 소득 조건을 한부모에게만 따진다고요? 그런 아이러니가 어딴가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뱉는 대신 어렵사리 친부의 재직 서류를 구해 제출했다. 한부모라는 사실이 학내에 확산됐을 때 행여 아이에게 향할 편견이 염려되기도 했고, 입소 경쟁이 워낙 치열해 까딱하면 탈락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던 까닭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토록 기형적인 서류 세장으로 입소한 돌봄교실은 오후 다섯 시에 문을 닫는다. 물론 학교 역시 부모의 통근시간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여덟시 반에 연다. 그리하여 아이에게 주어지는 공보육은 하루 8시간 30분이다. 주 40시간 근무에 칼퇴근, 그리고 왕복 통근 1시간 이내라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조건으로만 어림잡아도 부모는 하루 10시간 집을 비우는데 말이다. 게다가 나는 드디어 아이를 다 키워냈다고 착각한 채 이제 내 경력도 좀 돌보겠다며 더욱 고강도, 장시간, 장거리의 노동환경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으려던 참이었다. 서울 도심으로 왕복 통근 3시간에 저녁 먹고 두 시간씩 야근한다는, 비정상이지만 이 사회에 흔하디흔한 기준을 적용하면 부모는 하루 15시간 집을 비운다. 무려 6시간 30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리저리

샘을 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돌봄 절벽이라는 곳에 발을 반쯤 걸친 채 서 있었다.

#아이가 입학하는 순간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었다

저녁 여덟시까지 운영한다는 지역아동센터를 부랴부랴 물색했다. 이것도 나의 15시간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하지만, 가장 난제였던 저녁식사가 해결되고 초등돌봄교실 보다 무려 3시간이나 더 운영한다니 절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원이 터무니없이 적은데다 이마저도 저소득 순으로 채워져 우리에게 기회조차 닿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같이 아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한다는 고민은 애당초 사치였던 거다. 그래도 미련을 못 잡고 리서치 하다가 지역아동센터 입소자에게 저소득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글들을 접했다.

그때까지 나는 지역아동센터를 ‘과잉 노동이 만연한 우리사회 속 장삼이사 부모들을 위한 연장 돌봄을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했었다. 물론 취약 계층에 복지 서비스를 행하기 위해 좋은 뜻으로 설립된 기관이겠지만 애초부터 소득에 따라 일부 아동을 격리하는 취지를 내재하고 있거나,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 격리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 마음이 불편했다.

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후보에서 배제했지만 그렇다고 아동방조죄 현행범의 길로 접어들 순 없었다. 초등돌봄교실 이후 공백인 저녁시간에 보조양육자를 구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엄마를 찾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매일 우리 집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게 됐다. 나는 그렇게 내 몫의 가정에 엄마를 붙들어 매어놓고 저임금 돌봄노동자로 착취하기 시작했다. 결코 그 짓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토록 악착같이 혼자 버티려 했던 것이었는데.

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에게는 엄마의 일과 엄마의 가정이 있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빠에게는 보호자이자 아내인 엄마가 있었다. 지금은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남은 것이 희미해져 간다. 초등학생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토록 무시무시한 일이다.

#절벽은 끝나지 않았다(1)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까지다. 각종 방과후수업도 4시간 쉼 앞당겨져 1시 전후로 끝나고 만다. 즉 학기 중 4교시로 수업이 종료되며 돌봄교실이나 방과후수업이 전무한 상태와 마찬가지다.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점심 도시락을 싸는 가사노동이 추가된다는 것.

그나마 오후시간 일부라도 돌봄 공백을 막으려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한다. 아이도 나도 썩 원하지 않는 무의미한 배움과 엄청난 사교육비로 돌봄 공백을 틀어막는다. 주 1회 학원비 6만원. 주 2회 학원비 12만원. 영어나 수영 등을 보내려면 값이 곱절로 뛴다. 하루에 두 시간씩만 버티는 것으로 계획해도 50만원이 우습다. 막상 부모에게 휴가가 주어져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해도 휴가비는 이미 방학 중 사교육비로 소진된 상태.

갓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대학생보다 더 복잡한 스케줄로 여러 셔틀버스를 오가며 안전과 보호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동네를 곳곳을 오간다. 아침과 저녁 돌봄에 한한 보조양육자였던 나의 엄마가 방학이면 주양육자가 되어버린다. 어린이집에 보내던 신생아 시절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8세 아이 돌봄에 할애해야만 하는 아이러니다.

옆 반 학부모 중 위킹맘 한 분이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그 시점이 7월 중순 무렵임은 우연일 수 없을 게다. 돌봄 절벽이 또 한 명의 경단녀를 낳고 말았다.

#절벽은 끝나지 않았다(2)

잔인한 봄이 왔다. 2학년이 되자 신입생 돌봄 수요가 너무 많아져 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며 초등돌봄교실 추첨일 공지 안내문이 왔다. 이 무시무시한 추첨이 심지어 평일 오후에 열린다.

보조양육자가 없다면 부모 중 하나는 반차를 소진해야 한다. 추첨에서 떨어져 눈물짓던 누군가가 또 직장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을 테다.

#절벽은 끝나지 않았다(3)

3학년이 되면 초등돌봄교실 입소 자격이 사라진다. 대신 3~6학년 대상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실태를 살펴보니 '학교장 재량'이라는 조건 탓인지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다.

아무래도 저학년에 비해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관리 및 기획 등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고 각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내리는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우리 학교 역시 2년 전에는 있었다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교장 선생님이 바뀐 시기부터 운영하지 않았다.

3학년 진학과 동시에 그나마 있던 제한적 돌봄마저도 증발한다. 어차피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땐 방학 때처럼 사교육 뱅뱅이로 시간을 때우는 게 차악일까, 라면 끓이기 훈련이라도 시킨 뒤 혼자 내내 집을 지키도록 하는 게 차악일까.

□ 사례에 등장한 현행 돌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

○ 학령기 돌봄 사업 전반

- 유아기와 대비했을 때 각각 △학령기 아동은 부모와의 직접적 유대보다 사회 속에서의 물리적·정신적 관계성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 △학령기 학부모는 사회에서 보다 중추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돌봄 사업은 오히려 유아기 보다 학령기에 대폭 축소되는 기형적 형태
- 학령기 돌봄은 사회적으로 당위성·시급성·중요성을 모두 갖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시간·대상·공급량·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지나치게 소극적·한정적·자율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 학령기에는 이른바 '돌봄 절벽'이라 불릴 만큼 급격한 돌봄 공백이 시작됨. 이를 사회가 아닌 가정에서 해소해야 하는 구조는 곧 △부모의 경력 단절 △나아가 부모 대체 역할 위한 조부모의 경력 단절 또는 저임금 돌봄 노동 △불필요한 사교육비 과다 지출 △다수의 틈새시간 돌봄을 위해 비효율적인 보조양육자 고용 등 연쇄적인 사회적 문제 초래

○ 초등돌봄교실 (교내 돌봄)

- 시간 측면
 - 풀타임 맞벌이가정의 현실적인 부재시간(약 10~15시간)만큼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한시적 운영으로 저녁돌봄, 아침돌봄 등 틈새 공백 발생
 - 특히 학기 중 정규수업과 종료시간이 비슷한 방학돌봄의 경우 가정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수준의 장기 공백 발생
- 대상 측면
 - 3~6학년 및 1~2학년 초등돌봄교실 탈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설치에 강제성 없어 사실상 3학년 이후 교내 돌봄 공급 증발 상태
 - 명확치 않은 지침 및 학교별로 상이한 대상 기준으로 인해 △명백한 한부모 가정임에도 저소득 한부모에게만 발급되는 '법정한부모증명서' 제출 요구하여 한부모에게만 소득 조

- 건을 추가 심사 △석·박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 부모의 직업을 풀타임으로 인정하지 않아 피치 못하게 학업 중단 등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공급량 측면
 - 교내 돌봄은 모든 공공 돌봄 영역 중 가장 중추적임에도 공급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수요자 전원을 수용할 수 없어 추천 등으로 선별적 시행하는 불합리한 상황 빈번
- 내용 측면
 - 학부모는 사교육 등 타 방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식사(석식 및 방학 중 중식) 공급을 돌봄에서 가장 필요성 높은 콘텐츠로 인식

○ 지역아동센터

- 시간 측면
 - 19시까지 필수 운영으로 현행 돌봄 시스템 가운데 저녁 돌봄 기능을 지닌 유일한 기관이나, 통근 및 연장근로 시간을 감안한 풀타임 맞벌이가정의 현실적인 부재시간 및 심야 교대주말 근무 등 일부 특수직종 부모의 부재시간을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
- 대상 측면
 - 취약계층 우선 선발 조건과 공급량 부족 현상이 결합하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만 격리 이용하는 시설로 쓰여 입소 아동 대상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 내포
 - 돌봄 수요는 맞벌이·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소득조건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로서 그 대상 또한 확대되는 것이 타당
- 공급량 측면
 - 현재도 공급량이 부족하며, 취약계층 외 보편적 수요를 포괄할 경우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 공급 자체가 적다보니 센터 대부분이 아동이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애초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이동을 위해 보조양육자(등하교 도우미) 추가 고용, 셔틀버스 이용 위해 사교육비 지출 등 불필요한 낭비와 불편 초래
- 내용 측면
 - 저학년 기준 최소 6시간, 현행보다 저녁 돌봄 연장될 경우 그 이상 장시간 이용하는 서비스임에도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 사실상 센터 내부 교육 외의 교육은 수강할 수 없음.
 - 이는 센터 내 교육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된다 하더라도 수영, 축구, 피아노 등 특수 시설을 전제로 하는 예체능 교육이 사실상 불가하여 센터 입소 아동의 다양한 학습 추구권을 차단하게 됨

□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과제 1: 시범사업을 통한 서울형 돌봄 모델 개발

- 시범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시급성·중요성을 고려, 특히 시급성 중심으로 장기적 시범추진과제 및 단기적 긴급처방과제를 분리 선별하여 투-트랙 운영이 바람직함

- 제시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포함하여 정책 수립 시 당사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 당사자에는는 학부모 뿐 아니라 돌봄노동자, 아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과제 2: 지역 거점형 방과 후 돌봄관 운영
 - 24시간 돌봄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급한 과제로 간주할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자치구 당 1개소 운영은 접근성이 매우 낮아 차량 운행 등 딜리버리 문제 선결 필요
- 과제 3: 100% 연계체계 구축으로 방과후돌봄 공백 제로화
 - 저녁돌봄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온종일 돌봄’ 실현에 있어 의의가 큼
 - 현재에도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 취약계층의 동일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내용적으로 학업지도 및 보육 중심이라는 점 등에서 사업 대상 및 내용의 중복성이 강함
 - 사업 간 단순 연계 및 협력에 중점을 두면 각 부처 간 칸막이 행태로 인하여 여전히 시간, 대상, 공간, 공급량 등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해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 따를 것
 - 따라서 기관, 사업 간 연계를 넘어 통합적 책임, 권한 및 강제성이 강화된 컨트롤타워 체제 구축이 필요
 - 각 기관 연계 시 이동에 있어 접근성 문제 발생하며, 제안한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은 바람직하나 도보 이동이 아닌 차량 운행 시스템 마련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보임
- 과제 4: 방과 후 돌봄 지역 자원 지도 작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이용자의 정보 수집 용이성 측면에서 의의는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주요 당면 과제로 간주할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온종일 돌봄은 △신규 시설 확충 △기존 시설 개선 △신규 인력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운영시간 확대 △식사 제공 방안 마련 △차량 운행 등 접근성 강화 △교육 콘텐츠 질적 강화 등 산적한 당면 과제에 우선적으로 예산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제안 과제

- 지역아동센터 확충 방안 제안 (1) : 초등 유휴교실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교내에 구축
 -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발생할 전망으로 이 유휴공간을 방과 후 돌봄 및 저녁 돌봄 기능을 지닌 지역아동센터 공간으로 활용
 - 교내 지역아동센터는 △높은 접근성 △안정적이고 친숙한 환경 △운동장 등 학교 시설 연계 활동 가능 △임대료 절약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님

〈벤치마킹 사례〉 성남시립 도담 청솔 지역아동센터

- 성남시와 경기교육청이 전국 최초 학교 안에 설치한 시립지역아동센터로 2018년 개소
- 성남시가 교육청으로부터 한 초등학교 빈 교실 3곳을 무상 임차하여 놀이방·공부방 등의 프로그램실, 급식실, 사무실 등을 갖춘 지역아동센터 시설로 리모델링

- 지역아동센터 확충 방안 제안 (2) : 근거리 커뮤니티 활용, 자치에 특화된 지역아동센터
 - 마을도서관, 교회 등 근거리에 위치한 다양한 주민 주체들과 협업하여 규모는 작지만 접근성이 높은 소형 지역아동센터를 다수 구축
 - 지역별 새로일하기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보육교사, 간호사 자격 등을 소지한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을 전문 돌봄 인력으로 고용
 - 또한 마을 커뮤니티라는 공간적 특성을 살려 지역 어르신, 학부모, 중고생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 및 자율성을 강화한 지역아동센터로 특화
-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 위한 긴급처방 제안 : 민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 지원
 -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단축 운영으로 치명적인 돌봄 공백 발생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민간기업(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계 협력, 방학 기간 오후 돌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다만 민간 서비스 협력은 긴급 과제의 하나로 단기적 대책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현행 기관의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방학 중 돌봄을 공보육 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함

□ 맺음말: 부모가 가정에 지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양육자는 모두 직장과 가정에서 각각 투잡(Two-job)을 하는 중임에도 우리의 노동 문화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모는 첫 번째 직장에서는 제때 퇴근하지 못해 매일 몇 시간을 지각해가며 가정이라는 두 번째 직장에도 너무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바꾸어 생각해보자. 매일 아침 가정을 몇 시간 더 돌봐야 한다며 직장에 지각한다면 직장에서도 잘려도 진작 잘렸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나의 경우 가정이라는 직장에서도 동료는 내 아이 하나뿐인데, 퇴근 시간이 늦어 매일 지각하는 나를 자르지 않는 아이에게 황송할 만큼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보육 문제는 노동 문제와 필연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과제다. 따라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장시간 과잉 노동이 만연한 착취 구조라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보육 문제와 일-가정 양립 문제, 나아가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노동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온종일 돌봄'을 이토록 소망하고 있지만, 언젠가 장시간 과잉 노동문제가 해결되어 공공의 돌봄 기능이 양육이라는 부모 본연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완충하는 대안으로서만 작동하는 사회가 속히 열리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3주제 토론문 2

이은영(서울시 가족담당관)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

I. 서 론

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은 급속한 저출생 사회화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이다. 또한 돌봄 수요에 비해 공적 영역에서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세대 가구가 감소하고 한부모·조손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유형과 보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보육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돌봄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방안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의 기본 방향은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이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수요자(아동·부모)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 실현 등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온마을 지역돌봄 서비스의 통합 허브역할을 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2년까지 400개소까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에는 키움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센터와 지역자원(도서관, 체육관 등)의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며,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영유아 공동육아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22년까지 450개소까지 설치하여 독박·고립육아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동,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육아카페, 육아품앗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배치하여 전문 육아상담 및 육아자원(기관, 아이돌보미)을 연계할 계획이다.

셋째, 아이돌보미 1만 명을 양성하여 온종일, 시간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의 아이돌보미는 2,813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에 적시에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2년까지 아이돌보미를 1만 명까지 양성하여 대기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한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넷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여('18년 22개 → '22년 162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을 개

발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다섯째, 온종일 돌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교육청·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지역돌봄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조정 등 핵심적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섯째, 이용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매핑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도서관, 체육관, 청소년회관 등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령별·시간대별·분야별·돌봄기관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수요자들이 한눈에 양육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II. 결론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는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 서비스 간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주도 서비스와 조화를 이루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함께 키움(growing together)’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이 짊어지고 있던 돌봄의 부담을 덜거나 해소하는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주제

서울형 혁신성장 추진방안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

민선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제4주제 서울형 혁신성장 추진방안

- CONTENTS. 1 추진 필요성
-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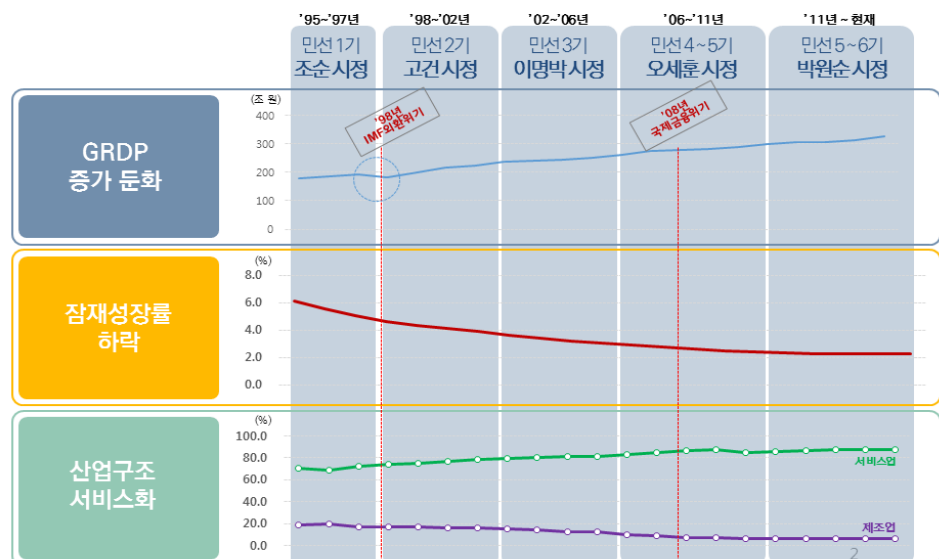
CONTENTS. 1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000년대 들어 서울 경제
저성장 추세 공고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미래 먹거리 탐색 수요
지속 증가



CONTENTS. 1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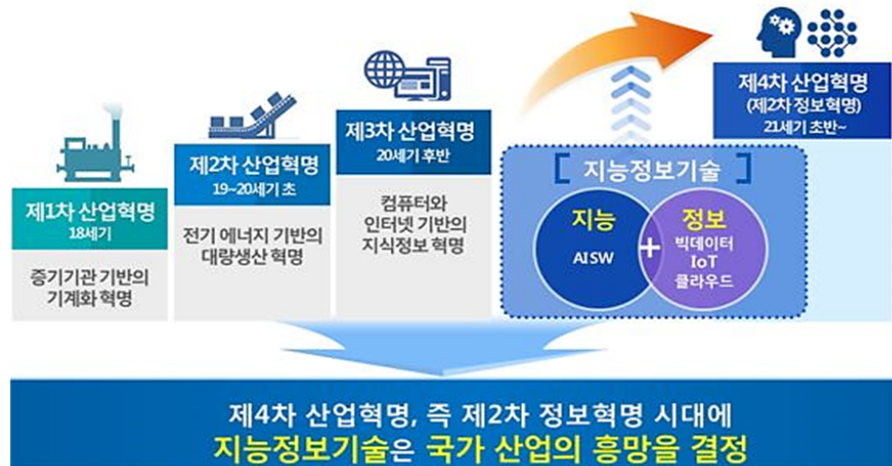
“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 ”

- 다보스 포럼, 2016 -

기회이자 위기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 시대 도래 전망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는
주요 45개국 중 25위
(UBS, 2016)

저성장 추세 전환
새로운 동력 획득을 위한
구조혁신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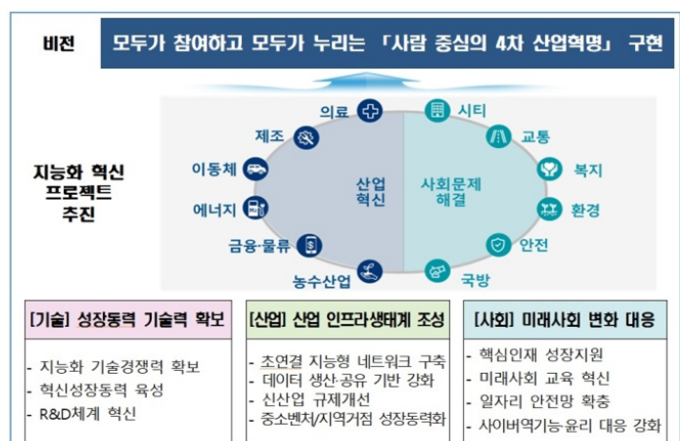
CONTENTS. 1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중앙정부 경제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으로 구체화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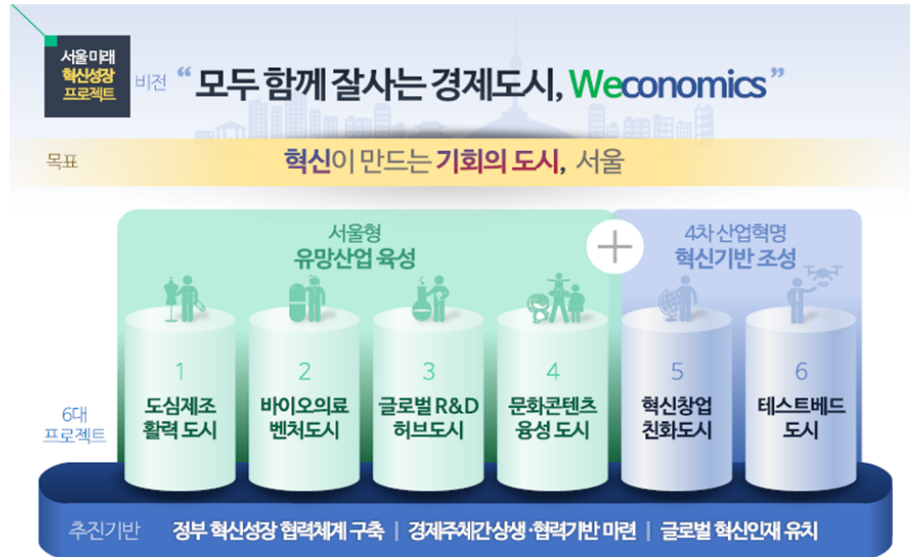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대응형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표
(2018.01.31)

제조, 바이오의료, R&D,
문화콘텐츠 등 유망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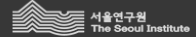
창업, 테스트베드 등
혁신기반 조성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주요 사업은
시설, 인재, 펀드,
그리고 **거점**

전반적으로
‘산업 + 거점’이라는
서울시 산업정책의 전통위에서
새로운 추세를 반영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추진 방향

기존 계획의 연장선
상에서 새로운 추세에
적극 대응

- '산업+거점'의 기본적인 서울시 산업정책 틀 위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구체화
 - 서울시 산업정책의 기본틀과 기초를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
 - 새로운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혁신의 내재화/절차화 추진

추진 전략

거점, 창업, 산업
측면의
대응 전략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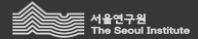
- **거점:** '선택과 집중'으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거점 중심 성공 사례 창출에 초점
 - 신규 거점의 개발 못지않게 향후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거점 사업 간 우선순위의 설정과 집중 필요
- **창업:**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원천인 창업/스타트업지원 체계 재편
 -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서울시의 창업지원 체계의 질적 고도화 방안 탐색
- **산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새로이 부상하는 융합산업 육성 수요에 대응
 - 스마트콘텐츠 산업, 스마트시티 산업 등 기존 산업분류로는 정의가 어려운 산업군 혹은 융합산업의 육성 전략 보완

7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거점: 전략적 산업거점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로 육성

서울형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확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거점 중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점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제안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 도시재생, 도시계획, 지역발전,
경제진흥 등 부처별 지역거점사업
우선순위 및 총괄범위 조정 필요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도가 높은 산업거점 대상
성공 사례 창출 초점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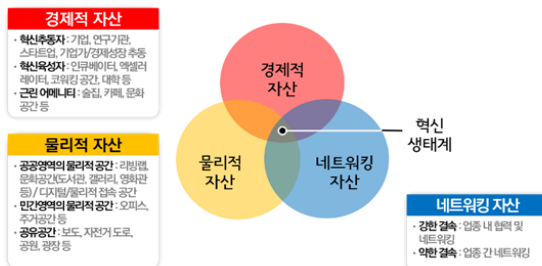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거점: 전략적 산업거점 혁신지구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공간전략으로
R&D와 창업을 도심에서 결합하는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 모형 부상

대학, 의료기관 등 R&D 역량이 강한
앵커기관 중심의 도심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의 혁신지로서 도시 내 기성시가지가 재부상

기존 혁신공간과 혁신지구의 차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산업지구 (Industrial District)	연구공원 (Research Park)	혁신지구 (Innovation District)	혁신지구 (Innovation District)
도시	도시	도시	도시
도로 접근	도로 접근	도로 접근	도로 접근
공간적으로 고립	공간적으로 고립	공간적으로 고립	공간적으로 고립
혁신원 희망 혹은 캠퍼스 모형	혁신원 희망 혹은 캠퍼스 모형	혁신원 희망 혹은 캠퍼스 모형	혁신원 희망 혹은 캠퍼스 모형
연구 혹은 상업 공간이 주	연구 혹은 상업 공간이 주	연구 혹은 상업 공간이 주	연구 혹은 상업 공간이 주
신규조성이 주	신규조성이 주	신규조성이 주	신규조성이 주
기개발 지역에 조성	기개발 지역에 조성	기개발 지역에 조성	기개발 지역에 조성

자료: Brookings(2014)

자료: Centre for London (2018)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경제, 네트워킹 자산 등의
균형잡힌 지역 자산 구조 구성이 핵심이며
여기서 초기 자원 동원 & 매칭이 서울시의 역할

향후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거점 사업 체계 정비와
서울산업진흥원, 디지털재단 등 관련 중간조직 활용 등
전담 시행체계 마련 및 조직 정비가 시급

9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거점: 전략적 산업거점 혁신지구로 육성

혁신지구 선별과 육성에는 바르셀로나 @22,
보스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등 기존 사례를 참조한
체계적인 현장상황 재평가 필요

다만 기존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곡, DMC, 홍릉 등의 혁신지구 적합성이 높은 편

홍릉



마곡



DMC



10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창업: 서울 스타트업 플랜 2.0 추진

서울시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업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성장 견인 체계 미흡

- 서울시의 창업지원 규모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사업 단위 기획이 상당수를 차지하여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 체계가 다소 미비하다는 평가

서울 창업지원시설의 운영 규모에 비해 매출효과가 미미하고, 스타트업의 입주선호도 상대적 저조

- 서울시 총 49개가 운영 중이며, 6천여 기업이 입주하면 매출액은 총 1,400억원(팀당 평균 2400만원)에 그쳐 지속 성장 기업 소수
 - 창업보육센터(25개), 정보교류공간(5개), 시제품제작소(7개), 도전숙(12개) 포함 총 49개이며, 90개로 확충계획
- 민간 코워킹 스페이스에 비해 입지, 관리 및 성과 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어 스타트업들의 입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서울 소재 벤처기업수 전국 2위, SW업종 비중 높고 7년 이상 운영 기업 29%로 성장 여건 청신호

- 총 8,132개로 경기도(10,627개)에 이어 전국 2위, 강남구(1,603개), 금천구(1,213개), 서초구(822개), 구로구(791개) 순으로 분포
- 벤처기업의 업력 분포: 1~3년(24%), 3~5년(21%), 7년 이상(29%)
- 업종 분포: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42.3%(3,443개), 기타 제조업 30.2%, 서비스업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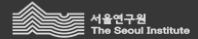
‘혁신에서 성장까지’ 서울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체계 고도화

11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창업: 서울 스타트업 플랜 2.0 추진

서울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체계 질적 고도화 방안

지원체계
재검토

서울시 스타트업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도출

- 창업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정비 및 구체화
- 질적 향상을 위해 스타트업 심사기준 강화, 우수 스타트업 직접 유치 등으로 시장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혁신 청년 스타트업과 소셜벤처를 집중 육성 대상으로 지정

투자환경
강화

서울시 모태 펀드를 확충하여 지역 내 투자 여력 확보, 우수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육성 및 엔젤 캐피탈 활성화

- 모태 펀드의 확충 및 벤처 캐피탈리스트 육성으로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여 유망 기업의 선택과 육성의 효율성 제고

소비시장
환경 조성

창업 기업의 상품 및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교통,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설계에 서울시 스타트업 참여를 촉진하여 정부 구매 시장의 진입 기회 제공
- 〈서울 스타트업 전시회〉 등 소비자 시장에 스타트업의 노출을 확대하여 스타트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

정기 포럼
개최

서울 스타트업 포럼 정기 개최

-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서울 소재 우수 스타트업 소개·홍보 기회 마련하고, 스타트업 간 상호 교류 네트워크 제공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역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 자문

12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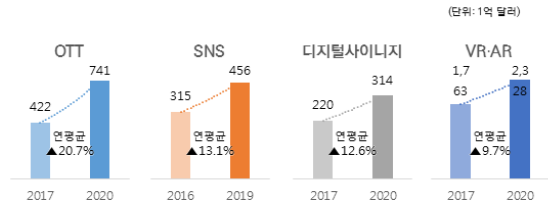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산업: 스마트콘텐츠 산업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1) 스마트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

- 세계 스마트콘텐츠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20.7%, 가상/증강현실(VR/AR) 9.7% 등
- 콘텐츠산업의 중심축이 레거시 콘텐츠에서 스마트콘텐츠로 이동 중
 - SNS, OTT, VR/AR를 통해 시공간이나 기기의 제약 없이 전세계적인 콘텐츠 소비



*OTT - Grand View Research, 2017 *SNS - Statista, 2018
 *디지털미디어 - 미래창조과학부, 2015 *VR-AR - IITP, 2016

2) 서울은 우리나라 스마트콘텐츠의 생산도시

- 콘텐츠산업은 매력적인 청년 일자리를 제공
- 전국 잠재 스마트콘텐츠 관련 산업의 (통계청, 2016, 전국사업체조사)
 - 전국 사업체 수 57,747개, 서울 사업체 수 약 51.1% 9,509개
 - 전체 콘텐츠(C)-네트워크(N)-플랫폼(P)-디바이스(D) 중에서 콘텐츠 비율이 74.9%로 압도적

콘텐츠(C)	콘텐츠 기획, 제작사: 방송, 광고,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교육 등 제작지원 SW
네트워크(N)	통신사(SKT, KT, LGU+)
플랫폼(P)	OTT(넷플릭스, 디아이TV, Tving) SNS(유튜브, 페이스북)
디바이스(D)	스마트TV, PC, 태블릿, 스마트폰 키오스크, VR/AR방

13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산업: 스마트콘텐츠 산업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14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4. 산업: 어반 테크 육성을 통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발굴/사업화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방법론 불명확

-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 미국(NIST 글로벌시티팀 챌린지), 영국(밀턴킨즈시티 데이터 허브), 네덜란드(암스테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싱가포르(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 덴마크(DOLL 리빙랩 프로젝트), 스페인(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의 중요성/필요성 논의는 본격화하였으나 방법론은 다소 모호
 - 2017년 유시티비전의 스마트도시법으로의 개정 시 스마트시티 산업/경제 내용 포함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올해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통해 신성장 견인, 민관협력 공식화한 정책으로의 전환 천명
 - 세종, 부산 등 시범도시 개발 외 다른 방법론/로드맵은 다소 모호

'문제설정'에서 시작하는
상향식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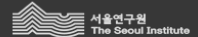
- 스마트시티 산업/경제 육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 개발에 의존
 - 스마트시티조성이 '21세기 최초의 신산업'이 될 것이며, 이 부문에서 향후 40년간 '대고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 민간의 협력을 전제로 시장경제를 통해, 즉 산업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 가능
- 서울시는 의제설정과 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스마트시티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
 - 서울의 고유한 도시문제를 점검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개선에서 스마트시티 논의를 출발하는 정책 방향 제안

15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4. 산업: 어반 테크 육성을 통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발굴/사업화

도시문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어반 테크 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 추진

어반 테크(Urban Tech)
모빌리티, 배달, 코워킹/코리빙(Co-working/Co-living), 자전거/스쿠터, 스마트시티, 부동산, 건설 등의 도시관련 스타트업 활동을 포괄

공론화 과정을
통한 서울시
도시문제 집대성

- **녹서(Green book)-의견수렴-백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에서 출발하는 **스마트시티 전환 녹서/백서** 작성

서울시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발굴과
산업화 유도

- 스마트시티 전환 백서에 기반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의 발굴 및 시행
- 서울시의 제품/서비스 공모, R&D 사업과의 연계, 공공구매/조달 업체 지정 등을 통해 서울시 행정에 우선 적용하여 초기 유효시장 제공을 통한 **어반 테크 기업 육성**

스마트시티
산업/경제를 선도할
혁신지구 조성

- 관련 서울시 지역 및 환경 개선/발전 사업과의 연계 혹은 사업들 간의 결합을 통한 **기존 사업 활용 중심 조성방식** 우선 채택
- 서울시 자체 사업화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지구 내 새로운 실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규제완화 시행**

16

감사합니다



5주제

서울형 지역상생 전략

정희운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민선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제5주제 서울형 지역상생 전략

CONTENTS. 1	추진 필요성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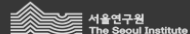


도시경영연구실 정희윤 초빙선임연구위원

CONTENTS. 1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서울시가 왜 지역상생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1)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구과소 지자체 증가 등 농촌살림 난관 및 지역격차 심화 우려

- 초고령사회(65세+ 20% 이상) 진입 기초지자체: 78개/ 228개(전국) (2017년 기준)
- 30년 후 인구소멸위험 수준(지수 0.5 이하) 기초지자체: 85개/ 228개(전국) (2017년 기준)

※ 인구소멸위험지수 = 가입여성(20~39세) 인구수 / 고령(65세 이상) 인구수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 지방정부의 망형, 천만 인구의 배후시장을 가진 서울시의 리더십과 상생지혜 절실

- 지방자치·분권이 시대적 화두이나 이로 인한 지역격차 확산우려도 상존
- 서울 거주시민도 타 지역 태생이거나 타향인 경우가 대다수
- 서울토박이: 4.9% (3대 거주 기준, 2004); 40.3% (15세 이상, 서울태생 기준, 2010)
- 서울 시장수요, 남아도는 일손과 지역의 농번기 일손부족, 유흥자원 연계 등 상생지혜 절실

3) 서울도 지속적인 탈 서울화, 수도권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생방안 모색 필요

- 귀촌·귀농시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서울에 밀집된 혁신(정책)역량을 적극 활용
- 문화·관광·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 지역에 새로운 기회창출 기여

4) 수도권 문제는 교통, 미세먼지, 안전, 주택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이 시급

- 수도권 문제는 공동협력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며, 정치적 기반은 이미 형성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추진 여건 및 현황

1) 서울시는 현재 전국의 50개 지자체와 지역상생교류협약을 체결 (2017년 말 기준)

- 전국의 광역지자체 12개, 기초지자체 38개와 지역상생교류협약을 체결

2) 「서울시 지역상생 기본계획」 수립(2015), 현재 5개 분야의 21개 상생사업을 추진

- 안전한 먹거리 분야 4개, 농어촌 체형, 교류활성화 5개, 유휴자원 발굴 및 협력활용 3개, 도농연계 일자리 창출 2개, 지속적 소통협력체계 구축 6개 사업을 추진

분야	사업	분야	사업
안전한 먹거리 확보	1. 도심형 농부의 시장 운영 활성화	도농연계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14. 도시 중장년층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류협력
	2. 추석 명절 서울장터 운영		15. 귀농·귀촌 확산기대 맞춤형 영농 교육 운영
	3. 지역 간 전통시장 상호협력 및 공동마케팅 추진		16. 지역상생포럼 구성·운영
	4. 김장문화제 참여를 통한 부재료 판로 개척 협력		17. 서울정책 연구프로젝트 운영 활성화
농어촌체험교류 활성화	5. 지역 청소년 간 역사·문화 체험교류	지속적 소통·협력체계 구축	18. 지역 은오프라인 홍보물렛폼 운영
	6. 서울-지역간 문화·예술분야 상호교류		19. 지역 자매·재난복구 및 구호 공동 협력
	7. 어린이 농어촌 체험 및 교유허대		20.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정책 공유
	8.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협력		21. 신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9. 지역 청년 간 상호교류 추진		
유휴자원 발굴 및 협력활용	11. 지역 폐교 활용 자연체험 캠프장 조성·운영		
	12.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13. 지역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 마련		

3)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상생교류센터, '상생상회' 개관 준비

- 서울 종로 을곡로 39번지 안국빌딩 신관에 8월 중 개관 예정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주요 성과

1) 전국 50개(광역 12, 기초 38)와 다양한 분야의 주민체감형 상생교류협력 확산 (2017년 말 기준)

- 민선 5기 이전: 광역지자체 중심의 이벤트성, 단순 교류협력사업
- 민선 5기 이후: 기초지자체 중심의 다양한 5개 분야의 실질적인 주민체감형 교류협력사업

2) 민관거버넌스 구축으로 행정과 민간조직의 소통기능 강화

- 민관협력세미나·박람회 운영: 2015~17, 매년 2회씩 개최로 행정과 민간 간 소통강화
- 권역별 세미나 운영: 2016년 이후 5대 권역별(강원,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세미나 개최로 개선방안 도출
-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발족과 전국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16_43개 조직, '17_53개 조직)

3) 중소 가족농의 농특산물 판로확대: 서로 월장(117개 시군 151개 팀) + 서로 살림 (85개 시군 94개 팀)

〈표〉서로월장 방문자 및 이용자수(명)

년	2016년 (청계광장)				2017년 (광화문광장)				
월	6월	7월	8월	9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방문자(명)	11,500	11,000	4,600	14,600	2,880	7,900	8,500	12,700	10,300
이용자(명)	1,000	1,920	870	1,440	950	1,591	1,718	2,300	1,900

〈표〉서로월장 매출액 (천 원)

※매월 3일 간 1회,혹서·혹한기 제외

년	2016년 (청계광장)				2017년 (광화문광장)				
월	6월	7월	8월	9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매출	26,670	26,380	17,088	29,332	26,215	55,293	60,738	89,245	69,230
총액	99,470				300,729				

4) 도농 일손교류: 4개 시군, 9회 집행, 총 159명 참여(연인원 699명), 교육 및 사업참여

5) 자연체험 캠프장확대(전국 6곳), 체류형 귀농지원사업(5곳), 서울농장 조성사업(3곳) 등 (2017년 기준)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4 주요 한계

1) 기존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기존 사업의 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재점검하고 핵심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 특히 초기단계의 공급자 중심 추진방식과 일부 일방적인 지원 및 시혜성 사업은 재검토 필요

2) 분절된 개별사업 및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미흡

- 개별 단위사업의 추진으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지속가능성도 다소 의문

3) 정책 전 단계(기획, 선정, 집행, 평가, 환류)에서 민간참여 및 활력유도 역부족

- 서울시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과 단순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위탁 방식은 재점검 필요

4) 상시적 협의 창구 및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

- 상시적 협의창구 문제는 8월 중 개관 예정인 '상생상회'의 출범으로 거의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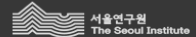
“교류협력의 기본 틀은 조성되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 도출은 초기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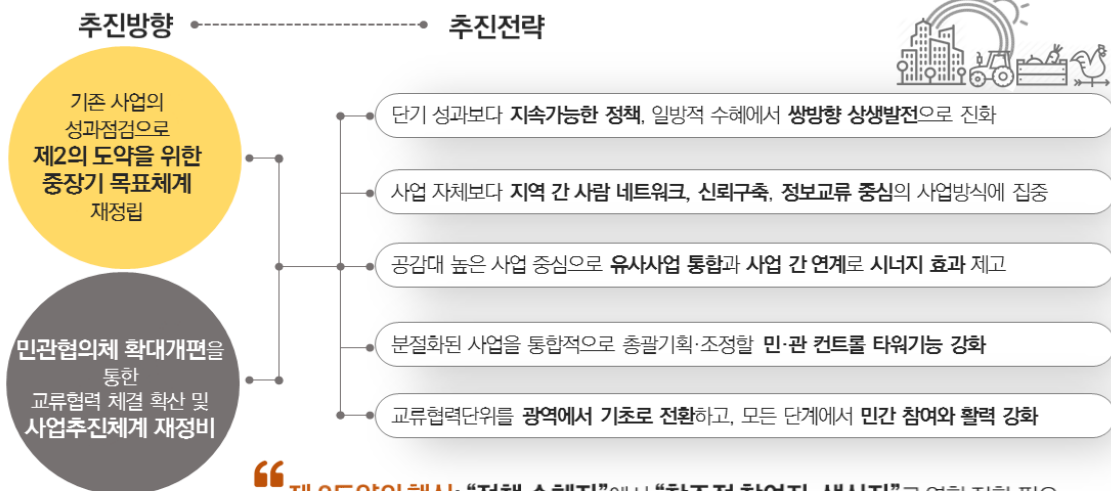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추진 방향과 전략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사업 1

신규

상생사업의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로서 (가칭) '지역상생교류 민·관협의회' 설치

- 상생사업은 다양한 영역 및 이해관계로 단일분야 한정 어렵고 능동적인 유연성이 필수
- 현행 상생사업은 서울시 개별 부서별로 추진되어 민간 활력의 활용과 통합·조정기능 미흡
- 제2의 도약을 위한 단계별 민·관 컨트롤 타워 협의체 구축

- 1단계 상생사업의 조정 및 촉진자로서 민간위탁이나 재단설립, 민·관 네트워크 구축과 실행전략 수립
- 사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27명), 50+ 재단(29명)
- 2단계 별도 예산과 지자체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를 넘어선 법인격 모색
- 3단계 민간과 지자체 출연의 공동 법인체(재단) 설립으로 정부와 민간사업 동시 추진 (예: KOICA)

사업 2

기존

지역상생포럼의 확대 개편을 통한 상호 배움의 장 마련

- 지역상생포럼의 확대개편을 통해 서울시 정책우수사례 발표 및 실무자 토론강화
- 상생사업 중 우수사례 시장 표창, 성공 및 애로요인 집중토론 및 결과반영 의무화

사업 3

신규

유사사업 조정 및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 기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점검과 평가를 통한 유사 사업 재조정 및 사업간 연계 강화
- 공간대 높은 신규,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사업 패키지와 및 정책 브랜드화
- 개별 사업별 참여주제, 참여지역별 민관협력세미나, 권역별 토론회의 연계 강화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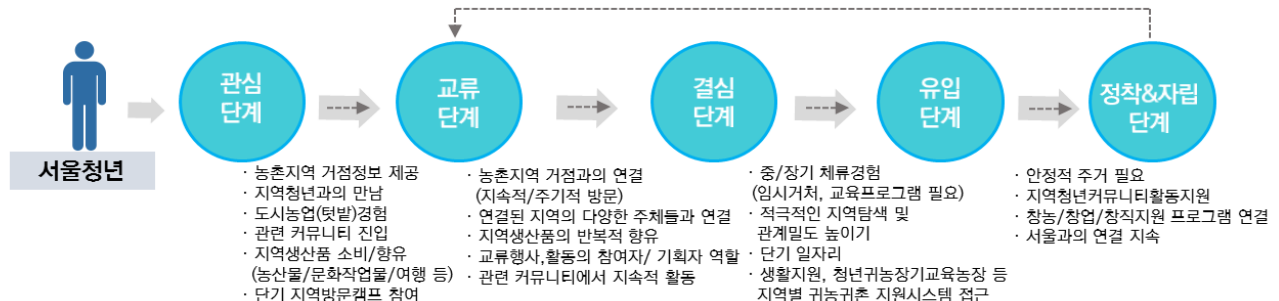
2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사업 4

신규

서울의 청년층 특성을 감안하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한 도농교류 활성화

- 청년기는 당장의 일자리보다 '일-진로' 경험 탐색과 배움의 시기임을 인정
- 뉴욕보다 농촌이 더 낮은 서울청년, 농촌일상 경험, 동기유발 중요
- 청년 귀농귀촌, 도농교류분야 거점역할 모임과 단체들의 안내, 코디네이터 역할을 적극 지원
- 다양한 청년계층 관련 지원정책 사업들과 연계하여 상생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창업농(농식품부), 청년부리단(행정안전부), 기존 농촌청년조직과 연계 등



(그림) 서울청년의 농촌교류/유입 단계와 경험 & 필요지원 (삼선재단, 2017)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3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사업 5

기존

서울시-자치구 합리적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마련

- **서울시 지역상생사업의 추진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 지역상생사업은 대개 소관권역 단위의 기초자치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결하여 사업 추진
 - 서울시상는 정책수립, 예산확보, 모니터링·평가 등 총괄 기획과 자치구 간 경쟁유도 및 지원 집중
 - 실질적 사업은 자치구와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역할 분담체계 마련

사업 6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을 통한 상생재원의 안정적 제도화

- 수도권 지역의 '교육비 특별회계' 및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조정**
 - 현재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 이를 세입으로 간주,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은 이중징수 없이 발생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미발생 수입으로 처리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규모 산정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융자관리계정' 활성화**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만료되는 2019년에 기금이 소진, 융자관리계정의 활성화가 필요
 - ①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서울시에 대한 융자관리계정 활용방안과 ② 권역별 가중치 조정 후 확대되는 수도권 지방소비세분을 융자관리계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 권역별 가중치 조정 시, 발전기금 출연의 적정규모는 40~45%까지 출연비율의 확대 가능 추정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 방안 마련**
 -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절차 및 방법 미흡
 - 성과분석의 가이드라인, 성과분석 규정 및 추진주체 구성, 평가지표 개발과 피드백 과정 도입
-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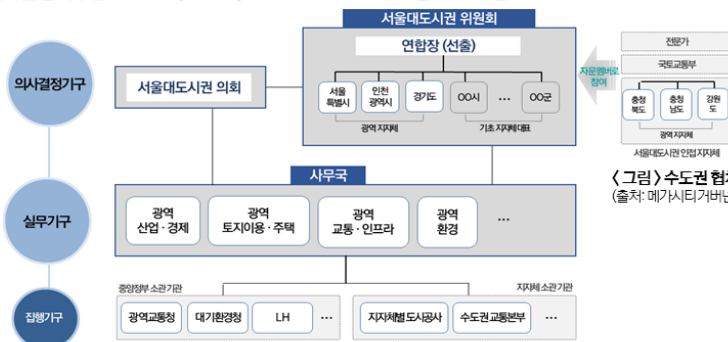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사업 7

신규

수도권 상설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도권 지역상생 도모

- 수도권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공동운명체 (교통, 미세먼지, 안전, 주택 등)
- 수도권 지자체가 늘 협력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 구성, 공동협력 방안 모색
 - 상설협의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 가능
 - 설치 절차 및 운영 등의 사항이 담긴 대통령령 규정이 부재 (지방자치법령 개정 필요)
- 이의결정기구인 '위원회', '의회', 실무기구인 '사무국' 등으로 구성



감사합니다



6주제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 방안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민선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제6주제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 방안

CONTENTS. 1	추진 필요성
CONTENTS. 2	추진 여건 및 현황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CONTENTS. 1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이점

(내적 통합)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기여

(내적 통합) 통일정책에 대한 공론과 합의를 크게 형성시킬 수 있음

(사업 실효성) 국제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일정부분 자유롭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

(사업 실효성)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남-북한 간, 그리고 북한 내 지역경제 격차 해소에 도움

(사업 실효성) 자체예산으로 민간단체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CONTENT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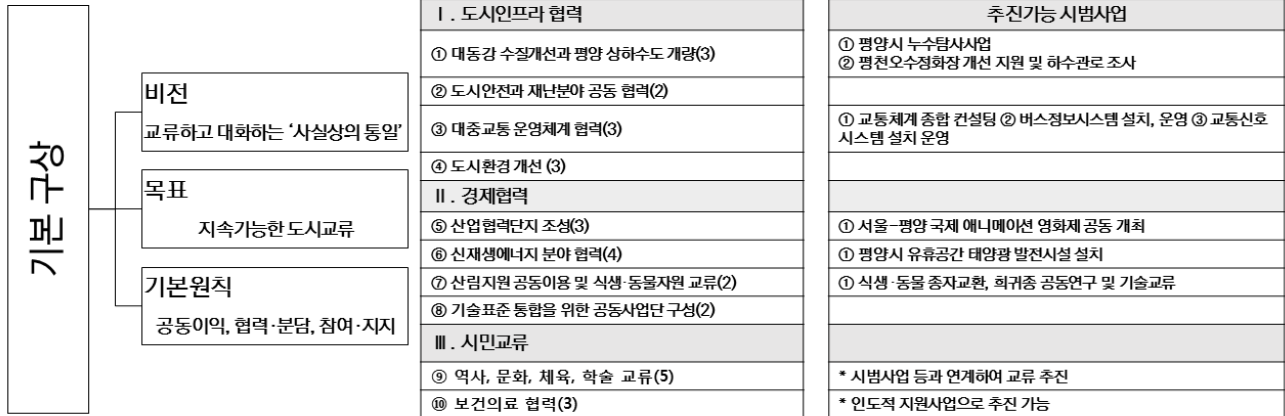
추진 필요성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사업

(2016년)



3

CONTENTS. 2

추진 여건과 현황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기존 여건과 상황		2018년 여건과 상황	추세
외부 요소	남북 관계	- 5·24조치로 남북교류협력 거의 중단	○
	북미 관계	- 적대 관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최대 압박' 정책	△
	미중 관계	- 미중 경쟁 구도 형성,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배후론' 제기 - 무역 전쟁의 부정적 영향 받고 있음	X
	대북 제재	- 대북제재 강화	X
내부 요소	제도 기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주도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제한	X
	지자체 역할	-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라는 인식 미비	○
	여론	- 북한을 적대국으로 인식	○

※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와 분위기는 형성됨
 ※ 관련 국가간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당장 해제되기는 어려움
 ※ 지자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되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4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따른 선별적·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북한의 정치 체제 고려,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과 연구 지양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계획 및 추진



남북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다자협력 관계 구축



지자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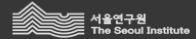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혹은 시민 참여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및 추진

5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따른 선별적·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분야
 - 문화·체육 교류
 -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에 부합
 - : 국제대회 및 행사 우선
 - 인도주의 지원
 - : 임신부와 수유여성,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 및 의료 지원
 - : 북한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 비영리 공공 인프라 사업
 - : 2375호 18항에서 규정
 - :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 하에 합작투자 회사 또는 협력회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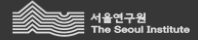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사전 승인 필요

6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2 북한의 정치 체제 고려,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과 연구 지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
 - (제17조)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역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유형
 - 인도주의적 지원 : 긴급구호, 개발구호, 개발지원
 - 사회문화 교류 : 학술, 언론, 관광, 종교, 체육 등
 - 농·축·산림 분야 협력

3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계획 및 추진

- 일방주의가 아닌 쌍방의 이익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
 - 남한의 경험과 기술 전수 및 투자에 앞서 북한의 상황에 맞는 연구와 사업 구상이 우선적으로 필요
 - 남북한 간에 협상에 의해,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 시찰'과 '공동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음
 - ※ 1990년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공히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 합의가 북한 체제 특성 감안과 상호주의 원칙을 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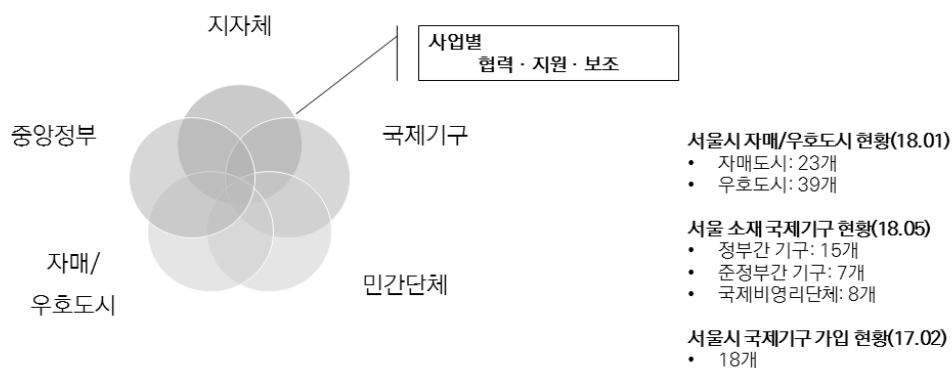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4 남북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8

CONTENTS. 3

추진 방향 및 전략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5

지자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존 법률 검토 및 개정 필요

: 2009년 12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제12조(교역당사자 등) 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됨

제한 현황	조항	내용
	제2조	협력사업 주체로 남북한 주민(법인과 단체 포함)을 명시, 지자체 빠짐
	제5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시 지자체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지자체와 협의 규정 미비
	제13조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제14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자체 관계자 미포함
	제17조	(모든)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제25조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전문가 및 유경험자와 협조라고만 명시

6

시민 참여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 남북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 북한 관련 행사

9

CONTENTS. 4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



(新)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업			통일기반 사업
분야	우선 과제	중·장기 과제	상시 과제
시민교류	① 경평축구 ② 제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 ③ 서울-평양교향악단 협연 ④ 보건의료 협력 : 평양시 결핵관리 역량 제고 : 영·유아 건강 지원 :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 ⑤ 서울-평양 학술교류	① 언론·미디어 분야 교류 ② 문화재 세계유산 공동 등재	①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 대북 관련 민간단체 지원 : 서울시 자매/우호도시들과 협력 : 도시 단위 국제기구 활용
경제협력	① 식생·동물 종자교환 ② 회귀중 공동연구 ③ 양묘장 현대화 사업	① 산업협력단지 조성 : 서울-평양 국제 영화제 개최 :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및 마케팅 협력 ②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③ 산림자원 공동이용, 탄소배출권 확보 ④ 기술표준 통합 공동사업단 구성	② 시민 참여 다양한 사회문화 행사 개최 : (통일교육권 연계) 시민 대상 통일 교육 : 통일과 평화 주제 음악회, 전시회 : 의견 수렴 온라인플랫폼 구축
도시인프라 협력	① 대동강 수질개선 ② 평양 상하수도 개량 ③ 재난·안전분야 교류	① 재난대비 장비 및 관리시스템 지원 ②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지원 : 버스정보/교통신호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③ 도시환경 개선 : 평양형 시민주택 모델 개발 등	③ 국내·외 학술대회/포럼 개최 : 서울평화포럼 :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④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⑤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10

감사합니다



2부 토론

“서울의 새로운 성장과 혁신 방안”

4주제 토론문 1

남기범(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1. 글로벌 시티 서울의 강점과 약점, 잠재력

- 산업의 광역적 연계발전과 공간분업으로 인한 제조업기반의 약화와 이로 인한 4차산업혁명을 위한 융합자원의 약화
- 도심(산업)지역과 비도심지역, 강남과 강북지역간 격차의 심화
- 비즈니스 서비스보다는 소비자서비스의 급속한 성장
- 집적-학습-혁신이라는 대도시의 잠재력을 풍부하게 보유
- ICT, bio 등의 세계적 대기업과 연구개발기능 등 글로벌 혁신 잠재력 보유
- 창업, 창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과 인프라의 보유
- 글로벌 인재의 순환(circulation)과정에 이의 유치를 위한 문화, 사회, 지역공동체의 인프라 보유

2. 서울의 혁신성장 방향

- 지역산업혁신생태계(RIS)에서 장소산업혁신생태계(LIS)로: 서울과 수도권의 풍부한 자원은 주요한 경제와 산업혁신의 공통재(common)로 작동, 하지만 혁신성장의 추동력은 광역적이기 보다는 국지적으로 형성됨
 - 다양한 규모와 특성의 혁신지구의 조성, 지원, 연계의 필요 [선택과 집중에서 탈피]
 - 혁신지구는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의 생활과 문화의 중심이 되며, 기술과 사회 자본(신뢰와 협력)축적의 기반
 - 혁신지구는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의 중심역할을 담당
 - 혁신지구에서 신생기업의 창출과 이에 따른 인구의 인접거주를 통해 사회적 역량과 지역의 상호작용의 증추역할
 - 혁신지구는 긍정적 기술혁신, 디자인, 관리시스템, 신상품의 개발, 노동력의 유연성과 창조성, 상품유통 등의 외부효과를 통해 도시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
- 현대 산업공간 변화의 키워드는 ‘공유-소통-협업-융합-창조’를 통한 지역경제의 재편
 - 혁신지구의 리더십은 일반 조직의 리더십과는 다른, 비위계적(non-hierarchical 혹은 heterorarchial) 특성과 산업지구 내외부의 활동주체와의 협상(negotiation)에 기반을 두고 발전
 - 기존의 정부주도의 기획-계획-실행-평가-환류의 과정을 어느 정도 민간에게 이양하는 분배적 리더십이 필요
- 혁신공간의 다양성
 - 다양한 유형의 혁신지구를 구축, 개방형 혁신을 통한 혁신기반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계획 필요
 - Brown field의 활용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혁신은 경제, 산업만이 아닌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사회문화적 과정
 - 다양한 외국의 인재를 수용하는 고급인력 다문화 풀의 조성과 지원
 - art & culture tech 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화와 세계시민교육
 - 뉴욕의 사례처럼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 제도화지원 --> 대중패션브랜드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의 유입으로 이어짐
 - 서울문화테크의 다문화와 혁신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필요 --> brain circulation 의 핵심 노드를 지향

4주제 토론문 2

김경탁(서울시 경제정책과장)

■ 왜 혁신성장인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전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미국, 일본 등은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국내기업의 자국 이전(Reshoring)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두뇌 유출지수는 2013년 세계 37위에서 2017년 54위로 하락하였음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新산업 출현으로 일자리가 변화하고, 승자독식에 따라 기존 대기업·수출 중심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은 한계에 직면함.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일자리 710만개가 감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200만개 생성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서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서울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서울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서울 미래 혁신성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8.1.31. 발표하였음

■ 서울 혁신성장의 방향

미래 가장 큰 기회는 사람에 대한 투자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른 분야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융복합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다음으로, 서울이 가진 잠재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트렌드, 성장성, 산업경쟁력, 좋은 일자리 등을 기준으로 'R&D, 바이오 의료, 문화콘텐츠, 도심제조' 등 서울형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산업 거점을 확충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소공인 등 각 경제주체 간 혁신역량을 결집해야 함

또한 고학력·우수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담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공간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자금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창업도전을 장려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을 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미국의 대학생은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10%가 실제 창업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은 3%가 창업을 생각하고 0.1%만이 창업을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서울의 혁신 성과를 지방과 공유하고, 인재교류, 공동 R&D 등 상생 발전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발전이라 볼 수 있음

■ 혁신성장 정책비전 및 목표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혁신기반 조성을 통해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Weconomics’를 실현하고자 함.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도심제조 활력도시’, ‘바이오의료 벤처도시’, ‘글로벌 R&D 허브도시’, ‘문화콘텐츠 융성도시’ 등 4개 프로젝트와 4차 산업혁명 혁신기반 조성 관련 ‘혁신창업 진화도시’, ‘테스트베드 도시’ 등 2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서울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3조 4천 4백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시비 약 1조 4천억원)으로, 2022년까지 약 6만 2천여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주요내용

첫째, ‘도심제조 활력도시’ 프로젝트

서울에는 의류봉제, 수제화, 주얼리, 인쇄 등 소공인 집적지 149개, 도심제조업 30만 종사자가 있으나, 낙후된 작업환경과 분절화된 개별 생산 방식으로 일자리가 점차 감소하고 사양화될 위기에 처해 있음

열악한 도시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IoT, 빅데이터, ERP솔루션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생산 환경 혁신과 소공인간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소공인 집적지 내 스마트앵커(스마트팩토리)를 20개소 건립·운영할 계획임. 또한, 동대문 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내 서울패션혁신허브를 건립하여 전문 패션스쿨 운영, 디자이너-제조 연계, 패션산업 테스트베드 및 판매유통을 지원하는 한편 메이드인 서울 브랜드 도입을 통해 서울산 고품질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고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둘째, ‘바이오 의료 벤처도시’ 프로젝트

바이오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반도체, 자동차산업을 뛰어넘는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산업('15년 기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15,988억\$, 반도체 3,254억\$, 자동차 7,535억\$)이며, 서울은 신약개발 임상시험 세계 1위, Big5 병원 소재로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서울시는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舊)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 내 서울바이오허브를 건립·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BT-IT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등 공공 선도 앵커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바이오 기업·연구소 입주공간 200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공용연구장비 150여종 도입, 제2호 서울바이오펀드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동북부 320만 인구의 중심지인 창동·상계 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ICT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홍릉 바이오 R&D 클러스터의 배후 단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셋째, ‘글로벌 R&D 허브도시’ 프로젝트

서울에는 56개 대학교와 전국 대비 약 28%의 연구소가 집중되어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가 용이하고, R&D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는 양재 R&D 클러스터는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에 뉴욕 루즈벨트아일랜드 방식의 스마트캠퍼스(192,570㎡)를 조성하고, 2017년 개관한 양재 R&D 혁신 허브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에 특화된 글로벌 인재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 마곡 산업단지에는 부지 총 11만㎡(전체의 14%)에 중소·벤처대기업 지원시설 17개소(공공산업지원시설 1개소, 지식산업센터 15개소, 도전숙 1개소)를 건립하여 강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G밸리에 IoT 융복합 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문화복지시설 확충,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 성장거점으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융합형·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AI, 빅데이터, IoT, 바이오,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1,000명, 채용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인재 5,000명을 양성할 계획임

넷째, ‘문화콘텐츠 융성도시’ 프로젝트

서울은 전국 대비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약 50%, 사업체 32%가 집중되어 있어 탁월한 시장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VR, AR 등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연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애니콘텐츠 팩토리 조성,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축제 개최 등을 통해 남산 일대를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명소로 조성하고, 상암 DMC를 5G, AR/VR, 디지털사이니지 중심의 융합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게임/애니메이션 등 유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 펀드 1,000억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임

다섯째, ‘혁신창업 친화도시’ 프로젝트

서울시는 2017년 6월 개관한 서울창업허브 등 업종별, 기능별 창업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매년 1,000개의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으나, 창업실패는 곧 신용불량이라는 인식과 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고학력 인재의 창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음. 특화 창업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청년,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성장지원과 창업 안전망 제공을 통한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창업지원시설을 2017년 기준 48개에서 2022년 90개로 대폭 확충함으로써 연간 1,6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플랫폼인 캠퍼스타운을 2018년 17개에서 2025년 60개로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향후 5년간 민·관 협력의 혁신성장 펀드를 1조 원 조성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창업지원 및 주거편의 제공 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노력할 것임

여섯째, ‘테스트베드 도시’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독식의 체제에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만이 유효하며, 신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해서는 서울 같은 대도시의 테스트베드화가 필요함. 특히 서울은 뛰어난 IT인프라와 최신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가 많은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음.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서울글로벌챌린지’ 개최,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이 포함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기회 제공, 도심지역 일반도로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등 혁신기술이 상용화 되는 테스트베드 도시 조성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서울 혁신성장 프로젝트 성과 제고방안

민선 7기 핵심 추진과제인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투자 및 부지교환, 규제 완화 등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소, 기업 등 민간부문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함. 아울러, 혁신성장 정책방향 결정 및 자문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서울미래혁신재단 설립 등 지속가능한 실행체계 마련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됨

5주제 토론문 1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먼저 서울시의 지역상생 정책의 필요성, 추진방향과 제안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견을 보낸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선6기 시절부터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미 50여개의 자치단체와 지역상생 교류 사업을 체결했고, 5개 분야 21개 상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안테나숍과 같은 지역상생교류센터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1. 지역상생 발전의 추진배경

소위 지역상생은 복수의 지역 간에 상호이익을 발생시키며 진화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이 변화와 진화과정을 '지역 간 상생발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상생이 필요한 이유는 GDP와 신자유주의의 환상에 빠져 나타난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갈등과 분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치단체 소멸론 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촌 등 심화되어 가는 지역 간 양극화 격차 극복과 동시에 인구 1,000만 인구에 기반한 구매력에 대한 기대, 서울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욕구 등 상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호혜적인 새로운 상생발전의 모델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지방분권의 심화, 자원의 절약과 비용절감, 도시기능의 확산과 행복전환 등의 추세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생협력 사업과제에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국가의 무관심과 발상의 전환이 불가능한 집권주의에 찌든 관료들의 생각 때문일 것이다. 보다 심각한 상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4단체 전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자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상호교류, 정책공유 및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 서울시 상생협력 정책의 한계

상생교류 협력사업은 시민편익과 신뢰협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현해야 하고, 시민편익은 공동 사회(좋은사회)이론, 교환이론 등을 통해 편익 증진을 위한 교환가치 극대화의 과정 속에서 발현된다. 그리고 신뢰협력은 상생협력, 민관협력, 네트워크 이론 등을 통해 상호신뢰에 입각한 협력과 도농 상생, 민관협력의 기제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생교류 사업은 참여하는 지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동시에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지역 간에 고립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상호 차별적 특성이 확보되어 상보적, 분업적, 자율적으로 생산적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정책사업인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상생사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관 주도 서울 의존성 프로그램 및 민간단체 참여 저조
- 정책 간 유기적 관련성 및 시너지 효과 미흡
- 가시적 단편적인 교류사업 및 사업의 지속성 부족
-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일부 자치단체 편중 및 담당자의 잦은 전보

3. 상생협력사업의 원칙

- 지역에 대한 심층적 이해 선행
- 지역에 대한 시혜적 접근 지양
- 중앙정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모색
- 사업들 간의 중첩부문 지속적 관찰, 사업간 융합 모색
- 각 정책의 세밀한 로드맵 마련,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점진적 확대
- 사업집행 과정의 관리 필요, 적절한 환류체계 구축
- 일회적, 단편적 교류협력 사업의 한계 극복
-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협력모델을 구축 필요

4. 기존사업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상생사업을 위한 신규사업 적극 실현

기존사업을 더욱 정교화하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상생사업의 실현을 위한 발제문에서 제시한 신규제안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간의 MOU 체결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쌍방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 상생사업의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로서 (가칭)‘지역상생교류민관협의회’ 설치
- 서울의 청년층 특성을 감안하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한 도농교류 활성화
- 수도권 상설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도권 지역상생 도모

특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는데, 역발상으로 농촌재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 문제와 농촌 활력과 식량자급을 확보 등의 해결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지역 간 상생 외국사례

유럽연합의 경우 지역 간 협력사업을 거시적인 지역정책의 틀 안에서 운용함으로써 전체 공간정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정책 프로그램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개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NTERREG IVC는 유럽 전역의 지역 간 협력을 위해 유럽 지역개발기금(ERDF)을 통해 유럽공동체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INTERREG IVC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은 지역 정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및 자본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프로젝트는 이상적으로 로컬 및 지역 정책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및 관계자들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주제별 워크숍, 세미나, 회의, 설문 조사 및 연구 방문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분야는 혁신과 지식 경제, 환경 및 위험 예방 등이다.

일본의 자치단체 간 협력은 환경, 자연자원, 역사, 문화자원, 공공시설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력이 용이한 작은 사업에서부터 확대해 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추진할 때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은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역사·문화·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배려한다는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한다.

日 각 지방의 매력을 발산하는 시부야 히카리에 'd47 MUSEUM'

도쿄 시부야의 복합시설 '시부야 히카리에'(渋谷ヒカリエ)의 크리에이티브 공간 '하치'에 위치한 박물관과 샵, 식당이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d47 MUSEUM'은 가로세로 90cm 크기의 테이블 47개 위에 각 도도부현의 장인들이 만든 상품을 진열함. '지방 맥주' '액세서리' 등과 같이 약 2개월 단위로 테마를 결정, 47개 테이블을 한번 돌고 나면 현재 일본의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일본의 제조문화)를 알 수 있도록 구성.

'd47 식당'은 각 지방의 제철 식재료로 만든 정식을 제공
d47 design travel store'는 전국 각지의 걸작품을 판매한다.



시부야 복합시설 '히카리에'(ヒカリエ) 'd47 MUSEUM' 전경

<http://www.hikarie8.com/d47museum/about.shtml>

영국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지역파트너십 등 15개에 달하는 파트너들이 템즈강 관문지역 전략파트너십(TGSP)이라는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보다 작은 단위에서도 기초자치단체들과 대학,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파트너십을 구성해 중층적 구조의 파트너십 등을 형성하고 있다.

5주제 토론문 2

김규룡(서울시 대외협력담당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농촌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 등 대도시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상생에 대한 필요성과 책임감을 일찍부터 인식, 서울과 지역이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보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상생 시행계획을 2013년부터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그간 추진사업에 기반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을 규명하고 서울과 지역이 상생발전 공동체로 발전해 나감을 천명하는 상생공동선언을 한 바 있음.

그간 서울시는 교류협약 지자체 확대(총50개 지자체) 및 민관거버넌스 등 지역과 협력기반 구축을 확대하고, 5개 분야 21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 지역자원 활용, 일손교류 등 서울과 지역이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상생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며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민선7기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아서는 기존의 지역상생사업과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목표를 재정립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통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특화하며, 추진체계의 개편을 통한 민간과의 소통 등 강화가 필요할 것임.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서울형 상생전략'에서 제안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쌍방향 사업으로 진화, 사람과 정보의 교류협력 및 공감대 확산, 사업간 통폐합 및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함.

제안내용 중, 지역상생 민관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시민, 지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 전단계에 민간의 요구가 반영되는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임.

또한 기존 지역상생포럼을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며, 우호교류 협약 체결 단체장 및 지역상생분야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상생교류대회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음.

특히, 지역의 공간에서 청년이 활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하여 지역상생을 통해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해소와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대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임.

현재 민선7개 지역상생교류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 및 공공급식, 캠핑장 조성 등 지역에 도움이 되고 서울시민에게도 혜택이 되는 서울과 지역

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사업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 최종 논의를 거쳐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지역상생 발전기금 개선을 통한 상생재원 안정화 방안의 경우, 우리시 지역상생사업의 직접재원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하는 부분은 지역별로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논의가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임.

실질적인 동일 생활권인 수도권은 도시 문제 등 공동협력을 위해 그 협의체가 필요함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지자체별 이해관계 및 정치적 여건이 달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제안내용인 자체 조직·재원·권한을 가진 상설협의체의 구성·운영은 법률 불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그 전에 각 도시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사업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의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3개 시도 실무자 협의 진행중임.

※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규정은 있으나, 설치·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 미규정

6주제 토론문 1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1.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업의 의미

- 2016년 11월 서울-평양 포괄 도시교류 구상을 발표했을 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논평을 한 바 있음.
 - 한반도 남북관계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간 교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특히 인적, 물적 교류만이 아니라 지식, 시스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했던 남북협력사업과 차별성이 있고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킬 수 있음.
 - 「서울-평양 도시교류」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 이에 따라 위 구상에서도 “학술교류-시범사업-본격적 협력”이라는 실행전략을 제시했음. 그런데 초기 학술교류만으로 교류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 그리고 각 사업 영역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되어 있지 않음.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거나 북한과 평양시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실행할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임. 예를 들면 역사문화체육 교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보건의료 교류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선행하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특히 조기수확(early harvest) 사업 목록을 정해둘 필요가 있을 것임.
 -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이 필요. 남북교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북교류가 국제협력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왔음. 위 구상 중 도시 안전과 재난 분야는 국제협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영역. 장기적으로는 서울, 평양, 베이징, 도쿄 사이의 교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동북아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 더 나아가 서울, 평양을 중심으로 한반도 서부 도시들과 중국의 동북 연안 도시, 그리고 일본의 큐슈 지역까지 포괄하는 ‘환황해도시네트워크’ 형성까지 전망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이민규 박사의 발표는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기존 구상을 보완하고 구체화시키는 의미가 있음. 특히 위의 논평 중 두 번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현재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이를 중심으로 논의의 진전과 구상의 실행을 위한 논평과 추가적 제안을 하고자함.

2. 정세변화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접근

-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극적인 전환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 대체로 북미 및 남북 관계가 급진전했을 때와는 달리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민규 박사의 발표문은 이와 관련해 내외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잘 정리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 구상의 실행방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재 여러 문제들이 상황을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과정에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 태도도 필요. 즉 정세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될 경우는 물론이고, 북미대화 등이 일시적 교착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남북협력의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를 추동하는 발상이 필요함.

- 여러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실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극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교착-진전-교착’의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이 더 높음. 이 경우 남북협력은 교착 국면을 진전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진전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가 더 안정될 수 있는 제도적·물질적 기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 미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작업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이 점에서 보면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 직후의 긍정적 국면을 남북관계 진전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서울시도 정세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경우 서울-평양 협력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

3. 조기 수확(early harvest)을 위한 사업

- UN에 의한 대북제재가 남북협력 및 서울-평양 교류협력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 그렇지만 과거 대북제재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재결의의 내용이 확대 해석되어 왔음.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동시에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음. 이민규 박사도 대북제재 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 목록을 제시하고 있음. 그밖에도 북한 관광도 그 자체가 대북제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즉 대북제재 하에서 실행 가능한 교류협력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해 조기 수확 교류사업의 목록을 더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 이벤트성 교류나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협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임. 따라서 실질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안.
 -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보건의료협력)과 문화체육교류를 병행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가는 단계적 사업 추진. 후자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산림협력의 조기 추진 모색.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저감 대책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음. 대북제재의 완화에 발맞추어 애니메이션, IT 영역에서의 공동사업을 추진.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계획이 필요. 일차적으로 8.15에서 10.4 사이의 적절한 계기를 활용한 교류협력 추진계획을 수립.

4. 국제협력으로의 확장

- 북한이 대외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황에서 서울-평양 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북중관계, 북일관계의 변화는 동북아 도시협력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음. 첫째, 서울-평양-베이징 교류사업을 우선 모색하고 여기에 일본 도쿄, 몽골 울란바토르를 포함시키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둘째, 서울-평양-신의주/단동-선양 등을 연계시키는 도시협력을 추진하고 한반도-동북아 철도·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새로운 동력 제공. 이를 기초로 관광협력 등 교통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

6주제 토론문 2

김규룡(서울시 대외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축인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기반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남북 지방 간 교류를 선도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여 서울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변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판문점선언」(18.04.27.)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18.06.12.)이 열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있음.
 - 정부는 합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남북협치, 국민적 합의 강화와 국제사회 지지 확대를 위해 노력
- 「판문점선언」에서 정부, 정당, 국회,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공동행사와 다방면의 교류를 명시하고 있고,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역할이 제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사업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자체 교류를 포함한 남북 민간교류 분야는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협력 및 민족동질성 회복 사업 등을 추진하되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 논의 상황 등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속해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이어짐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은 지속해서 유지될 전망
 - 7.27.(정전협정 65주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8.10.~8.12. 서울), 아시아경기대회(8.18~9.2. 자카르타), 이산가족상봉(8.20.~26. 금강산), 9.9(북한정권수립일, 9.9.~9.30. 새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공연), UN총회(9.18.~30. 뉴욕), 10.4행사와 북측 예술단 방남 공연과 통일농구대회(서울, 가을), 제5차 남북정상회담(평양), 3.1운동 100주년(19.3.1.), 판문점선언 1주년(19.4.27.) 등
 - * 도쿄하계올림픽(2020년), 베이징동계올림픽(2022년) 등 2년 마다 동북아 주요 국가의 수도에서 국제체육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도쿄하계올림픽에서의 동경시와 협의하여 우리 시 역할 발굴 필요
- 서울시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가 병존하는 국면에서 인적교류 중심의 체육·문화·학술 분야 사업의 우선 추진을 통한 도시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산림녹화(조경, 녹지 등) 사업, 경평축구 등 체육교류 사업, 서울시향 교류 등 문화교류 사업, 도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 등의 교류분야 우선 추진 계획.

- 우리 시는 북측과 접촉한 민간단체들을 통해 체육·문화 등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
 - 또한, 사회문화분야는 북측 민화협, 경제협력분야는 민경련 등 다양한 접촉선을 발굴·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서울시의 교류협력사업 의제들은 일회성 교류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시기도래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 향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경제협력, 생태, 환경, 에너지 등 서울-평양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 할 계획임
-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참여형 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
 - 최근 북측이 「기술과 과학」을 강조하는 추세를 감안, 남북관계 진전 시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으로 각 분야별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사업 또한 차분하게 준비할 계획임.
- * 올해 6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북경 방문 당시 참관지를 통해 북측이 관심 있는 분야를 추측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시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야임.
-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 : 도시농업연구센터, 현대농업기술종합전시센터, 잎남 새재배기술연구센터 등
 - 베이징시 궈도교통지휘센터 등 경제현장 : 베이징시 지하철 운영 실태와 발전 전망 등을 요해하고, 「자동화 수준이 높고 통합조종체계가 훌륭히 구축된데 대하여 경탄하게 된다」라고 발언
-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선7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음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2018. 7. 19
서울연구원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일 시: 2018년 7월 19일(목) 14:00

장 소: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본 자료는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2018. 7. 19) 자료입니다.



행사 개요

- 일시: 2018년 7월 19일(목) 14:00
- 장소: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주최: 서울연구원
- 후원: 서울특별시

행사 계획

13:30~14:00		등록	
14:00~14:30		개회사	서왕진(서울연구원 원장)
		축사	신원철(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윤준병(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14:30~14:45		민선7기 시정운영 여건과 기본방향	발표 : 라도삼(전략연구실장)
14:45~18:00		중점 추진과제 제안 및 토론	
1부	14:45~15:00	(1주제) 서울시 보행도시 추진전략	발표 : 이신해(교통시스템연구실)
	15:00~15:15	(2주제) 미세먼지 대응 대기질 개선방안	발표 : 최유진(안전환경연구실)
	15:15~15:30	(3주제) 온종일 돌봄 방안과 추진전략	발표 : 이혜숙(도시사회연구실장)
	15:30~16:15	1부 토론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질 개선 방안”	
		좌장 : 김경희(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백운석(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장) 장영기(수원대학교 교수), 권민(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장) 송지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은영(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6:15~16:30		휴식	
2부	16:30~16:45	(4주제) 서울형 혁신성장 추진방안	발표 : 김목한(시민경제연구실장)
	16:45~17:00	(5주제) 서울형 지역상생 전략	발표 : 정희윤(도시경영연구실)
	17:00~17:15	(6주제)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 방안	발표 : 이민규(도시외교연구센터)
	17:15~18:00	2부 토론 “서울의 새로운 성장과 협력 방안”	
		좌장 : 변창흠(세종대학교 교수)	
		토론 : 남기범(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경탁(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장)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규룡(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18:00		폐회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 목차

I. 민선 7기 시정운영 여건과 운영전략	3
II. 6대 중점 추진과제	21
III. 분야별 추진과제	51

I. 민선 7기 시정운영 여건과 운영전략

I. 민선 7기 시정운영 여건과 운영전략

1-1. 시정 여건

■ 정치적 환경

- 서울시 최초 3선 시장, “이제는 확실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때”
 - 2012년 보궐선거로 출발한 박원순 시장은 3선을 끝으로 2022년 종료 예정
 - 때문에 민선 7기는 민선 5~6기 시정 전반을 혁신하고자 했던 전환의 성과를 창출하고, 민선 7기 이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
 - ⇒ 확실한 성과 창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 동의 확보 필요

〈표〉 민선 5~7기 시정운영 방향 비교(안)

시정방향	기본방향	추진사업
민선 5기(시정방향 전환)	신자유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마을, 공유도시,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청년허브 등
민선 6기(시정가치 확산)	시정 내 공동체적 가치의 확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협치, 원전하나줄이기, 서울형 도시재생, 사회주택 확산, 50+세대 출발 등
민선 7기(시정성과 창출)	시민체감 강화	시정전환에 대한 시민 동의 확보로 지속적인 시정혁신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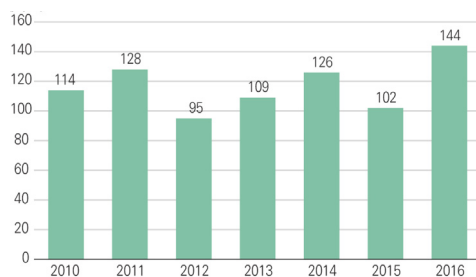
- 시의회, 자치구, 수도권 모두 같은 당, “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기반 형성”
 - 2018.6.13. 지방선거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 차지
 - (시의회 구성) 92.3%가 여당 소속(총 의원 수 110명 중 102명)으로 안정적 시정운영 기반 마련
 - (자치구 구성) 1개구를 제외하고 24개 구가 같은 당으로 구성, 자치구와 협력 기반 강화
 - (수도권 구성) 서울, 경기, 인천 등 모두 같은 당으로 구성, 수도권 문제에 공동협력 기반 형성
 - 성과 창출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형성했으나, 부담 또한 큰 것이 현실
 - 시의회-자치구-수도권 모두 같은 당으로 이루어진 만큼 최적의 협력기반 형성
 - 이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적절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나, 지자체 간 경쟁 및 자기중심적 사고로 성과 창출이 위협받을 수 있는 환경도 내포
- 협력과 협치를 통한 공동의 노력만이 답, “광역행정체계 구상 필요”
 - 상호 소통이 잘 되는 환경을 갖춘 만큼,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시의회-자치구 등과 더불어 수도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협력체 구상도 필요
 - 박원순 시장, ‘수도권상설협의회 구성해 교통·미세먼지 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혀(경향 6.19.)

■ 정책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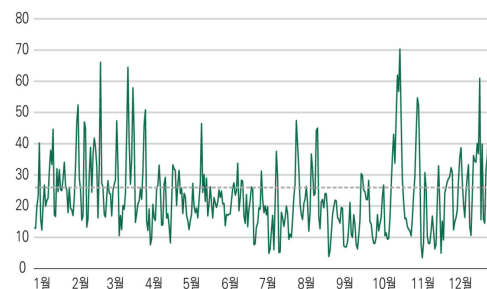
- 급격한 남북교류협력 시대 … 서울-평양을 비롯,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주요 이슈로 등장
 - 남북정상회담(18.4.27.)과 북미정상회담(18.6.12.)을 계기로 급격한 북한개방과 남북화해협력 분위기 형성

- 유엔 제재 해소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이 본격 물꼬를 틀며, 서울 또한 평양 간 도시교류를 포함해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전망
- 서울시는 이미 광복절 ‘경평 축구대회’ 개최 및 2019년 전국체전 남북공동개최를 요청한 상태
- 또한, 체계적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현 남북협력팀을 <남북교류협력담당관>(4급)으로 승격하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남북교류 사업 추진을 준비 중
- 이에 남북교류협력 체계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 필요
- **거세지는 사회갈등과 세대교체 양상 ... 시민의제에 대한 주목과 적절한 대응 필요**
 - Me Too 운동과 더불어 촉발된 자기권리 운동은 일상적인 폭력구조에 대한 고발을 넘어 세대교체로 나아가는 중
 - ‘몰카 편파수사’에 대항하는 1~2차 대학로 집회를 통해 새로운 저항운동으로 가시화
 - 이러한 움직임은 성(性)을 중심으로 한 자각과 권리의식의 확산, 실업률의 급증과 소득의 양극화, 청년의 희망상실, 이주노동자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진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더 가속화될 전망
 - Me Too, 몰카 편파수사 반대운동 등은 하나의 표상
 - 녹색당 신지예 후보를 둘러싼 20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이나 제주도 예멘 난민 처리 문제를 둘러싼 대립 등은 우리 사회가 향후 처리해야 할 복잡한 갈등 양상을 드러냄
 - 시민 간 갈등과 대립·충돌이 야기되는 시대, 사회 의제를 어떻게 포용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는 민선 7기의 핵심 과제
 - 변화하는 사회갈등·대립에 맞춰 각 계층과 집단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신뢰회복이 먼저 필요
- **우려되는 대기오염과 시민안전 ... 이제는 내실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
 - 서울시 대기질은 점차 최악으로 접근
 - 2010~2015년 서울시 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50\mu\text{m}/\text{m}^3$ 를 초과하는 일수가 2012년 (95일)을 제외하고 모두 100일 이상으로 나타남
 - 초미세먼지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25\mu\text{m}/\text{m}^3$ 를 초과하는 1년 중 일수가 2015년 131일, 2016년 177일

〈그림〉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일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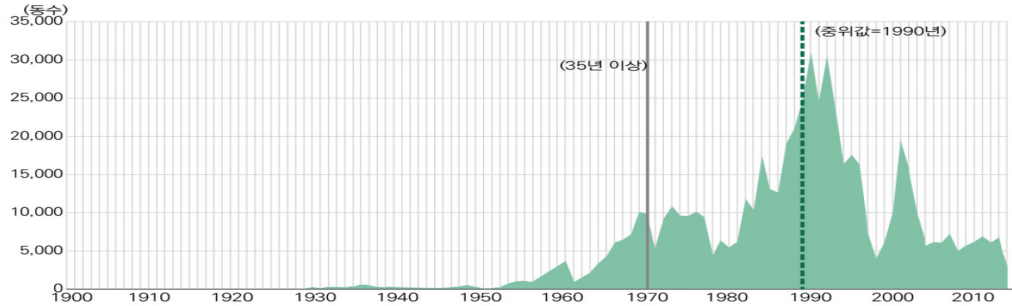


〈그림〉 일별 초미세먼지 농도($\mu\text{m}/\text{m}^3$)



- 용산 상가건물 붕괴에서 보듯, 건축물 안전도 또한 시급한 문제로 부상
 - 2015년 기준으로 3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무려 25.1%(25~34년 경과한 건축물이 24.1%인 반면, 준공 후 5년 미만의 건축물은 전체의 5.1%에 불과)

〈그림〉 서울시 건축물의 준공연도별 분포(2015년 기준)



- 그 외 지진이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라돈침대’ 등 일상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시민 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 안전문제가 급속히 부상할 전망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답답한 경제상황, 기형적인 인구구조 등도 문제 …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또한 필요

- 서울의 인구는 급격히 노령화, 2025년까지 노인인구는 49%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10% 감소 전망

〈표〉 연령대별 서울 인구수 변화(만 명)

구분		2016년	2020년	2025년	증감률('16~'25)
계		980.5	963.5	954.5	-2.7%
유년인구	0~14세 이하	113.0	104.7	100.0	-11.6%
	15~39세 이하	360.2	336.2	306.9	-14.8%
생산가능인구	40~64세 이하	382.5	374.5	361.7	-5.4%
	소계	742.7	710.7	668.6	-10.0%
노인인구	65세 이상	124.8	148.0	186.0	49.0%

자료: 통계청

- 1인 가구는 계속 늘어 2025년 34.1%에 달할 것이며, 3~4인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 전망

〈표〉 가구원 수별 서울 가구수 변화(만 가구)

구분	2016년	2020년	2025년	증감률('16~'25)
계	378.5	379.5	378.8	0.1%
1인 가구	113.9	122.9	129.3	13.5%
2인 가구	93.1	101.7	109.7	17.8%
3인 가구	81.7	80.6	79.5	-2.7%
4인 가구 이상	89.8	74.3	60.3	-32.9%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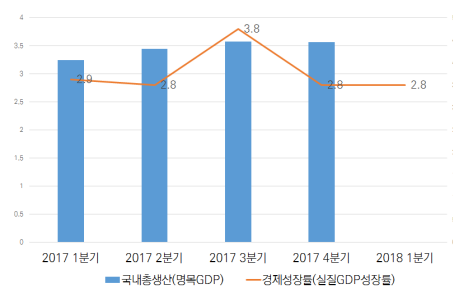
- 경제성장은 더 둔화되어 저성장 고착화 및 실업 증가 우려 현실화
 - 서울의 GRDP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수도권 대비 서울의 비중은 감소 추세
 - 수도권 대비 서울의 종사자 수 비율도 감소 추세로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은 종사자 수 감소

〈표〉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와 비중 추이(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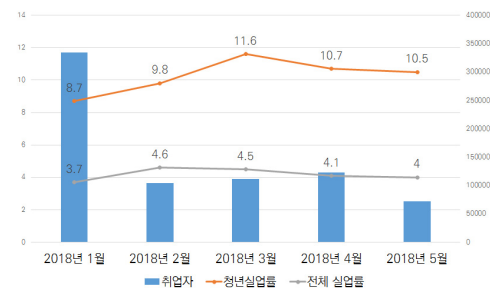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3년	2015년
GRDP	290	319	345
전국 대비 비율	22.9	22.3	22.1
수도권 대비 비율	47.0	45.7	44.7

- 지속되는 세계경제의 악화는 민생경기 침체로 이어질 전망
 - 세계경제는 올해 3.8%, 내년 3.9%의 성장률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 지속 예상
 -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나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9%와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KDI)
 - 이에 따라 실업을 증가가 우려되며, 특히 청년 실업률이 우려되는 현실(2018.5. 현재 10.5%)

〈그림〉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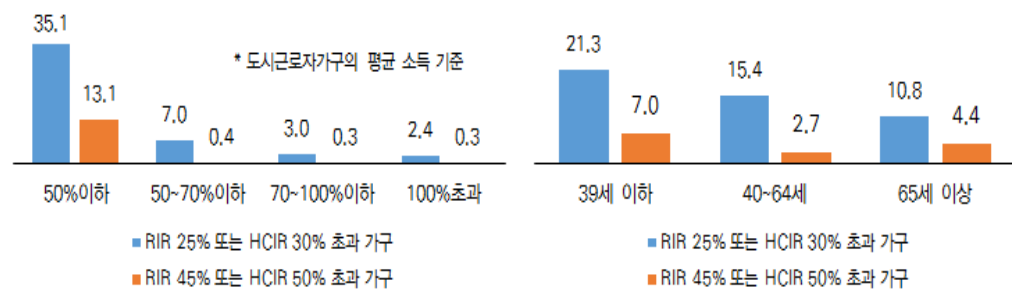


〈그림〉 취업자 및 실업률 추이



- 그럼에도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 탈서울화 현상 가속화 전망
 - 2017년 서울의 주택가격 비율은 연소득 대비 8배 이상
 - 특히 저소득가구,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층에서 과부담 가구가 많음

〈그림〉 임차가구의 소득수준별·가구주 연령별 주거비 부담 현황(2017년 기준, 만 가구)



* RIR(%)=(월임대료/월소득, HCIR(%)=(월임대료+주거관리비)/월소득

- 2010~2017년간 연평균 11.2만 명이 서울 외부로 유출
- 2017년의 경우, 20대 인구와 1인 가구만 전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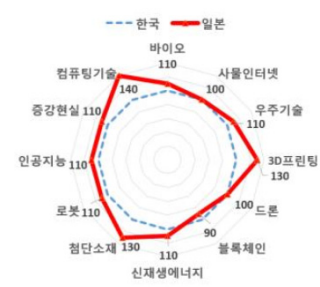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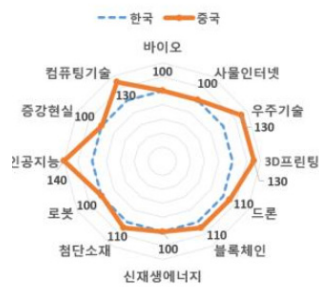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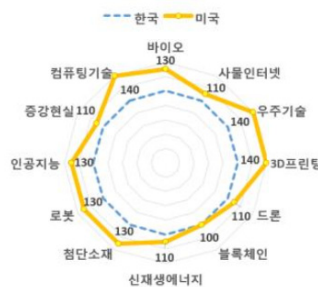
〈표〉 연령별·가구원 수별 순이동 현황(만 명, 만 가구)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계
2010년	-2.3	1.2	-4.8	-1.8	-2.6	-1.2	-11.5
2017년	-1.9	3.2	-3.7	-2.2	-3.4	-1.9	-9.8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계
2010년	-0.7	-1.4	-1.3	-1.0	-4.3
2017년	0.8	-1.5	-1.2	-0.9	-2.8

자료: 통계청

- 이처럼 악화되는 경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
 - 혁신성장을 비롯한 새로운 동력 찾기와 더불어, 자영업자 및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화 도모,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 차원의 과제 제기
-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 새로운 대응능력 필요
 -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도시 등은 새롭게 주어진 과제
 -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 상태
 - 4차 산업혁명의 12개 분야별 5년 후 기술 수준에 대한 전문가 전망 결과, 한국이 중국·일본·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놓일 것으로 전망(한국경제연구원, 2018)



【참고】 2017.8.~2018.5. 서울시 관련 뉴스 키워드 분석 결과

- 전통적인 도시문제(재건축 등)와 더불어 사회주택, 청년주택, 워라벨, 미투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의제도 상당수 제기

- (청년)일자리, 스타트업 등과 더불어 먹거리 안전, 미세먼지 등 또한 주요 문제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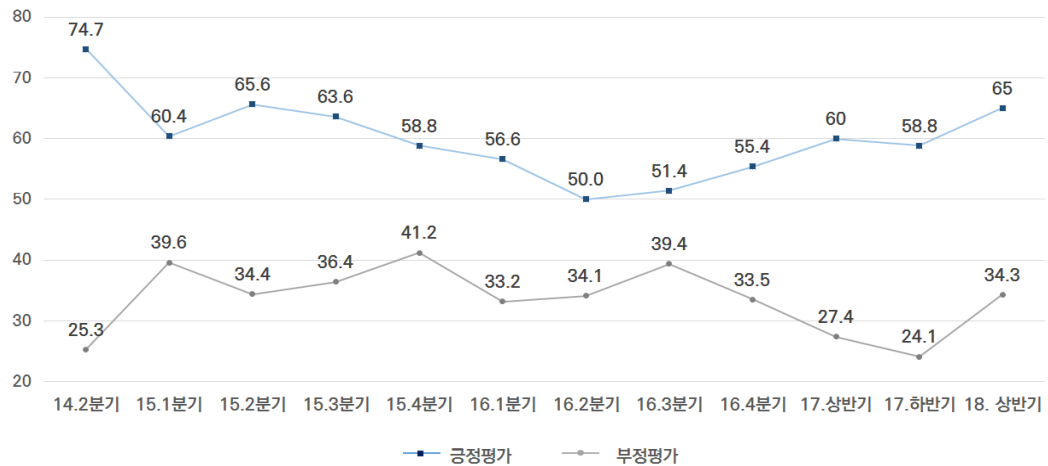
분야	주요 키워드	분야	주요 키워드
주택/ 도시재생	·재건축 이사비 ·은마아파트 재건축 ·영동 지하도시 ·사회주택 ·청년주택 ·도시공원 일몰제 ·아파트 거래절벽	경제/ 일자리	·일자리 ·청년 일자리 ·스타트업 규제 ·갭이어
복지/사회	·포용적 성장 ·노숙인 ·데이트폭력 ·워라벨 ·미투 ·고독사	재난대비/ 안전	·먹거리 안전 ·화재점검 ·노후인프라 ·드론추락
문화/관광	·과잉관광 ·디자인 거버넌스 ·투어리스트피케이션	환경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비닐 분리배출
교통	·고령자 사고 ·택시합승 ·스마트모빌리티 ·파릉이	행정/재정	·자치경찰 ·지방분권

1-2. 시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1): 민선 6기 시정 만족도와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 민선 6기 시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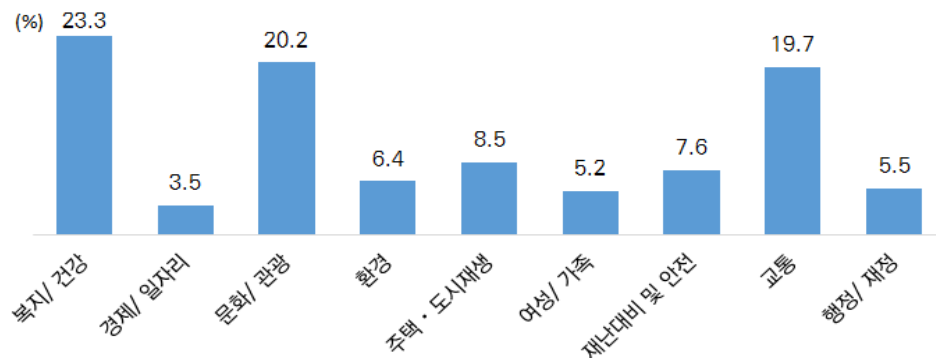
-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민선 6기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50% 상회(부정적 평가는 20~40% 수준)
- '17년 하반기 전화조사를 통한 시정업무 평가 결과, 긍정 평가 중 41%는 시민과의 소통 노력을 언급
 - 이는 인프라 중심 도시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추정
- 부정평가 중 32%는 전시행정·이미지 정치를 이유로 거론
 - 실제 시민의 체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반영

〈그림〉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 추이(점)



- 시민들이 잘해왔다고 평가한 분야는 복지·건강, 문화·관광, 교통 등도 만족도 높아
- 이에 반해 경제/일자리, 여성·가족, 환경, 재난대비 및 안전, 주택·도시재생은 또한 만족도 낮아
 - 행·재정 또한 낮은 만족도 기록

〈그림〉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잘해온 분야(18.6, 전화조사(n=661))



■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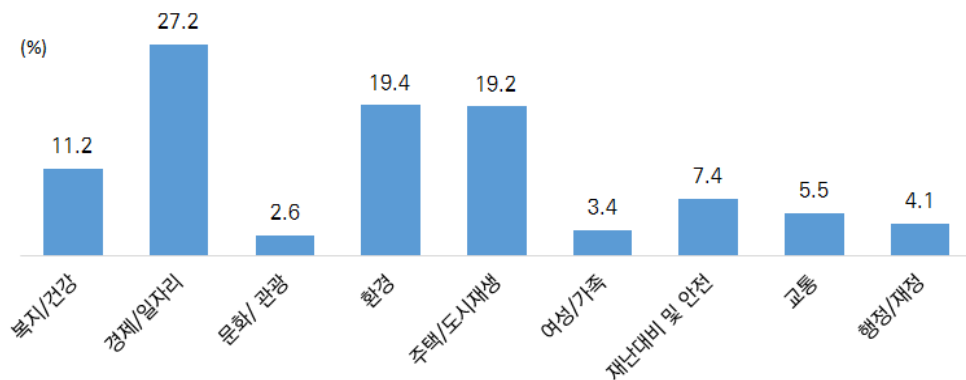
○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모색을 위해 시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18.6.7.~8.(2일간)
-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
- 조사방식: 전화조사

○ 조사 결과 시민이 생각한 것은 경제/일자리, 환경, 주택/도시재생 등도 높아

- 이는 점차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
 - 환경문제는 또한 미세먼지 등 민감한 환경 주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택/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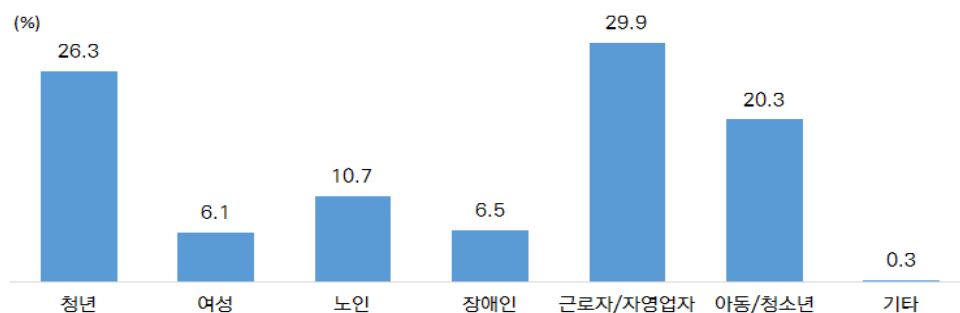
〈그림〉 민선 7기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분야(18.6, 전화조사(n=661))



○ 다른 한편, 민선 7기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대상으로 근로자/자영업자, 청년, 아동/청소년 등 제시

-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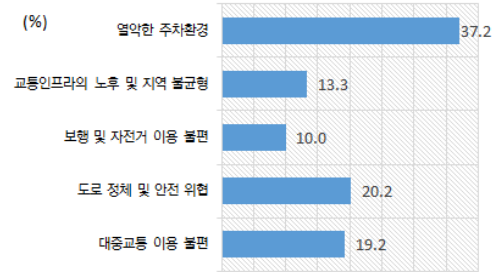
〈그림〉 민선 7기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대상(18.6, 전화조사(n=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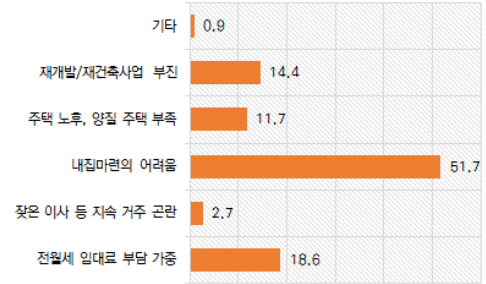
○ 분야별 주요 정책으로는 주차문제, 대기질, 실업과 물가상승,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갈등,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안전문제, 보육시설 부족과 취약계층 보호 등이 제시

- 쓰레기 처리 문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몰락,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또한 주요하게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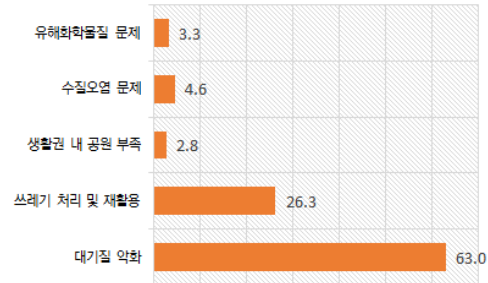
- (교통) '주차문제', '도로정체', '대중교통 이용 불편'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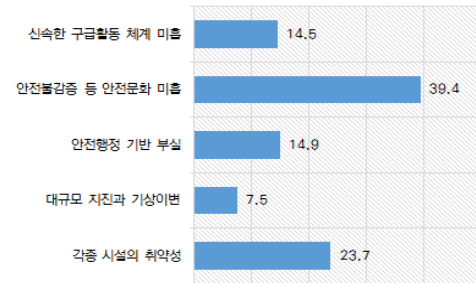
- (주택)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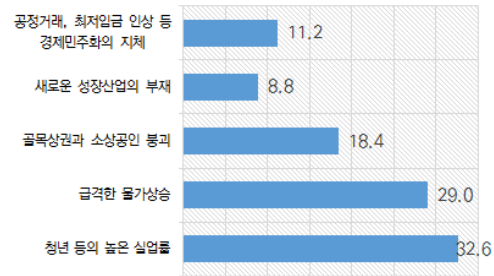
- (환경) '대기질 악화'가 63%로 과반, '쓰레기 문제'도 높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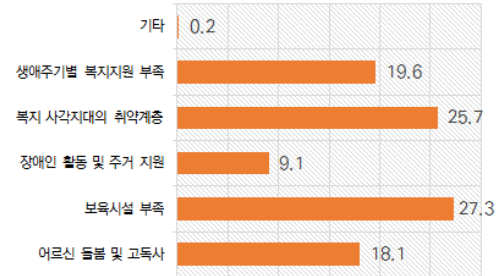
- (안전) '안전불감증 등 안전문화 미흡', '각종 시설의 취약성' 등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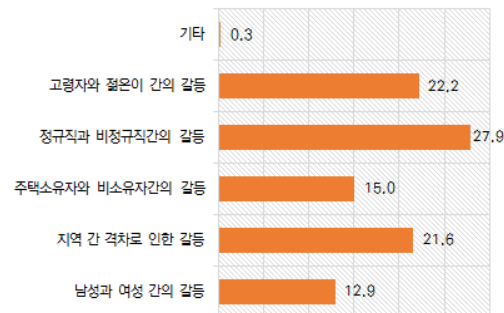
- (경제) '실업문제', '물가상승',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붕괴' 순으로 나타남



- (복지) '보육시설 부족', '복지 사각지대 문제', '생애주기별 지원 부족' 등



- (사회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 간', '지역 격차' 등이 강조



※ 분야별 정책의제는 복수응답 결과임

1-2. 시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2): 민선 7기 주요후보 공약 검토

■ 박원순 시장 공약 검토

- ‘10년 혁명의 완성’을 목표로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열겠습니다”하에 5대 중점공약과 66개 핵심공약을 제시
- 5대 중점공약

5대 공약	주요공약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 산업혁명 선도	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 ②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방재, 환경 관리를 위한 IoT 센서 네트워크인 ‘스마트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③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심교통난 해소, 주택가 주차관리, 안전관리, 취약계층 돌봄, 환경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울형벤처 5,000개 육성 ④ 민간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주도형 추진체계 마련
균형발전하는 서울	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 ②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배분 -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③ 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 추진 - 3도심·7광역 중심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 -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 기능복합화 - 시 경계에 위치한 12개 지역을 관문도시로 조성
격차 없는 서울	① 자영업자 폐업 시 소득 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추진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 추가 지원 -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서울시 희망장려금 금액 100% 상향 및 기간 연장 ② 피고용자처럼 자영업자와 특수직에게도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 부여,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일당 지급 ③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7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우선 적용, 빈곤가구 포괄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① ‘서울돌봄 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 - 72시간 내 가구를 방문해 돌봄계획 수립 및 서비스제공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②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50% 달성 -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의 차액 보육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2020년까지 100개소씩 확충 ③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 학교 일과 외 시간 및 방학 기간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협의체 운영 ④ 서울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 서비스 질 개선, 노동자의 안정성 도모와 공공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로 한반도 평화 선도	①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② 경평축구 부활 ③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 도시 인프라 협력: 평양 상하수도 개량, 평양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등 - 경제협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식생동물 종자교환 등 ④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 서울시향-조선국립관현악단 합동 공연 추진 -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 추진, 서울-평양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추진

○ 대상별/영역별 공약

- 대상별 공약은 자영업,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6개 집단 대상 18개 공약으로 구성
- 영역별 공약은 미래, 상생, 사람, 안전, 일상 등으로 6개 분야, 48개 공약으로 구성

〈표〉 대상별 공약

정책대상	주요공약
자영업	① 폐업자의 회생을 돕는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구축 ②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③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Seoul Pay) 도입
노동자	①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 Union City! ② 임금체불 ZERO 도시 조성 ③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① 청년의 꿈에 투자하는 '청년미래기금' 조성 ② 서울시 위원회 청년 참여 15% 보장 ③ 청년예술 무한기회 프로젝트
여성	①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WithU 추진 ② 여성안심특별시 4.0 추진 ③ 성별 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장애인	① 장애인의 생활편의 서비스 자원확대 ②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 ③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술 - '에이블테크' 서울
어르신	①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② 어르신께 건강한 영양 식사 제공 및 자원 강화 ③ 고독사 없는 서울

〈표〉 영역별 공약

정책영역	주요공약
미래서울특별시	① 4차 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신산업 단지 조성 ② 벤처육성펀드 1조 2천억 원 조성 ③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도심제조업 활성화 ④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산업 육성과 MICE 유치 ⑤ 청년창업과 도시재생의 허브, 캠퍼스타운 조성 ⑥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⑦ 미래 교통의 혁신, 자율주행 기반 조성 ⑧ IoT 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
상생특별시	① 공공서비스 기술혁신으로 공유행정 추진 ② 고루 잘사는 서울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③ 지역거점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 종합대책 추진 ④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⑤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양호한 주택 공급 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철저 ⑦ 불법·불공정거래·갑질 ZERO 정착 ⑧ '데이터 지·옥·고' 완전 해소 -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⑨ 마을공동체 2.0 추진 - 공동체 활동에서 자치하는 마을로 ⑩ 협동과 공유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람특별시	① (가칭) '서울돌봄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 ②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 ③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④ 아이들이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동네 인프라 마련

〈표〉 영역별 공약(계속)

정책영역	주요공약
사람특별시	⑤ 어르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행복 지원 ⑥ 서울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⑦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 ⑧ 필수요로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시립병원 설치 ⑨ 외국인 근로자·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안전특별시	① 안전도시를 위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② 안전 사각지대 없는 안전평등도시, 서울 조성 ③ 대도시 재난 안전관리 강화 ④ 서울형 대기 질 개선대책 시행 ⑤ 태양의 도시, 서울: 1백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⑥ 기후변화에 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⑦ '보행·자전거 중심도시' 서울 실현 ⑧ 교통안전 강화 및 서비스 혁신 ⑨ 대중교통 2단계 혁신
일상특별시	① 아시아 최고의 음악도시 서울 ② 뭐든지 가능한 시민문화, '뭐든지 지원센터' 설립 ③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④ 지식문화 허브, 권역별 서울도서관 건립 ⑤ 한걸음에 닿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⑥ 생태 감수성 높이는 도시농업 활성화 ⑦ 생태 도시 숲, 생활권 생태공원 확대 조성 ⑧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⑨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민주주의특별시	①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십 정부 서울 ② 개방형 협치시정 3.0 ③ 사회적 가치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성장지원

■ 타 후보공약 검토

○ 김문수(자유한국당): “자유의 경쟁력으로 서울활력 회복”

- 도로·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
 - 도로 지하화, 수도권 GTX, 강북 GTX, 남부권 GTX 등 지하철 건설
- 미세먼지 30% 저감
 - 집진탑 100대 설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협력 강화, 서울-인천-경기 환경협약체 구성 등
- 생활비 절감 및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
 - 고품질 공공 와이파이 존 확대, 무선공유기 설치 운영, 서울 인터넷 교육방송 신설, 서울 패스(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월 189만 7,395원 미달가구 대상 월평균 322,635원 지원)
- 서울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개발
 - 4차 산업혁명 적합시설 건축규제 완화, 취득등록제 면제, 재산세 50% 경감(5년간), 권역별 특구 조성 등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건축물 규제 완화,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재개발·재건축 지원체계 구축, 공공임대주택 25만 호 공급, 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 호 공급, 청년주택 5만 호 공급 등

○ **안철수(바른미래당): “바꾸자 서울”**

- 스마트도시/디지털 행정혁신 도시
 - 6호선 순환선 건설(서울 동-서북지역과 공항접근성 개선), 국철 57km 구간 단계별 지하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블록체인 시민증 발급, 인공지능 스마트 신호등 설치, 모든 시민에게 5G 네트워크 제공), 미세먼지 없는 지하철과 역, 학교 그리고 스모그프리타워 조성 등
-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도시
 - 온종일 초등학교 전면 도입, 청소년 진로탐색 Seoul Job Mentor 구축, 반값 공공임대주택, 청년취업책임제, 서울미래통장 실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평생학습 기회 제공, 학자금 융자금리 ‘제로’ 제도 도입, 인공지능 CCTV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연계
-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 강북1권(창동~홍릉) 4차 산업 창업밸리, 강북2권(상암~은평) 미디어 밸리, 도심권 관광한류 밸리, 강서권(마곡~가산) IoT 유통밸리, 강남권 융복합 컨벤션&웰빙 밸리, 소상공인 보호(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 육성업종 지정, 중소형 프랜차이즈 육성, 대형쇼핑몰 건립 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실시)
- 따뜻한 공동체
 - 산후조리원 비용 지급 등 여성안전 안심,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서울부양자 제도 도입, 청년을 위한 반값 주택, 보증금 프리제도 운영, 뉴타운 재개발 지역 준공영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주택구매 실수요자 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가대출 시행 등

○ **김종민(정의당): “갑질 없는 서울, 노동이 당연한 서울(Labor City)”**

- 사대문안 혼잡통행료 도입, 공정임대료위원회 설치, 계속주거권 보장, 프리랜서 공제회 설립(4대 보험료 지급), 신곡수중보 철폐, 한강센트럴파크 조성, 혼인 외 동반자 관계 인증제도 도입, 아동부터 무상으로, 미세먼지·석면·GMO 등 3無 안전학교, 소방관 처우개선 등

○ **신지예(녹색당): “눈부신 평등의 서울”**

- ‘가난해서 아프지 않고, 폭력 때문에 죽지 않고, 차별 때문에 병들지 않는 서울’ ‘덜 일하고 더 많이 쉬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서울’을 목표로 10대 공약 제시
 - 서울시민인권헌장채택, 젠더건강센터 설치, 성평등 계약제 도입, 장애인 시설없는 탈 시설도시, 청년기본소득 실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동물학대 긴급구조 TF팀 운영/유기동물보호소 직영화,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한강재자연화, 유해화학물질 사전검토 및 인증제 추진, 제로에너지 빌딩인증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
 - 그 외에도 위원회 투명성 및 민주성 강화/ 예정산 과정에 시민참여, 건강한 노동/ 작게 일할 권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사회적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독박육아 방지조례 제정,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및 권리보장, 기후변화 및 재해 대책 마련,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탈핵에너지 전환, 산후조리원 안전 강화 등을 제시

■ **후보 간 공약 및 주요시정 방향 검토**

-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중복률이 높은 분야를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 △미세먼지, △돌봄, △청년세대·자영업자 보호 등 4가지
- 이를 중심으로 주요한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심 분야	박원순 후보 공약	타 후보 공약
스마트 시티	- 6대 스마트전략 산업 지정·육성 - 벤처육성펀드 1조 2천억 원 조성 - 스마트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기술 벤처 기업 5,000개 육성	- 대학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김문수) - 공공와이파이존 확대(김문수) - 벤처기업 육성 등 창업활성화(안철수) - 권역별 창업밸리 조성(안철수)
미세먼지	- 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 - 1백만 가구 미니 발전소 설치(태양의 도시) - 보행·자전거 중심 도시 실현 - 대중교통 2단계 혁신	- 경유차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김문수) - 4대문안 혼잡통행료 징수(김종민) - 집진탑 설치(김문수) - 대체에너지 발굴(안철수) - 에너지 자치(신지예) -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지역자산화(신지예) - 수도권 환경협업체 구성(김문수)
교육과 돌봄	- 서울 돌봄 SOS 시스템 운영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 동네인프라 개선	- 보육시설 확대(안철수) - 꿈나무 안심학교 확대(안철수) - 온종일 초등학교 전면 도입(안철수) - 서울 부양자제도 도입(안철수) - 아동무상의료(김종민) - 독박육아 방지조례 제정(신지예) - 노동시간 단축(신지예)
청년·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추진 -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행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권역별 공공시립병원 설치 - 청년창업과 도시재생 허브, 캠퍼스 타운 조성	- 최저소득보장제(김문수) - 청년취업책임제/청년기본소득(안철수) - 서울미래통장(안철수) - 청년반값주택 공급(안철수) - 계속주거권 보장(김종민) - 노동특별시 구현(김종민) - 보증금프리제도 운영(신지예)

- 이를 중심으로 민선 7기의 방향을 살펴보면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 △ 미세먼지 등 안전 문제 대응, △ 사회적 돌봄, △ 청년세대 및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요약 가능
- 여기에 시대적 의제인 '남북교류협력'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지역 간 교류협력' 등을 추가하면 6가지 정도의 핵심의제 설정 가능

1-3. 민선 7기 시정운영 전략

■ 주요 전략

- 가시적 성과창출이 주요 시정운영 방향이니 만큼, 서울시 여건 및 정책 여건 상 제시된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 운영

- 6대 과제

- ① 시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②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대기질 개선」
- ③ 대기질 악화 등 서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보행도시」 추진
- ④ 정부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추진
- ⑤ 수도권 및 지역과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상생」 추진
- ⑥ 신남북협력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 추진 등

- 서울시가 가진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효율적 정책목표 달성

- 시가 가진 물리적 공간에 대한 활용능력 및 그간 시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 예컨대 마을공동체 조성, 사회적 경제, 협치 등 그간 추진된 사업들을 활용, 효율적인 지역 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성과 제고

- 정부 및 수도권 등과 협력하여 추진, 시정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 정부와 입장이 달랐던 민선 5~6기와 달리 민선 7기는 정부와 협력이 가능한 시기
- 이에 정부와 협력하여 시정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풀어가는 노력 필요
- 특히 온종일 돌봄이나 청년일자리,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은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
 - 정부가 혁신성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정책 추진 ⇒ 보다 확실한 성과창출 노력
- 다른 한편, 교통 및 미세먼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과 협력 또한 필요
 - 특히, 수도권을 포함해 여러 지역으로 서울을 벗어나는 '탈서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간 협력 및 상생을 위한 노력 필요

II. 6대 중점 추진과제

II. 6대 중점 추진과제

2-1. 서울시 보행도시 추진전략

■ 추진 필요성

- 서울의 대기질은 점차 열악,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계 최악이라는 보고서도 있어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17년 서울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m^3 당 $44\mu\text{g}$ 이라 발표(18.6.11. 동아일보 보도)
 - 파리($21\mu\text{g}$), LA($33\mu\text{g}$)보다 높은 수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 역시 지난해 연평균 m^3 당 $25\mu\text{g}$ 으로 파리($14\mu\text{g}$), LA($14.8\mu\text{g}$)보다 높은 수준
 -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대니얼 모런 박사팀, 서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76.1Mt으로 세계 1만 3,000여 개 도시 중 가장 높다고 발표(18.6.11. 동아일보 보도)
 - 광저우(2위·272.0Mt), 상하이(6위·181.0Mt), 미국 뉴욕(3위), 홍콩(4위), LA(5위), 싱가포르(6위)
 - 연구진은 해당 도시를 행정구역이 아닌 격자 형태로 나눠 인구와 소득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서울인구는 경기 일부와 인천 일부를 합쳐 2,125만 4천 명으로 계산)
- 그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추진
 -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지원부터 노후경유차 도심통과 제한 등 다양한 조치 시행
 - 그러나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얻지 못해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 게 현실
 - 때문에 지금 당장 개선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도시환경 전반을 변화시켜 서울시가 변해간다는 것을 체감토록 하는 것이 필요
 - 미세먼지에 대한 즉각적 대응보다는 보행중심 도시로 도시환경을 개편,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시가 전환되고 있음을 체감토록 하는 것이 중요
- 보행도시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이지만, 지금 당장 서울의 도시생태 원리가 변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 미세먼지 총배출량의 66%가 도로 이동오염원
 - 승용차(경유차)의 높은 CO_2 배출량을 낮출 경우,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해외 주요 도시들은 보행자 우위의 교통체계로의 변화를 통해 환경 개선 추진
 - 노르웨이·독일 등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차량 속도 제한 정책 시행 및 도심 차량 운행 금지 방안 추진
 - 네덜란드(본엘프), 영국(홍존), 일본(커뮤니티존) 등 보도와 차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차도에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할 수 없도록 생활권 도로 정비
- 서울시 역시 따릉이 2만 대 시대를 개막하는 한편, 서울로 등 다양한 보행친화환경을 조성한 만큼 보행도시화를 위한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시민체감 제고 필요

◇ 대중교통 무료지원은 그 자체가 반대가 아닌 정책 효과 때문에 반대 ◇

- <잡코리아>는 대중교통 무료지원이 시행된 지난 2월 성인남녀 1,573명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 결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68.2%가 찬성한다고 응답
 - 찬성이유: 실제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51.2%), 미세먼지/경보에 맞춰 효율적으로 진행돼서(36.4%), 실제 교통량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33.8%) 등
 -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는 17.4%
 - 반대사유: 근본적인 해결정책은 아닌 것 같아서(62.4%), 효과 대비 비용 과다(58.0%), 특정 집단(대중교통 이용자)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24.1%)

■ 추진여건 및 현황

- 서울시는 '13년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계획
 - 이후 다양한 형태의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 진행 중
 - 보행전용거리 추진, 보행친화구역 조성,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도심부 자동차 속도 제한, 도심보행길(프로미나드) 조성, 보행친화도시 서울 걷기대회 개최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사업 마련·추진
- 전국 최초 보행자 전용길 서울로 7017, 보행특구 조성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사업 추진
- 2015년 이후 공유자전거 ‘따릉이’ 도입, 2017년 기준 따릉이 2만 대 시대 개막
 - 문정·마곡, 종로지구 등 특화지구를 조성, 서비스 시작 14개월 만에 누적 대여건수 172만 건 돌파
 - 프랑크푸르트 Nextbike(3,000대), 뉴욕 Citibike(6,000대)를 넘어, 파리의 Velib(23,600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16년 기준)

■ 추진방향 및 전략

- 따릉이 확대, “실질적 생활교통수단으로”
 - 향후 2020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총 188km 확대 계획
 - 대여소를 1,300개 수준으로 확대하여 500m 간격을 유지, 자전거를 중심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녹색진흥지구 등 보행환경 개선 및 분산된 보행도로 연결
 - 사대문안, 을지로, 종로 일대 등 트램 조성 및 따릉이 확대 등을 통해 광화문 광장, 종로, 서울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행가로 연결, 누구나 편리하게 걷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 생활권도로, 폭이 좁은 골목을 우선으로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도시로 재편
 - 확보된 보행거리 내 다양한 거리 이벤트 개최를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 조성
- 도심 차량 제한 속도 적용 규정의 법제화 추진
 -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 미세먼지 유발 등 공해 차량 운행제한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률 최저화 유도

■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과제 1】 ‘보행 도시’ 서울 실현

- (세부 1) 한양도성 녹색교통특별교통대책 시행(공약사항)
 - 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 등 도로공간 재편
 - 공해 차량 운행제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량 감축시책 추진
- (세부 2)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수단 연계(공약사항)

- 노점상, 불법 주정차 등 보행권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대중교통 주변 보행환경 개선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지속적 유지관리
- 횡단보도 개선 등 보행단절구간 연결
- (세부 3) 생활도로 재구조화를 통한 보행환경 지속 개선(신규제안)
 - 자치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유관기관별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의 체계적 연계
 - 생활도로의 재구조화를 위한 표준매뉴얼 정립
 - 도로공간 및 보행구간 구분된 자치구 도로관리 DB 구축

【과제 2】 ‘자전거’ 실질적 생활화

- (세부 1) 도심 연계 자전거 도로망, 도심부 보행공간 확대 구축(공약사항)
 - 한양도성~영등포, 여의도~강남 연계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
 - 자전거 특화지구 확대 지정·운영
 - 역사·문화 중심지, 재생사업 연계, 걷고 싶은 거리와 자전거도로 추가 마련
- (세부 2) 자전거도로 공간의 질적 개선방안(공약사항)
 - 안전성 확보 위한 설계방안 적용
 - 자전거 주행환경 안전성 강화
- (세부 3) 수요분석 기반 ‘따릉이’ 관리 및 이용환경 개선(공약사항)
 - 따릉이 이용 DB에 의한 효율적 공급
 - 공공자전거 설치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따릉이 이용환경 개선
 - 따릉이 특화지구 확대 조성

【과제 3】 초고령사회 대비한 보행인프라 개선

- (세부 1) 고령자 위한 보행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신규제안)
 - 고령 보행자의 피로도를 고려한 보행쉼터 설치
 - 고령 보행자의 횡단시간을 고려한 보행섬 설치 및 신호시간 조정
 - 고령 보행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보행안내 표지 시인성 개선
- (세부 2) 교통약자 및 경사지 주민의 보행편의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신규제안)
 - 보행기반 인프라 설계 기술
 - 보행편의 향상을 위한 기술의 적용가능성 검토
 - 가파른 경사면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제약되는 지점 파악
 -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설(경사형 엘리베이터, 곤돌라 등) 선정
 - 향후 경사지 주거단지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2. 미세먼지 대응 대기질 개선 방안

■ 추진 필요성

-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해외 주요 대도시보다 2배 높아
 - 세계보건기구(WHO) PM2.5 연평균농도 권고기준: $10\mu\text{g}/\text{m}^3$
 - 해외 주요 대도시와 PM2.5 연평균농도 비교: 서울 $25\mu\text{g}/\text{m}^3$ · $26\mu\text{g}/\text{m}^3$ (2017·2016), 동경 $13\mu\text{g}/\text{m}^3$ (2016), 파리 $14\mu\text{g}/\text{m}^3$ (2016), 런던 $12\mu\text{g}/\text{m}^3$ (2016)
- 시민들의 체감오염도는 연평균농도의 변화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에 더욱 민감, 국내 PM2.5 대기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시민들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요구도 더욱 증가 예상
 - 2018년 3월, PM2.5의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나쁨” 이상 일수 증가
 - 일평균농도 기준 $50\mu\text{g}/\text{m}^3 \rightarrow 35\mu\text{g}/\text{m}^3$
 - 2012~2016년 : $50\mu\text{g}/\text{m}^3$ 초과일수 82일 $\rightarrow$ $35\mu\text{g}/\text{m}^3$ 초과일수 301일
- 여름철 대표적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진 오존 농도도 증가, 오존 주의보 발령시기도 앞당겨지는 경향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
 - 수도권 기준 2012년 첫 오존 주의보는 6월 3일 발령, 2015년 5월 27일, 2016년 5월 17일, 2017년 5월 1일, 2018년 4월 19일 첫 오존 주의보 발령
 - 서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2018년 6월 24~25일에는 PM2.5 일평균농도도 각각 $37\mu\text{g}/\text{m}^3$, $38\mu\text{g}/\text{m}^3$ 로 기준 초과
-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오존에 대한 대비와 관심은 미세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추진여건 및 현황

- 서울시 단독의 노력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은 불가능
 - PM2.5 연평균농도에 미치는 서울시 자체 배출원의 영향은 22%, 수도권 배출원 12%, 수도권 외 국내지역 배출원 11%, 국외 지역 55%(서울시 2016년 연구)
 - 그동안 같은 대기오염 영향권역에 속하는 수도권조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공동협력추진은 미흡
- 서울시 자체 배출원 중 이동오염원(차량, 건설기계), 난방발전 등 화석에너지 사용이 서울시 PM2.5의 주요 원인
- 서울시는 2017년 9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 핵심내용
 -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도입하여 건강민감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실시 시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화 단계적 확대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
 -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 환경외교 강화 및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 2018년 1월에 최초 시행된 PM2.5 비상저감조치 한계를 인식, 2월에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8대 개선대책” 발표
- 공공부문 주도의 배출량 저감의 한계, 시민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 정책의 강화 필요성, 시민주도의 실효적 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 등을 인식
 - 핵심내용
 - 시민주도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및 친환경프로그램 참여시민 인센티브 확대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유발차량 운행 제한
 - 미세먼지 배출저감 집중 단속
 -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확대와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마련
 - 수도권 정책협의회,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등 국내외 지속적 협력 강화

■ 추진방향 및 전략

- 시민의 체감오염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고농도 상황 대비 및 노출피해저감 정책 추진
 -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 봄철을 고려한 고농도시즌 제도 도입 고려
 - 고농도 발생 시 노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교한 대응책 마련
- 미세먼지, 오존 등 전통적 대기오염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까지 모두 고려하는 통합관리 추진
 - 온실가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기오염문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와 생활양식의 문제
 - 미세먼지, 오존, 온실가스 문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 통합적 관리로 접근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추진 필요
 - 이동오염원 부문은 보다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로 차량 운행의 대폭 저감과 친환경차량 중심으로 빠른 전환 필요
 - 난방발전 부문의 경우,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등 에너지 및 기후변화정책과 연계한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소비구조(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강화 등)의 변화 유도 필요
- 시민의 정책 수용성 확대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 정부 주도의 규제적 또는 하향식 접근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므로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를 이끌 소통 전략 필요
 - 정부는 대기오염에 대한 불명확한 과학적 한계를 포함해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시민들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원화된 쌍방향 소통 창구 마련 필요
- 수도권 광역 대기환경 관리 공동협력 강화

■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과제 1】 대기오염·에너지 통합관리 체계 구축(신규제안)

- 온실가스,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오염 문제의 핵심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구조와 생활양식임을 고려하여 에너지와 대기오염 통합관리 기반 구축
 - 기존 기후변화, 에너지, 대기오염 정책 간 정합성의 부족, 상호 연계를 위한 조정기능의 취약 등 문제점의 통합적 분석
 - 통합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관리모형 개발
 - 기후변화, 에너지, 대기오염 정책 간 상호 조화로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유관계획 간 위계 및 관계를 고려한 계층적 체계화 및 내용의 유기적 연계
 - 관련 부서 간 협력 및 협의체계 구축

【과제 2】 대기오염·에너지 통합 시민소통 및 참여 방안 마련(신규제안)

- 기존 기후변화, 에너지, 대기오염 각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던 시민참여 및 소통 창구의 일원화
-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정부는 불명확한 과학적 한계를 포함한 관련 정보 전달, 시민들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모니터링
- 고농도시즌에 대한 시민, 기업, 자치구 등 소통 및 참여 방안 마련
 -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시기를 위한 평상시와 차별화된 소통전략을 마련
 - 시민, 기업, 자치구 각각이 사전에 정책이나 사업에 동참하여 실제 고농도 발생횟수를 줄이고 발생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제 3】 대기오염 고농도시즌 제도 도입 (신규제안)

-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시즌 설정과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 시행으로 고농도 발생 횟수와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고농도 발생횟수 증가가 시민의 대기오염 체감도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농도 발생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시즌제도 도입
 - 현재의 대응은 미세먼지,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적 대처가 주요 → 사전에 고농도 발생을 줄일 방안을 준비하고 실행하면 고농도 발생의 횟수와 강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큼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봄철과 겨울철(예: 10월~4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으로 설정: 평상시보다 강화된 1단계 배출원 관리 정책 추진 → 실제 고농도가 발생하는 경우 더욱 강화된 2단계의 비상대책 시행
 - 오존은 우리나라도 4월~10월 오존시즌으로 정하고 있으나 예·경보 중심의 소극적 대응 수준 → 고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배출저감 방안 마련
-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시즌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저감 전략뿐 아니라 고농도에의 노출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출저감 전략 마련

- 민감취약계층, 오염노출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노출저감을 위한 행동지침 등 마련
-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버스정류장, 지하역사, 지하철 등에 대한 고농도 노출저감 방안 강구

【과제 4】 수도권 광역 대기환경관리 상생협력체계 구축(기존 + 김문수 공약 일부)

○ 수도권 광역 환경협의체 구성·운영

- 3개 시도가 자발적으로 대기환경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실무 TF팀을 구축하여 시도별 대기질 개선사업의 벤치마킹, 정보 교류 등 실무 중심의 협력 강화
- 향후 충청권까지 확대 운영

○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수도권 대기관리 기반 구축

- 수도권 광역 상세모니터링 측정망 구축: 복잡해지는 수도권 대기오염 현상의 과학적 해석을 위해 3개 시도에서 상시적으로 미세먼지 성분, 유해대기물질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측정망 구축, 3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하며 자료 공유
- 3개 시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배출량자료 조사 및 구축
- 상세모니터링자료, 지역배출량 자료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 원인분석 및 시도별 맞춤형 정책 도출 등 3개 시도 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진행

【과제 5】 수도권 교통 부문의 광역적 대응 우선 시행(기존 정책)

○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의 실질적 운행제한을 위한 현행 LEZ 제도의 실효성 개선

- 단속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장비 등 시스템 구축, 행정 협력 및 벌금부과 시스템 현실화

○ 친환경등급제의 수도권 확대 도입을 위한 협력

○ 광역버스 친환경 전환, 물류부문 배출 관리 등 교통 관련 사업 및 제도 협력

○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광역적 대응 체계 구축

2-3. 온종일 돌봄 방안과 추진전략

■ 추진 필요성

- 돌봄은 출산에 이어 여성 경력단절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 ⇒ 저출산 및 경제활동 상실의 주요원인
 - (저출산) '17년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 올해 1.0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 (활동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 아이 돌봄 문제로 직장을 포기한 여성은 1만 5,841명
 - 출산에 이어 돌봄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인으로 부각
-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여성들의 욕구로 돌봄 수요는 증가, 그러나 공급은 부족한 상황
 - 초등학생 돌봄교실의 경우, 공적 돌봄의 이용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33만/267만 명)에 불과
 - 자치구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수용률 또한 35.2%(18.4. 조사결과)로 낮은 수준
 - 특히, 구별 차이가 있어 자치구별 편차에 대한 시정 필요(1위 성동구 56%, 최하위 은평구 21.4%)

■ 추진여건 및 현황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 중
- 18년 4월 4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발표
 - 2022년까지 5년간 1조 1,053억 원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현행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확대
 - 학교 돌봄 24만 명, 마을 돌봄 9만 명 → 각 10만 명씩 늘려 초등 돌봄교실 아동 수 53만 명으로 확대
 -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맞벌이 등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 서울에서 현재 운영되는 초등돌봄 교실 수는 1,453개소(2017년 기준) 31,196명
 - 초등학교의 약 12%가 이용하는 상태로 수용률이 매우 낮은 상태
 - 지역아동센터 또한 서울지역에 414개소(2017년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나, 방과후 이후 저녁 돌봄에서 공백 발생
- 시장 공약
 - 공공책임 지역기반 보편적 방과후 돌봄 강화
 - 초등 돌봄교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확대로 방과 후 돌봄의 공립형 모델 정립
 - 온마을 돌봄키움센터 설치로 공공보육의 책임을 강화
 - 방과전, 방과후, 저녁, 방학 초등 돌봄 등 틈새 초등 돌봄 체계 구축
 - 방과전(7-9시), 방과후 저녁(17시 이후) 돌봄, 방학 돌봄 등 초등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협의체 운영을 통해 틈새돌봄 전담기관, 마을학교, 마을돌봄센터 등 운영

■ 추진방향 및 전략

-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각각의 돌봄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이를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 필요
 - 모든 아동 및 초등생이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및 교육청, 지역사회, 시와 자치구 행정이나서는 종합적인 협력체계 구성 필요
 - 곧 지역사회에 내에서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 돌봄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
 - 그러나 지역사회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 이에 각 지역별(마을단위)로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서울시-자치구-교육청-학교 간 상설돌봄협의체 설치·운영 필요
- 전폭적 확대보다 몇 개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서울시 돌봄 모델 구축
 - 돌봄은 여러 단체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
 - 처음부터 서로 동일한 목표와 상(象)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
 - 이에 특정 몇 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해 실효성 평가
 - 운영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全) 구로 확대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2년 내 모델 개발을 완료하여 전 구로 확대

■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과제 1】 서울형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신규제안)

-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시와 교육청, 자치구,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이 참여 ⇒ 가능한 모델 운영 검토
- 학부모 100인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구성
 - 추진상황 검토로 실제 효용이 있는지 분석 ⇒ 방향 수정 및 서울형 돌봄시스템 계획 수립
- 서울형 돌봄 모델 개발 및 확산
 -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모델을 바탕으로 각 자치구 대상 사업 확대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하며 3년 내 전 구로 확대 모색

【과제 2】 지역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 운영(신규제안)

- 24시간 운영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기관 마련
 - 24시간 상시 운영으로, 맞벌이 및 전업주부의 학령기 아동의 긴급 방과 후 돌봄 담당
- 자치구별 지역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 운영
 - 2018년 자치구 공모, 시범 실시 후 지속적 확대 운영
 - 자치구별 최소 1개씩 운영으로 접근성 강화
-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로 방과후 돌봄의 책임성 제고
 - 양질의 전담 코디네이터를 상시 배치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령기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함

【과제 3】 100% 연계체계 구축으로 방과후 돌봄 공백 제로화(신규제안)

- 방과후 돌봄시설 연계로 방과후 돌봄 종료 후 돌봄 제공
 - 방과후 돌봄 기관(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필요 아동에게 돌봄 시간을 연장 제공
- 방과후 돌봄 일자리 마련으로 학령기 아동 돌봄의 공백을 제로화
 - 1차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으로의 아동 딜리버리(이동)는 경력단절여성과 여성 노인을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제 4】 방과후 돌봄 지역 자원 지도 작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신규제안)

-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방과 후 돌봄기관, 장소, 인력 등 가용 자원의 파악과 이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학부모, 이용 아동이 학교 및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자원지도를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

2-4. 서울형 혁신성장 추진방안

■ 추진 필요성

-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그리고 서비스화의 진전 등 서울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공고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
 -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은 당해 연도 가격 기준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전국 대비 비중은 2000년대에만도 25%대에서 22%대로 감소하는 등 성장세는 둔화
 - 지난 25년간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6%대에서 2010년대 3%대로 수렴하는 추세로 이러한 저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 1990년대 중반 거의 20%였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010년대 중반에 이르면 1/3 수준인 6%대로 떨어졌으며, 이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지표
- 서울 경제의 활력 회복과 이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대표적인 경제 성장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구조혁신이 필수
 - 미래는 기술과 지식기반의 4차 산업혁명 사회
 -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 포럼 회장은 속도, 범위, 영향력 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의 도래를 예언
 -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 상태
 - 2016년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준비 수준은 조사대상 45개국 중 25위
 -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이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개 분야별 5년 후 기술 수준이 중국·일본·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놓일 것으로 예측
- 혁신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추진 필요에 대한 공감대 상승
 -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혁신성장을 규정하고 추진
 - 2017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주도 성장과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한다는 정책방향을 공식화
 -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서 미래차, 드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한다는 혁신성장 계획을 구체화
 - 정부는 혁신성장으로 2018년도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 6,000여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고 발표
 - 서울은 혁신성장 추진에 필수적인 업체와 인력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융합 산업 기반 신시장 창출과 핵심 혁신거점 조성으로 혁신성장 도모
 - 스타트업 생태계 질적 고도화, 스마트콘텐츠 산업 등 신융합산업 육성 신규 핵심 혁신거점 등 초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 도모

■ 추진여건 및 현황

- 서울시는 2018.1.31. 5개년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표
 - ‘서울경제지도를 다시 그린다’란 비전하에 2022년까지 3조 4천4백억 원 투자 계획
 - 서울 곳곳에 창업과 기업지원 시설 66개를 조성하여 9,396개 기업과 스타트업 입주, 5년간 총 6만 2,533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 핵심내용
 - 도심제조업 집적지에 스마트 앵커 20개 및 동대문에 서울패션혁신허브 조성
 - 홍릉과 창동·상계 일대를 세계적 바이오-ICT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조성
 - 마곡, G밸리, 양재에 도심형 R&D 단지 조성, 국내외 기업·연구소 유치
 - 남산-DMC, 문화콘텐츠와 VR/AR 및 디지털 사이나지의 핵심거점으로 조성
 - 창업지원시설 90개로 확충, 혁신성장펀드 1조원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
 - 혁신기술이 실험되고 교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공공 테스트베드 조성

■ 추진방향 및 전략

- 추진방향: ‘산업+거점’의 기본적인 서울시 산업정책 틀 위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구체화
 - 서울시 산업정책의 기본 틀과 기초를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
 - 새로운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혁신의 내재화/절차화 추진
- 추진전략: 거점, 창업, 산업 측면의 대응전략 구체화
 - 거점: 선택과 집중으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거점 중심 성공 사례 창출에 초점
 - 창업: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원천인 창업/스타트업 지원 체계 재편
 - 산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새로이 부상하는 융합산업 육성 수요에 대응
- 거점: 전략적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 가시화
 - 홍릉, 창동·상계, 마곡, G밸리, 양재, 남산, DMC 등 다수의 거점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는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혁신성장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체감 극대화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대학, 연구소, 병원, 산업단지 등 주요 앵커 중심의 도심형 혁신창업 생태계인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 조성 추진
 - 신규 거점의 개발 못지않게 향후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거점 사업 간 우선순위의 설정과 집중 필요
- 창업: 창업과 성장을 아우르는 성숙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선도
 - 지역의 혁신역량을 활용/보완하고 연구개발에서 사업화로 용이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 및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

- 산업 간, 기업 간 혁신 네트워크 구성 및 결합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혁신에서 성장까지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창업생태계 지원체계의 질적 고도화 추진
-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시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지원**
 - 기존 산업 구분에 따른 개별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융합 분야로 떠오르는 스마트 콘텐츠 산업, 스마트시티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 서울 여건을 감안해 R&D, 서비스업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제조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도모
 - 또한 4차 산업혁명 창출을 위한 인재육성에 주목하여 대학과의 협력체계 강화, 기술교육원 혁신, AI스쿨 확대 등의 사업 추진
 - 서울시 자체 규제 개혁 및 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및 지역상생 도모

■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과제 1】 거점/전략적 산업거점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로 육성(신규제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지역거점 사업 중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점에 우선순위 설정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도시재생, 캠퍼스타운, 지역거점 등 서울시 거점사업 계획은 조만간 200여 개에 육박하게 될 전망
-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조성도가 높은 산업거점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적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
 - 주거, 상업, 업무, 혹은 지역 중심과 구분되는 서울시 전반적인 먹거리를 견인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략적 산업거점 사업 추진 시급
- 대학, 의료기관 등 R&D 역량이 강한 앵커기관 중심으로 기개발 지역 내 도심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 4차 산업혁명 대응 공간전략모형으로 부상
 - 바르셀로나의 @22, 보스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공식적인 R&D와 비공식적인 창업/스타트업 연계를 함께 포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서 등장
 - 성공적인 혁신지구의 조성에는 경제적, 물리적, 네트워킹 3대 자산의 균형 잡힌 지역 자산 구조 구성이 필수적이며 서울시는 이러한 자산의 잠재적인 규제자, 매개자, 그리고 참여자로서 역할 담당 가능
- 차후 본격적인 혁신지구 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본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거점 사업을 조정하여 우선적으로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시행체계 마련이 시급
 - 현재 경제진흥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등에서 본부별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지역거점 사업 우선순위 체계 정비 필요
 - 이어 서울산업진흥원, 디지털재단 등 관련 중간조직을 초기부터 사업에 결합시켜 업계, 학계 등 현장과의 지속적인 인터페이스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선행 사업 추진
- 실제 적용 시 혁신지구 선별과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현장상황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존재하고, 진행률이 높으며, 소규모라도 확실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점에서 시작하는 방식이 혁신지구 모형과의 적합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방안
 -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전략적 산업거점 중 마곡, DMC, 홍릉 등의 혁신지구 적합성이 여타 거점보다 높은 잠정적 평가가 가능

【과제 2】 창업/서울 스타트업 플랜 2.0 추진(신규제안)

- 서울시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업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창업에서 성장을 견인할 체계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의 운영 규모에 비해 매출효과가 미미하고, 스타트업의 입주선호도 민간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성장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수요 존재
- 양적 지원 위주에서 '혁신에서 성장까지'를 포괄하는 질적 고도화 추진
 - 시정접점을 높이며 다양한 스타트업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 구축
 - 또한 협업과 peer-pressure가 일어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코워킹 스페이스 권장
 - 창업시설 내 투자, 법률, 마케팅, 해외진출 상담 등 무형의 창업 인프라를 유치하여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 혁신 청년 스타트업과 소셜 벤처를 집중 육성 대상으로 지정
 - 청년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충, 청년 혁신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로 모색
 - 소셜 벤처를 통해 벤처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모

【과제 3】 산업/스마트콘텐츠 산업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공약사항)

- 현재 콘텐츠산업의 중심축이 레거시 콘텐츠산업에서 스마트콘텐츠 산업으로 확장·전환하는 만큼 인공지능, VR/AR, 5G 등의 신기술과 결합하여 시공간이나 기기의 제약 없이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서울의 전통적 강점인 콘텐츠(C) 제작기업의 개방형 혁신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성 담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오픈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운드, 그래픽, 이미지 등에 대한 오픈소스 접근성 강화 및 스타트업 대상 저렴하고 자유로운 제작 지원
- 기업의 신기술 수용력 레벨업
 - 인력 교육, 공동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한 콘텐츠 전문대학원과의 연계 강화
 - 장비 지원 보다는 신기술 강의, 단기 훈련 프로그램,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현재 스마트 콘텐츠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암 DMC를 소프트 인프라 제공 거점으로 육성
- 스마트 콘텐츠산업의 플랫폼 접근성 강화
 - 플랫폼사, 중견 콘텐츠, 스타트업 컨소시엄 구성, 데모데이 활성화 등 추진
- 상암 DMC 내부 및 여타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 제작기자-테스트베드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채택하여 홍대, 강남 등을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

【과제 4】 산업/어반 테크(Urban Tech) 육성을 통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 발굴 · 사업화(신규제안)

-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가 여부이며, 이는 상향적 스마트시티 계획 추진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상응
 - 스마트시티 산업의 핵심은 디지털 인프라 공급이 아니라 시민과의 접점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구현이라는 수요 창출
 -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 기반한 안정적 시장창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 채택이 주요
- 서울시는 도시문제와 해법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주체로서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과 정보를 갖추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공유하여 산업으로 유도하는 기제는 다소 미비
-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기업을 어반 테크(Urban Tech)라는 명칭으로 함께 묶어 공공정책의 협력자로 고려하려는 시도가 등장
 - 어반 테크는 도시 관련 스타트업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모빌리티, 배달, 코워킹/코리빙(Co-working/Co-living), 자전거/스쿠터, 스마트시티, 부동산, 건설 등의 영역을 통칭
- 다양한 도시문제를 점검하고 솔루션을 모색하는 ‘녹서’ 발간 및 공론화 사업을 통해 정책 및 솔루션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어반 테크 기업 육성 추진
 - ‘녹서’ 제작 및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기업의 대안적인 솔루션 제안도 모집하여 평가
 - 우선순위가 높은 도시문제의 유력 솔루션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나 솔루션 R&D 발주 등 서울시 도시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이후 선별된 솔루션의 경우 공공구매/조달을 통해 서울시 행정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초기 유효시장 제공을 통한 어반 테크 기업의 발전 유도

2-5. 서울형 지역상생 전략

■ 추진 필요성 : 서울시가 왜 지역상생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구과소 지자체 증가 등 지역살림의 어려움 및 지역격차 심화 우려
 - 초고령사회(65세+ 20% 이상) 진입 기초지자체: 78개/228개(전국) (2017년 기준)
 - 30년 후 인구소멸위험 수준(지수 0.5 이하) 기초지자체: 85개/228개(전국) (2017년 기준)
 - * 인구소멸위험지수 = 가임여성(20~39세) 인구수/고령(65세 이상) 인구수(한국고용정보원)
 - * 0.5 이하 30년 후 인구소멸 우려(전국 가임여성인구 : 고령인구=13.4% : 13.1%, 2016)
- 지방정부의 만행이자 천만 인구의 배후시장을 가진 서울시의 지역상생 리더십과 지혜가 절실
 - 지방자치·분권이 시대적 화두이나 이로 인한 지역격차 확산우려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
 - 서울 거주시민도 사실상 타 지역이 고향이거나 타 지역 태생이 대다수
 - * 서울 토박이: 4.9%(3대 거주 기준, 2004), 40.3%(15세 이상, 서울태생 기준, 2010)
 - 서울 시장수요, 남아도는 일손과 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유흥자원 연계 등 상생지혜 절실
- 서울도 지속적인 탈 서울화로, 수도권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과 상생방안 모색 필요
 - 귀촌·귀농시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더불어 서울에 밀집된 혁신(정책)역량을 분산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 문화·관광·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에게는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 지역에는 새로운 기회창출 제공
- 특히 수도권 문제는 교통, 미세먼지, 안전, 주택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 방안이 시급
 - 수도권 문제는 공동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며 기반 조성

■ 추진여건 및 현황

- 서울시는 현재 전국의 50개 지자체와 지역상생교류협약을 체결(2017년 말 기준)
 -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0개(광역시 12개, 기초 38개) 지자체와 지역상생교류협약을 체결
 - 민선 5기 이전에는 광역지자체 중심의 단순 교류협력이었으나 이후에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업도 5개 분야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체감형 교류협력으로 영역을 확대
 - 완도, 포천, 진안, 함평 등 기초지자체 위주의 협약체결을 통해 실질적 주민체감형 교류확대
-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행정과 민간조직의 소통기능강화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매년 2회 개최, 재해재난 지원
 - 5대 권역별 세미나 개최(강원, 경기, 충청, 호남, 영남)로 지역별 개선방안 도출
 - 지역정책 우수사례 공유, 대구·여수 화재 등 산불·가뭄·수해·지진 등 타 지역 재해·재난 구호지원

○ 서울시는 2015년 6월 「지역상생 기본계획」 수립, 현재 5개 분야의 21개 상생사업을 추진

- 안전한 먹거리 분야 4개, 농어촌 체험, 교류활성화 5개, 유휴자원 발굴 및 협력활용 3개, 도농연계 일자리 창출 2개, 지속적 소통협력체계 구축 6개 사업을 추진 중
- 축제 및 문화관광행사 위주의 단순협력에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일방적 지원이나 시혜적 방식에서 상호호혜의 방식의 진화 중
- 체류형 귀농지원, 한강공원 문화장터 등을 시행하는 한편,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분야	사업	분야	사업
안전한 먹거리 확보	1. 도심형 농부의 시장 운영 활성화	도농연계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14. 도시 중장년층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류협력
	2. 추석 명절 서울장터 운영		15. 귀농·귀촌 희망가족 맞춤형 영농 교육 운영
	3. 지역 간 전통시장 상호협력 및 공동 마케팅 추진	지속적 소통·협력 체계 구축	16. 지역상생포럼 구성·운영
	4. 김장문화제 참여를 통한 부재료 판로 개척 협력		17. 서울정책 연구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농어촌체험 교류 활성화	5. 지역청소년 간 역사·문화 체험교류		18. 지역 온오프라인 홍보플랫폼 운영
	6. 서울지역간 문화·예술분야 상호교류		19. 지역 재해·재난 복구 및 구호 공동협력
	7. 어린이 농어촌 체험 및 교류확대		20.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정책 공유
	8.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협력		21. 신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9. 지역 청년 간 상호교류 추진		
유휴자원 발굴 및 협력활용	11. 지역 폐교 활용 자연체험 캠핑장 조성·운영		
	12.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13. 지역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 마련		

○ 중소 가족농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

- 서로 월장(연 5회, 광화문 광장), 서로 살림(연 6회,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등
 - 서로 월장: 117개 시·군 151개 팀 참여, 서로 살림: 85개 시·군, 94개 팀 참여

○ 도농 일손 교류 확대

- 4개 시·군(상주, 창녕, 영암, 강진), 9회 집행, 총 159명 교육 및 사업 참여(연 인원 699명)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상생교류센터, '상생상회' 개관 준비 중

- 서울 종로 율곡로 39번지 안국빌딩 신관에 7월 중 개관 예정
 - 주요 역할은 전국 각 지역의 먹거리, 관광, 축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전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

○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교류협력의 기본 틀은 조성되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 확산은 초기단계

- 기존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특히, 초기단계에서 요구된 공급자 중심의 추진방식, 일부 일방적인 지원 및 시혜성 사업은 재검토 필요
- 분절된 개별 단위협력 사업의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및 가시적 성과 창출이 미흡
- 사업 편의성에 치중하여 전 단계에서 특색 있는 지역단체 및 민간 참여도 미흡한 편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실태분석 및 성과관리가 다소 미흡
- 상시적 정보교류 및 협의 창구 미비, 일정과 장소의 수시 변경 등 참여자 및 시민 불만 등 한계
 - 다만, 상시적 협의 창구 문제는 8월 중 개관 예정인 '상생상회'의 출범으로 해소 가능
- **중장기적 목표를 새롭게 다지고, '상생상회'를 통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전략마련 필요**
 - 기반이 조성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시민체감형 사업 발굴 및 확대에 초점을 맞춰 추진 필요
 -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노력과 성과 재점검하고 '상생상회'의 개관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준비

■ 추진방향 및 전략

【추진방향】

- **기존의 노력과 성과점검을 통하여 제2 도약을 위한 중장기 목표체계 재정립**
 - 현재까지 지역상생 교류협력 사업은 서울시 주도로 수립된 「지역상생 기본계획」(2015. 6.29.)에 의존하여 추진
 - 그 간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는바, '상생상회' 개관을 계기로 성과를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와 시민체감성을 바탕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제2의 도약을 추진
- **민관협의체 확대개편을 통하여 우호교류협력 체결 및 사업추진체계 재정비**
 - 시도지사협의회, 수도권정책협의체 구성 등 지역과 협력을 위한 다각적 민관협력기반 마련
 - 공감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체계를 통해 시민체감 및 성과 제고

【추진전략】

- **단기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정책, 일방적 수혜에서 쌍방향 상생발전 사업으로 진화**
 -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안목의 신뢰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이라는 인식 제고
 - 서울시 주도 사업에서 농촌(지역)이 도시(서울)에 요구하는 사업과 도시(서울)이 농촌에 요구하는 사업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쌍방향의 시너지 창출사업으로 발전 유도
- **사업 자체보다 지역 간 사람 네트워크, 신뢰구축, 정보교류 중심의 공감대 확산이 관건**
 - 서울과 지역 간 공공, 중간지원조직, 지역리더 등 인적 네트워크 확산과 자발적 참여, 조직화 등을 통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으로 지역상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 **공감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유사사업 통합과 개별사업 간 연계강화로 시너지효과 제고**
 - 현재 시행부서별로 분절화된 단위사업방식에서 정리할 사업, 통합할 사업 등으로 재분류하고 공감대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연관 사업을 패키지와, 브랜드화 추진
- **개별적 단위사업을 통합적으로 총괄기획 조정할 민·관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 현재 개별 시행부서로 분산된 상생사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
- 교류협력단위를 광역에서 기초로 전환하고, 전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와 활력 강화
 - 상생교류 추진체계에서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 단계(의제설정, 실행, 평가, 환류)에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선순환 프로세스 구축

제2 도약의 핵심: '정책 수혜자'에서 '창조적 참여자, 생산자'로 역할 전환 유도

■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과제 1】 상생사업의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로서 (가칭) '지역상생교류 민·관협의회' 설치(신규 제안)

- 상생사업은 다양한 영역 및 이해관계로 단일분야 한정이 어렵고 능동적인 유연성이 필수
 - 지역상생사업은 성격상 관련 이해집단이 공공기관, 민간단체, 의제별 네트워크로 다양하여 표준화, 정형화가 어렵고 사업영역이 다양하여 단일한 분야로 한정이 곤란
 - 다양한 분야의 민·민, 민·관, 관·관 간 협력촉진, 특히 민간주체들의 역동적 교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므로 중간지원전문기관이 필요
- 현행 상생사업은 개별 부서별로 추진되어 민간 활력의 활용과 통합·조정기능 미흡
 - 상생사업은 서울시 15개 실과 16개 팀에서 개별 수행하여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공급자 중심의 유연성 미흡
 - 총괄조정부서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이나 총괄업무가 과다하고 전문성과 통합·조정 기능 미흡
 -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 있으나, 대외협력과 산하조직으로서 위상, 인력(8명)과 예산의 제한으로 한계 노출
- 상생사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단계별 민·관 컨트롤 타워 협의체 구축
 - 행정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민관협력의 의제설정, 실행, 평가 및 환류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담은 실행계획 수립,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는 (가칭) '지역상생교류민관협의회' 설치
 - 1단계: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조정 및 촉진자로서 민간위탁이나 재단설립을 통한 민·민, 민·관, 관·관 네트워크 구축과 실행전략 수립 (사례: 사회적경제지원센터(27명), 50+ 재단(29명))
 - 2단계: 별도 예산과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넘어선 법인격을 모색하고 공공성 높은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구조를 구축
 - 3단계: 민간과 지자체가 출연하는 공동의 법인체(재단)설립으로 정부와 민간사업 동시 추진(사례: KOICA) (김일영, (주) 위즐 소사이어티, 2018)

【과제 2】 지역상생포럼의 확대 개편을 통한 상호 배움의 장 마련(기존 정책)

- 지역상생포럼의 확대개편을 통해 서울시 정책 우수사례 발표 및 실무자 토론
 - 서울시 상생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설문결과, 서울시 정책 우수사례 정보교환을 가장 선호
 - 현재도 서울시는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의 '서울혁신로드'라는 이름으로 타 지역 지자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책현장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 개편하여 내실화 필요

- 단순한 현장투어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서울시 정책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 관련 실무 담당자들과 질의응답 및 집중토론 시간 마련 등 내실화 프로그램 추진
- 지역상생사업 중 우수사례 표창, 성공 및 애로요인 집중토론 및 결과반영 의무화
 - 5대 분야, 21개 사업 중 괄목할 성과를 보이는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발표하여 노력의 보람과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공유가 중요
 - 현재도 모니터링과 평가는 일부 수행하나 이를 확대 개편하고 무엇보다 지자체 단위의 적극적 지역상생활동은 서울시가 거의 유일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 및 홍보가 필요
 - 우수사례는 서울시장의 표창으로 격상하고 토론의 주요결과는 차기년도 정책사업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

【과제 3】 유사사업 조정 및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신규 제안)

- 기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한 유사 사업 재조정 및 사업간 연계 강화
 - 현재 시행 부서별로 분절화되어 있는 일부 유사 사업(도시농업과 농부시장, 서로월장 등) 조정하고 긴밀한 협의 없이 개별 추진되는 일부 사업(중소농 농산물 판매 vs.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 등)의 연계성 강화
- 공감대 높은 신규,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사업 패키지와 및 정책 브랜드화
 - 기존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공감대 높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사업을 묶어 패키지화, 브랜드화 및 홍보
- 개별 사업별 참여주체, 참여지역별로 수행되는 민관협력세미나, 권역별 토론회 연계 강화
 - 농부의 시장 참여자, 서울캠핑장 운영자, 청소년 교류주체 등 별개의 사업으로 존재하는 참여주체나 지역의 상호이해 증진과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

【과제 4】 서울의 청년층 특성을 감안하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한 도농교류 활성화(신규 제안)

- 청년기는 당장의 일자리보다 ‘일-진로’ 경험 탐색과 배움의 시기임을 인정
 - 뉴욕보다 농촌이 더 낫선 서울청년들은 농촌 일상과 삶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동기 유발이 중요
 - 서울청년의 농촌지역 교류에는 다양한 관심과 목적(쉼, 여행, 진로, 창업, 귀농, 먹거리 등) 존재
 - 청년 귀농귀촌, 도농교류에서 거점 역할을 하는 모임과 단체들의 안내, 코디네이터 역할 적극 지원
 - * 일반적 진입 과정: 관심단계-> 결심단계-> 유입단계-> 자립단계 (삼선재단, 2017)
- 서울 청년층 관련 지원정책 사업들과 연계하여 상생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서울의 청년수당, 청년 창업농(농식품부), 청년 뿌리단(행안부) 등 청년계층 지원사업과 기존 농촌청년조직의 연계 등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과제 5】 서울시-자치구의 합리적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마련(기존 정책)

- 서울시 지역상생사업의 추진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 현재 지역상생사업은 서울시 개별 담당부서와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주도로 추진
 - 상생사업은 대부분 소관역 단위의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만큼, 광역단위보다 서울시 자치구의 역할 강화 필요
 - 서울시는 정책수립, 예산확보,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등 총괄기획과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지원 기능에 집중하고, 실질적 사업은 자치구와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역할 분담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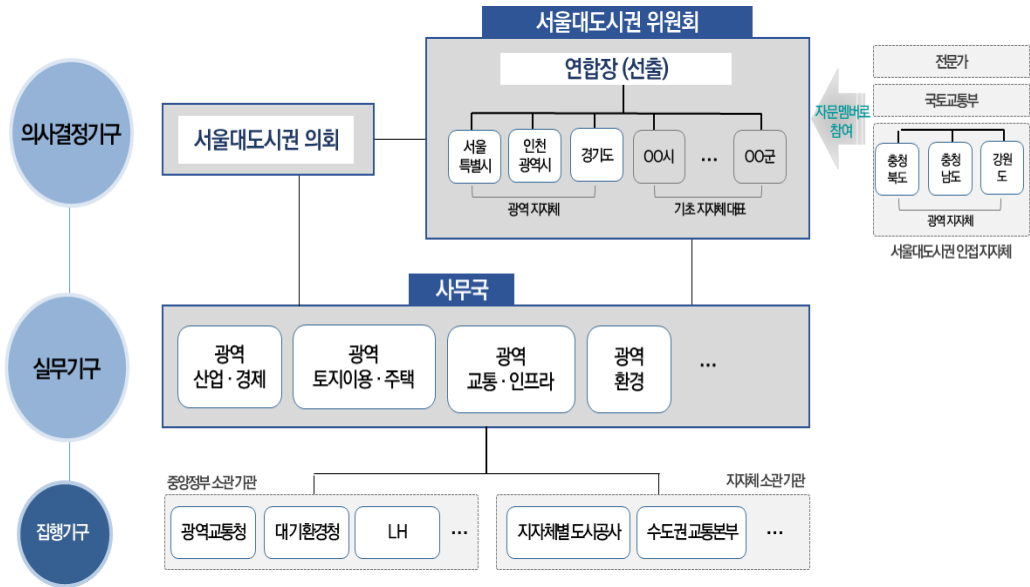
【과제 6】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을 통한 상생재원의 안정적 제도화(기존 정책)

- 수도권 지역의 ‘교육비 특별회계’ 및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조정
 - 현재는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 이를 세입으로 간주함에 따라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은 이중적 불이익이 발생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미발생 수입으로 처리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규모를 산정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융자관리계정’ 활성화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만료되는 2019년에 기금이 소진되어 지속가능성 확보, 지방채발행제도의 선진화, 지역발전 자원효과 제고 측면에서 융자관리계정의 활성화 필요
 - 융자관리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첫째,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된다는 전제하에 인상 확대분에 대해 융자관리계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둘째, 권역별 가중치 조정 후 확대되는 수도권 지방소비세분을 융자관리계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
 - 권역별 가중치 조정 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 적정규모는 권역별 가중치를 일부 조정 또는 폐지했을 경우 40~45%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비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 방안 마련
 -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조항 미흡
 - 단, 기금 조합장이 기금활용 사업성고가 우수한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는 가능하도록 임의 규정 설정
 - 그러나 성과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부재
 - 성과분석 방안으로는 가이드라인 제시, 성과분석 규정 제정, 성과분석 추진 주체 구성, 정량 및 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피드백 과정 도입 등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과제 7】 수도권 상설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도권 지역상생 도모(신규 제안)

- 수도권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공동운명체
 - 교통, 미세먼지, 안전, 주택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동의 문제 내포
- 수도권 지자체가 늘 협력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 구성, 공동협력 방안 모색
 - 상설협의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 가능
 - 설치 절차 및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된 대통령령상의 규정이 부재한 상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기관 구성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령 개정 필요
-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 ‘의회’, 실무기구인 ‘사무국’ 등으로 구성
 - 자문멤버로 전문가, 국토교통부, 서울대도시권 인접 지자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전문성 확보 및 연접지역과의 연관성 유지
- 의회는 소속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 일부를 의회 구성원으로 선임
 - 위원회는 소속 지자체의 장(광역, 기초 지자체 대표)으로 구성, 위원장은 지자체장 중에서 투표로 선출
 - 사무국은 관할 지자체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하고, 대도시권 계획을 수립

〈그림〉 수도권 협치기구 조직 구성도(출처: 메가시티 거버넌스 구축 계획 TF 자료)



2-6.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 방안

■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은 표면적으로 접근 채널과 교류 방식의 다양화를, 내재적으로는 신뢰구축을 위한 내적 통합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내적 통합의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사회문화 분야 교류 등 대부분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체감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남북한 주민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
 -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986년 동서독 간 도시 자매결연이 처음으로 맺어진 이후, 1989년까지 3년 동안 62건의 자매결연이 성사되었으며, 이러한 도시 간 교류협력 노력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과 동독 체제의 경직성 완화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통일정책에 대한 공론과 합의를 크게 형성시킬 수 있음
 -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받아들이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통일 담론을 확산시킬 수 있음
-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국제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일정부분 자유롭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 남과 북, 그리고 북한 내 경제 격차를 고려하였을 때,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격차 해소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음. 남북한 균형발전에 기여
- 지자체는 자체예산으로 민간단체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서울시의 조성액은 276억 원

■ 추진여건 및 현황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되었으나, 한반도 이슈를 둘러싼 긍정적·부정적인 내·외부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등의 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한 현장 시찰과 연구를 위한 회담이 진행 중,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큰 구상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남북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긍정적 외부요인 1) 남북한 정부 모두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 및 논의 중에 있음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과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사회주의 강성국가 완성 목표) 정책이 서로 부합하면서 정부 간 소통의 물꼬를 틔
- 남북한은 3월 6개 항목 합의를 시작으로 4·27 판문점 선언 공동발표를 이끌어냈고, 현재는 후속 실무회담(고위급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철도협력분과회담, 도로협력분과 회담, 산림협력분과회담)을 연달아 개최하고 있음
- (긍정적 외부요인 2) 북미 양 정부 간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짐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최대압박’에서 ‘최대관여’로 전환됨
 -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고, 7월 6~7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후속 협상이 시작됨
 -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한반도 이슈가 11월 중간선거 그리고 2020년 대선과 맞물려 있으면서, 협상을 지속시켜야 하는 추진 이유와 동력이 있음
- (부정적 외부요인 1)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힘들
 - 2006년 제1차 북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총 10회에 걸쳐 대북제재 조치를 취함
 -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10회의 대북제재 중 6회가 2016년 이후에 취해진 조치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때와 국제 환경이 완전히 다름. 즉 남북 간 합의와 의지만으로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없음
 - 한반도 정세의 대화국면으로의 전환과 상관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 4월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49곳을 신규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킴
- (부정적 외부요인 2)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강하며, 비핵화와 체제보장 방법에 대한 이견이 존재
 - 미국(일본 포함)과 북한(중국과 러시아 포함) 사이에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에 이견이 존재함
 - 북한 등의 단계적·동시적 해결책에 미국 등이 동의하지 않고 있음
 - 6월 22일 미국은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함(‘특별한 위협’ 언급)
 -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후 북미 사이에 또다시 연쟁이 발생함
 - 미국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 CVID에 대한 요구와 함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음
 - 미 의회는 끊임없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음
 - 3월과 7월 사이, 미 의회가 발의한 북한 관련 결의안과 법안 중 6건(9건 중)이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
- (부정적 외부요인 3)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 혹은 확대하려 하지만 두 국가 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무역전쟁의 부정적 영향도 받고 있음
 -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이슈에 대한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5월 3일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회담에도 불구하고, 6월 14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중하기 전까지 직접 적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5월 9일 트럼프와 시진핑 간 전화 통화)

- 북중관계의 급속한 개선이 미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시진핑 집권 이후 고위급 간 교류가 거의 없었던 북중은 최근 세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 긴밀한 공조관계를 형성, 이 과정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의 강경한 혹은 미진한 태도를 겨냥, 지속적으로 '중국 배후론'을 재기하고 있음
- (긍정적 내부요인 1)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내부적 조건이 성숙해 지고 있음
 - 정권 초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됨
 -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정책 추진의 내적 동력이 강화됨
 -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3월 15~1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00명 중 북한을 '협력 내지 지원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50.1%로 2017년 4분기 여론조사 결과보다 10.2% 증가함
- (긍정적 내부요인 2) 문재인 정부는 '분권형 대북정책'과 남북교류협력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 추진 등을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 제시함
 - 4·27 판문점 선언에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라는 문구가 삽입됨
 - 2017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가 구성되어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연 2회 개최되고 있음
- (부정적 내부요인 1)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권을 포함한 범국민적 합의와 공조 여전히 부족
 -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표류 중
 - 정부의 5·24 조치 해제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음
 - 안보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여전히 43.8%에 불과(민주평통 6월 19일 발표)
- (부정적 내부요인 2) 지자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제한적임
 -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2009년 12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제12조 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표현이 삭제됨
 - 통일부가 인가한 대북사업단체를 통해서만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

■ 추진방향 및 전략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선별적·단계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분야
 - 문화·체육 교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에 부합
 - 인도주의 지원: 임신후와 수유여성, 5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 및 의료 지원, 북한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 비영리 공공 인프라 사업(2375호 18항):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 하에 합작투자 회사 또는 협력회사 운영 가능

- 북한의 정치 체제 고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 및 연구 지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협력 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는 비정치적인 사업 위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옴
 - 인도주의 지원: 긴급구호, 개발구호, 개발지원
 - 사회문화 교류
 - 농·축·산림 분야 협력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계획 및 추진
 - 일방주의가 아닌 쌍방의 이익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려 필요
 - (경협일 경우) 공동 현장 시찰과 연구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음
- 남북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별로 다양한 행위자와의 협력 관계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국제기구/관련 국가 및 도시
 - 서울시의 자매/우호 도시, 그리고 가입한 국제기구 등을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음
 - : (18.01) 자매도시 23개, 우호도시 39개
 - : (18.05) 서울 소재 정부 간 국제기구 15개, 준정부 간 기구 7개, 국제비영리단체 8개
 - : (17.02) 서울시 가입 국제기구 18개
-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 참여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 주요 추진사업 및 과제

-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
 - 2016년 서울시는 ‘공동이익’, ‘협력·분담’, ‘참여·지지’를 기본원칙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교류’를 목표로 하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발표함

〈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

I. 도시인프라 협력	
①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 ○평양 취정수장, 상수관망 정비 ○평양 하수처리장 개량 지원 ○(중장기과제) 서울-평양 수도공사 설립	추진가능 시범사업 ①평양시 누수탐사 사업 ②평천오수정화장 개선지원, 하수관로 조사
②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	

◦재난·안전 분야 기술·인력 교류 ◦(중장기과제) 재난대비 장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지원 ③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평양시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지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교통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④ 도시환경 개선 ◦평양 관련 전시회·심포지엄 개최 ◦살림집수리 시범사업 시행 ◦평양형 시민주택 모델개발, 소단위 도시재생 협력기구 구성	추진가능 시범사업 ①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②버스정보시스템 설치·운영, ③교통신호시스템 설치·운영
II. 경제협력	
⑤ 산업협력단지 조성 ◦서울-평양 국제 영화제 개최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협력 ◦(중장기 과제) ‘남북애니센터’ 건립 지원 ⑥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평양 유희공간 태양광 설치 ◦평양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평양시 공공부분 LED 보급 ◦(중장기과제) 서울-평양 ‘태양광 도로’조성 ⑦ 산림자원 공동이용 및 식생·동물자원 교류 ◦산림자원 공동이용 토대 마련 ◦남북한 식생·동물 종자교환 및 기술교류협력 ⑧ 기술표준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평양 WeGO 가입을 통한 전자정부 전파 ◦서울-평양 전자정부 구축 협력 사업	추진가능 시범사업 서울-평양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최 추진가능 시범사업 평양시 유희공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추진가능 시범사업 식생·동물 종자교환, 희귀종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III. 시민교류	
⑨ 역사, 문화, 체육, 학술 교류 ◦서울-평양 역사도시 학술대회 ◦역사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협력 ◦서울-평양 체육 교류 ◦서울-평양 음악·미술·미용 등 교류 ◦언론·미디어분야 교류 ⑩ 보건의료 협력 ◦결핵제로화 사업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 ◦보건의료인력 협력사업	※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류추진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

○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추진 방향과 전략에 따라 재조정 필요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유형에 따라 3대 분야 10대 과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 우선과제 역시 선별적으로 단독 혹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 시민교류 우선 추진 과제: 경평축구 재개, 제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서울-평양 학술교류
 - 경제협력 분야 우선 추진 과제: 식생·동물 종자교환, 희귀종 공동연구, 양묘장 현대화 사업

- 도시인프라 분야 우선 추진 과제: 대동강 수질개선, 평양 상하수도 개량, 재난·안전 교류
-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상시과제를 내부적으로 추진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 시민 참여 다양한 사회문화 행사 개최
 - 국내·외 학술대회/포럼 개최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표〉 서울-평양 교류협력 단계별 사업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			통일기반사업
분야	우선 과제	중장기 과제	상시 과제
시민 교류	①경평축구 ②제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 ③서울-평양교향악단 협연 ④보건의료협력 :평양시 결핵관리 역량 제고 :영·유아 건강 지원 :보건의료인력 교류 등 ⑤서울-평양 학술교류	①언론·미디어 분야 교류 ②문화재 세계유산 공동 등재	①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대북 관련 민간단체 지원 :서울시 자매/우호도시들과 협력 :도시단위 국제기구 활용 ②시민참여 다양한 사회문화 행사 개최 :(통일교육원 연계)시민대상 통일교육 :통일과 평화 주제 음악회, 전시회 :의견수렴 온라인플랫폼 구축 ③국내·외 학술대회/포럼 개최 :서울평화포럼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④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⑤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경제 협력	①식생·동물 종자 교환 ②희귀종 공동연구 ③양묘장 현대화 사업	①산업협력단지 조성 :서울-평양 국제영화제 개최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및 마케팅 협력 ②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③산림자원 공동이용, 탄소 배출권 확보 ④기술표준통합 공동사업단 구성	
도시 인프라 협력	①대동강 수질개선 ②평양 상하수도 개량 ③재난·안전분야 교류	①재난대비 장비 및 관리시 스템 지원 ②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지원 :버스정보/교통신호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③도시환경 개선 :평양형 시민주택 모델 개발 등	

Ⅲ. 분야별 추진과제

Ⅲ. 분야별 추진과제

【복지 분야】

■ 여건 및 현황

- 민선 6기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 생활권리 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공공복지의 전달체계 패러다임 대전환
 - 청년들을 위한 청년수당 지급 및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제 실시
- 어르신 및 장애인 친화도시의 기반 마련
 - 체계적인 50+세대 지원대책 마련, 노인요양 데이케어 센터 확충
 -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 여성이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마련
 - 여성안심특별시 추진으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공공책임제 완성
- 현재 저출산은 심화 장기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에 진입하였으며 합계 출산율은 0.94로 최저수준임
 - 노인빈곤율 및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평균의 2배에 달함
- 이로 인해 변화하는 인구구성 및 가구구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확대
 - 서울의 가구형태는 1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어르신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복지와 고용의 통합 모델 구축
 - 사회적 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확대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분야 공공일자리의 창출
 -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차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분야 일자리의 질 향상 확보
 - 어르신, 장애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확산과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
- 서울시는 ‘노동 존중 서울시 만들기’를 목표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과 노동자 권리보호 등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기반 마련
 - 서울시는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 고용불안정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
 -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생활임금제’ 시행, ‘노동복지센터’ 활성화 등 좋은 일자리와 취약 근로자 권리보호 정책을 시행
-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

- 2014년 기준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는 238만 개로 2011년부터 3년간 약 1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72.9%를 차지함
- 취업계수도 전체 산업 평균이 6.6명(2014년 기준)인 데 비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41.3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큼
- 새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에 있음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
-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정책의 추진방향

- 추진방향 1: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 공공부문 고용률이 21.3%(2013년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고용량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2: 다종다양한 전문 서비스 인력의 확대
 - 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한국에는 없는 직종을 개발하여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직종 창출
- 추진방향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양질의 교육 체계 마련
 - 승급체계 마련을 통해 근로 지속 유인책 마련
- 추진방향 4: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충분한 돌봄지원 방안 마련
 -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체계 강화
 - 장기요양보험이나 활동보조인으로 부족한 돌봄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추진과제

【과제 1】 사회복지분야 공공인프라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확충
 - 공공요양시설을 40개에서 70개로 확대하여 국공립비율 13% 달성
 - 국공립어린이집 2020년까지 1,930개소까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2020년까지 50% 달성

○ **남비현상이 심한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개발 시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 의무화
- 사회복지관 등 여가시설 건립 시 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통합형 복지관 건립을 유도

【과제 2】 포괄적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 **요양보육,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포함된 공단 설립**

-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위해 TF 운영 중
- 주로 요양과 보육을 대상으로 공단설립을 검토하다가 최근 보육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단계적 확대 추진을 하더라도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중장기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검토

○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만관협력 위원회 구성**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요양, 보육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 시설과 종사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
- 민간의 관련분야 관계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연구자, 서울시 공무원 등이 참여한 만관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치 방식으로 설립 추진

【과제 3】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발굴

○ **서울형 신규 사회서비스 직업 발굴**

- 사회서비스 직업 발굴 센터를 두고, 직업정보 DB 구축 및 교육 지원
- 해당 직업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우선적으로 요양시설케어매니저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케어매니저 도입**

- 일본의 인력배치 기준 시설 수급자 100명당 1명의 케어매니저를 배치할 경우, 1,689명 고용창출 가능
-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 1개소당 사회복지사, 개호예방매니저먼트, 주임케어매니저를 배치하고, 노인 6,000명당 1개소를 설치할 경우 1,150개소에서 1,150명 고용창출 가능

【과제 4】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울형 돌봄체계 구축

○ **요양보호사 및 노인돌봄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돌봄 제공시간 확대 방안 마련**

- 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 수당 인정 및 시간당 인건비의 생활임금 적용방안 마련
- 노인돌봄 시간의 확대를 통한 노인돌봄의 연속성 및 지속성 확보

○ **장애인활동보조시간의 현실화를 통한 가족의 부담 경감 및 돌봄 확대**

- 장애인활동보조인력 확대 및 활동시간 인정범위 확대로 원하는 시간만큼 욕구에 맞는 돌봄 제공

【보건 분야】

■ 여건 및 현황

- 서울시는 전국 최초 환자안심병원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찾동 방문간호 전 동(洞) 확대로 촘촘한 어르신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보건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수준 간 기대수명과 자치구 간 건강수명의 격차는 커지고 있음
 - 기대수명: 2010년 81.68세 → 2015년 82.28세
 - 지역 간 건강수명의 격차: 금천구 '10년 80.70세로 서울시 평균과 1.2세(14년)로 격차 확대
 -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격차는 5.98세(2012년~2015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
- 권역별 공공의료 인프라가 불균등하며, 보건의료사업에 자치구 참여 및 시립병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보건소, 민간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미흡
 - 전국 평균 대비 서울시 공공보건인프라 취약
 - 증가하는 공공보건서비스 대상자를 추후 연계할 전문적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족
 - 보건기관 1개소당 평균 관할 인구는 서울시 160천 명, 전국 15천 명
 - 찾동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를 연계할 지역보건인프라 미흡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의료비도 크게 증가
 - 의료 수급자 증가율: 4.9% [232천 명('10년) → 244천 명('15년)]
 - 의료비 지원 증가율: 32.2% [664십억 원('10년) → 878십억 원('15년)]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 '16년 130만 명(전체 인구의 12.6%), 치매환자 13만 명(10%)으로 추정
 - '30년 210만 명(전체 인구의 22.3%), 치매환자 21만 명(10%)으로 증가 예상
-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및 부양 부담감 증가
 - 치매 환자 의료비는 '11년 16만 명(7,630억 원) → '15년 46만 명(1조 6,285억 원)으로 약 3배 증가 (70세부터 급증, 90세 이상 10명 중 3명 치매)
 - 치매환자 가족의 80%에서 우울 혹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경험
- 요약하면, 서울시는 현재 건강행태와 의료이용을 포함한 1) 건강형평성이 좋지 못하고, 2) 저소득층은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3) 고령화를 대비할 수 있는 4) 서비스 제공체계가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각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
- 건강형평성 측면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시립병원의 종합병원화 추진, 권역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시립병원 설치, 장애인 재활, 권역별 응급의료 대응 강화 등에 대해 공약하였고, 제공체계의 경우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환자안심병동 2.0 업그레이드로 노인친화 건강증진 시립병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의료비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가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서울부양자제도’ 도입을 공약하였고, 서울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를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고 공약함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건강형평성 개선을 위한 시정 운영
 -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격차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필요, 서울연구원(2017) 보고서 참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의료의 질 모니터링 필요, 합병증 발생률, 30일 내 재입원율, 예방가능한 입원율 등 지표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시정 운영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보건사업 이후의 지역사회자원 연계
 - 보건소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보건지소 확충 및 보건소 기능 개편
- 고령화 대응 시정 운영
 - 국가 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른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추어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방향 제시
 - 어르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치매지원센터 기능 강화
 -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발견 인식개선 시스템 강화
- 도시보건지소 확충
 -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주민참여 운영체계 강화
 - 걸어서 20분 거리 내의 장소를 선정하여 보건지소 확충
 - 이를 위해 신축 예정 관공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등을 사용 예정지로 확보하는 것 고려

■ 추진과제

【과제 1】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모니터링 및 건강습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 의료급여자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격차 분석
 - 의료급여자의 건강수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 수행 중)
 - 서울연구원(2017)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예방가능한 입원 확률이 높아, 의료의 질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합병증 발생, 30일 내 재입원에 관한 지표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
 - 시민건강포인트 제도의 참여 자치구를 현재의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동네 의원과 보건소를 포인트 적립기관으로 포함

- 포인트 적립 항목에 걷기 실천, 금연, 체중조절 등 건강행태 개선 항목을 추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저소득층의 실질적 구매 욕구가 높은 사용처인 전통시장, 일반식당, 의약품 구매 등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유도
- 공공병원에서 시행 중인 301네트워크, 찾동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의료수급자의 맞춤형 보건 및 의료,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 '301네트워크'는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일부 제공해주는 사업임
 - 미국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환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시도했던 방안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의료취약계층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
 -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방향 제시
- 서울시립 중간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ies; ICF) 신설
 -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보건서비스 제공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사한 시설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인데, 요양병원은 입원 자격기준이 없고 장기요양시설 또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을 뿐 입소 시 자격기준 부재
 - 미국의 전문간호시설(SNF: Skilled Nursing Facilities)을 바탕으로 서울시 중간시설의 입·퇴소 기준, 진료비 지불방식, 인력 규모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 구성: 시민건강국, 복지본부,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연구원 등
 - 역할: 서울시 의료급여 정책방향 설정 및 평가, 각 기관 간 연계방안 모색

【과제 2】 치매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 국가 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른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추어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방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어르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치매지원센터 기능 강화
 - 서울시 25개 '지역치매지원센터'별 인력 확대 및 치매관련 어르신 정신건강프로그램 강화
 - 저소득층 어르신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집중사례관리 돌봄 강화
-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치매가족 카페 운영,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그룹홈 운영 추진
 - 치매카페 설립 시 운영 컨설팅 제공,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 지원, 영업일당 소액의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을 고려
 - 민관협력으로 등급 외 경증 치매어르신 관리를 위한 기억키움학교 14개구 → 25개구로 확대

○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발견 인식개선 시스템 강화

- 환자 자신, 가족, 이웃 등이 치매지원센터에 직접 의심 보고를 하거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동주민센터 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등의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의뢰가 가능한 통합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건강사정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동의 구득 필요

○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2015)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건설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인 도로·공원 위주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공기여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치매노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구성: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팀장,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전국 223개), 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 구청 복지과 과장 등
- 역할: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소외되는 노인은 없는지 등을 월례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이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제 3】 걸어서 20분 거리 내 보건소 확충

○ 서울시 생활권 계획(5개 권역, 116개 지역생활권)과 연계하여 '22년까지 100개소 단계적 확충 추진

○ 모든 보건소는 걸어서 20분 거리 내 위치하도록 함

- 건강분야의 대폭적인 재원 확충으로 '22년도까지 100개소 보건지소 확충 목표
- 보건지소가 없는 취약지역에 우선 신규 확충(8개구)하고 향후 116개 생활권 확충 추진

○ 서울연구원(2018)에 따르면, 보건소 접근성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함

- 강동구의 경우, 거주지 기준 1km 내에 보건소가 위치하는 경우에 흡연과 고위험 음주율이 낮았으며, 절주 시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음.
- 이영아(2001)에 따르면, 보건소 이용은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시의 경우 추가적인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통해 장애인, 노인의 실질적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보건소 이용자의 41.5%가 1km 이내 거주하고 있으며, 결론을 통해 거주지 반경 500m~1km내 보건지소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거지 기반 접근성 분석을 통해 걸어서 20분 거리 안에 누구나 보건소 접근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여 보건지소를 우선적으로 확충

- 이를 위해 신축 예정 관공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등을 사용 예정지로 확보함

-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주민참여 운영체계 강화
 - 재할 및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을 기본으로 전문적이고 통일된 운영체계 구축
 - 주민이 보건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능동적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보건서비스 지원

【마을자치 분야】

■ 여건 및 현황

-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7년간 저변 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 저변 확대: 마을사업 참여자 최대 23만 명, 주민주도 공동체 공간 331개소 조성, 25개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완료
 - 주민자치 활성화: 55개 동 찾동 마을계획 수립(2015~17), 26개 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설립 중 (2017~)
 - 한계와 과제: 청년/남성/저소득층 등 참여 부족, 지역 자원 축적 및 활용 저조, 공동체 공간 운영 유지율 하락(4년 차 69.1%),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인력 부족(평균 2.6명) 등
 - 2017년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선 7기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제시(연구 책임: 서울연구원 안현찬)
-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 중앙정부는 서울시 찾동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舊 혁신읍면동) 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
 - 주민자치 관련법 개정, 주민자치 공가제도 도입,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원, 주민자치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등 제도 개선과 유관 사업 연계를 다각적으로 추진 중
- 박원순 후보, “마을공동체 2.0 추진 공약” 발표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박원순 후보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공약 제시
 - [더불어특별시] 31.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양호한 주택 공급
 - 마을 단위 종합주거지 재생계획 수립: ‘10분 동네’ 단위로 주민이 직접 수립하고, 공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
 - [더불어특별시] 35. 마을공동체 2.0 추진 - 공동체 활동에서 자치하는 마을로
 - 동 주민자치 제도 혁신: 추천제 주민자치기구 구성, 주민총회에 계획 및 예산권 부여
 -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원: 주민자치회가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 일부는 마을기금 조성
 - 마을 활력공간 조성: 구당 3곳씩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립 운영하는 공간 조성
 - 박원순 후보 공약은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7)의 주요 추진과제와 거의 동일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서울시 주민자치 정책 융합을 통한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 협력형 모델을 바탕으로 찾동 마을계획, 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등 민선 5~6기 서울시정의 고유한 동 단위 주민자치 정책의 장점과 성과를 융합한 모델
 - 민선 7기에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해당 주민조직과 구성원들이 통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립, 운영하여 주민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와 함께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원, 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지위 부여, 통합형/주민조직형 모델 실현을 위한 법 개정 등 지자체 차원에서 불가능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
- 자립적인 공동체 및 자치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 지원
 - 행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서는 주민 공동의 자산 축적과 공적 활용을 위한 규약 필요
 - 공동체 활동시간, 재능 기부, 현물 제공 등 비현금 공동체 자원을 행정 지원에 상응하는 자부담으로 인정하여 공동체 자원의 동원, 활용, 축적을 촉진
 - 공동체공간, 마을기금 등 자립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자산 확충 및 공적 활용 지원
- 주민자치회 주도의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 찾동 마을계획 수립 결과 통학로 개선, 공공시설 건립 등 법정 도시계획으로 실현가능한 의제가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를 실현할 방법, 권한, 자원 등은 아직 부재
 -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각종 도시환경개선 정책이 별도의 임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기보다는, 상설적인 주민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와 협력하는 것이 주민자치 활성화는 물론 주민참여형 도시환경 개선에도 효과적

■ 추진과제

【과제 1】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

- 주민 합의를 통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실시 여부 결정
 - 서울형 주민자치회 설립 여부를 자치구가 아닌 해당 동의 주민자치조직(주민자치위원회, 찾동 마을계획단, 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등)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 자치구 실행계획서 작성 시 동별 주민조직 간담회 개최, 주민조직 합의 결과 첨부 의무화
- 민주적인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 지원
 - 공개모집, 추천을 통한 위원 선정, 일반 주민의 분과 참여 허용, 주민총회 개최 등 1단계 22개 동 시범사업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민주적 설립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는 주민자치와 상충하므로 “책임이 따르는 자율”(accountable autonomy) 원칙에 따라 최대한 주민자치회 자율에 맡기되, 민주적인 설립과 운영이 심각하게 저해되었을 때 개입 및 조정
- 행정사무 위수탁 및 협의 권한 강화
 - 행정사무 위수탁: 중앙정부 시범사업처럼 “귀찮은 행정사무의 외주”(김필두, 2015)로 왜곡되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능동적으로 위탁사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무목록 작성, 사무조정회의 정례화, 주민자치형 민간위탁 계약 개발 등 추진
 - 행정사무 협의: 현행법상 “협의”는 의견청취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주민자치회가 자치구 및 동 행정의 건강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 개정 요청

○ 주민자치회 모델 다양화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현재 단일 모델로 일선 동의 다양한 여건과 요구에 따라 다양화될 필요
- 서울시 표준조례안은 최소화하고, 조례는 자치구가,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해서 여건에 맞는 차별화 허용
- 서울형 모델은 단기적으로 중앙정부 협력형 모델 안에서 구성 방식(개인참여형/단체 연합형), 주요 역할(의사결정기구형/자치사무수행형)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제시
-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통합형, 주민조직형 모델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맞춰 동단위 자치 정부에 준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

【과제 2】 지역자산 조성 및 공적 활용 지원

○ 자치구별 거점형 공동체공간 조성 및 자율운영 지원

- 서울시의 기존 주민주도 공동체공간은 특정 목적에 따른 소규모 영세 공간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용, 연계하고 자립 운영을 위한 수익창출이 어려웠음
- 민선 7기는 자치구별 3개소씩 총 75개소의 지역거점형 공동체 공간 조성과 주민자율 운영을 지원
- 부지 및 건물 매입, 공간 조성 등의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부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참여 과정을 도입해서 공간 규모, 용도, 운영방안 등을 주민들이 실현가능하게 수립하도록 지원
- 공동체공간 운영 경험과 역량이 있는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공간의 운영 및 이용 의향이 있는 다양한 주민단체와 개인이 연합한 2차 조직으로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 권한을 위임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은 공익적인 공간 운영과 수익창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도모, 장기적으로는 공간운영 수익과 지역주민 출자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공간을 인수하는 지역자산화도 고려

○ 주민자치회의 자치회관 대관료 수입사용 허용

- 동주민센터에 위치한 주민공간인 자치회관에 다양한 주민활동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유지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동장이 갖고 있는 공간 대관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필요
- 자치회관 대관료를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정부 세출 집행기준」을 변경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치회관 운영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

○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회로 환원

- 주민 회비 성격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회로 환원해서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역문제 해결, 마을기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세목 변경: 현재 시세(市稅), 일반세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구세(區稅), 목적세로 변경하여 주민자치회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지방세법 개정 요청
- 주민세 집행기준 마련: 환원된 주민세가 정책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 항목, 방법, 절차 등의 기준 마련(예_주민총회 의결을 통한 예산 편성 등)
- 마을기금 조성 및 배분: 매년 주민세 전액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배분, 지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금 운용 기준 마련

【과제 3】 주민자치회 주도형 도시재생 추진

○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의제를 서울시 지역생활권 계획에 반영

-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합의된 자치계획 중 도시계획 관련 의제는 서울시 법정 도시계획인 지역생활권 계획에 반영
- 매년 자치계획으로 도출한 의제를 축적한 후 5년 단위로 지역생활권계획을 재수립할 때 계획 과정에서 검토 및 반영
- 지역생활권계획의 주민참여 방식도 기존의 임시 주민협의체(동별 주민자치위원 10명, 개인 희망자 10명) 방식을 폐지하고, 동별 주민자치회 연합 참여 방식으로 변경(주민자치회 대표, 해당 도시계획 관련 의제를 제출한 분과장 및 분과원 참여)
- 지역생활권계획에 반영된 자치계획 의제는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관리계획 행위가 이뤄질 때 실현될 수 있음

○ 주민자치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 2018년부터 행안부와 국토부는 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주민자치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18.5월 실무협의 완료)
- 이 사업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주민자치회) 주관의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5개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별로 0.5~2억 원을 1~2년간 지원
-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임시 주민협의체가 주민참여, 주민 의견수렴 및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관리(area management)를 상설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과 주민자치가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현재 중앙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서울 지역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내용적으로는 공조하되 시범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
- 장기적으로 서울 지역 제외 조치가 해제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혁신국, 행정국, 도시재생본부의 협력을 통해 주민자치형 도시재생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연계

【청년일자리 분야】

■ 여건 및 현황

-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일자리가 증가하여도 채용과정이 불공정할 경우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속될 것임
 - ※ 관련 기사: 구직자 77.5% 채용 공정성 못 믿는다(한국일보, 2017.5.22)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공직공정성 확립과 더불어 채용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
 -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증빙서류 요구 관련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
- 서울시는 ‘시민권의 다른 이름, 노동권’, 서울을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실질적 ‘노동존중특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8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채용공정성에 대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음
- 민선 7기 김종민 후보(정의당)는 “Labor City 서울”의 세부공약으로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채용결과 투명하게 공개’를 제시함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자치단체 최초로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여 서울형 노동모델, 원스톱 구제체계 구축,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선도한 서울시가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도시 노동정책의 대표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 부문에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임

■ 추진과제

【과제 1】 공정채용도시 서울

- 청년들의 채용공정성 인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청년들의 출신 대학 평판,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른 채용공정성의 인식 격차 분석을 위해 대단위 사회조사와 FGD 실시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비롯한 다양한 공정 채용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
- 공정채용 월간 지정 및 운영
 -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기업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강화, 공정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해 17개 시도 최초로 매년 특정 월을 공정채용 월간으로 지정
 - 공정채용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기업인사담당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관련 교육, 대국민 캠페인 실시

※ 해외 사례: 일본

- 일본의 경우 1975년 부락지명총람사건(구직자 출신지역 차별), 1998년 오사카 차별신원조화사건 등을 계기로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도쿄도, 오사카시, 구마모토현 등에서 공정채용 관련 월간을 지정·지속적으로 운영 중
 - 도쿄: 취업 차별 해소 촉진 월간(6월)
 - 오사카: 취직 차별 철폐 월간(6월)
 - 시가현: 기업 내 동화 문제 계발 강조 월간(7월)
 - 구마모토현: 적정 채용 전형 계발 강조 월간(8월)

〈도쿄의 취업 차별 해소 촉진 월간 주요 사업의 예〉

가. 공정채용 강연회 실시



나. 공정채용 관련 영화 제작 및 상영회



- 사업의 내용은 도부현에 따라 다르지만 기업 내 '공정채용전형 인권계발 추진원'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연회, 인권교육 등 실시

○ '서울형 공정채용기업' 인증제 실시

- 기업의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채용 평가지표를 자체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청년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을 선정

※ 유사 사례: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 서울시와 SBA가 개발한 자체평가인증지표(8개 영역 53항목)를 활용하여 고용창출이 뛰어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일-가정 양립, 기업복지, 여성 친화 등 직장생활 등이 즐거운 기업, 즉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서울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기업모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포용경제 분야】

■ 여건 및 현황

- 서울시는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시민의 경제생활에 직결되는 민생경제 정책도 계속 추진해 왔으나, 최근 전반적인 서울시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재차 고민해야 하는 상황
 - 최근의 변화한 시정상황에서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목표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상황적 판단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
- 중앙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중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하는 정책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정책의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민생경제 대책이 필요
 - 전통적인 민생경제 정책 대상인 자영업,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 보완 요청
- 서울시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와 이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실험을 폭넓게 품을 수 있는 포용 경제적 접근방식이 요청되는 상황
 - 보다 포용적인 시각에서 기존 민생경제 정책의 대상을 다시 정의하여 빈틈을 채워갈 수 있는, 보다 작은 단위에서 보다 세심한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부상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대표적인 고용취약계층 대상인 여성 고용제고
 - 서울시 내 여성 고용의 전반적인 양적, 질적 개선 추진
- 사회적 경제의 확장성 담보
 -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및 산업생태계 성숙화 지원
- 소지역 기반 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
 - 마을/동네 체감형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 추진과제

【과제 1】 여성 고용률 제고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신규제안)

- 서울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 확대가 관건
 - 서울시는 ‘서울플랜 2030’에서 고용률 75%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18년 1/4분기 중 서울의 고용률은 59.5%에 불과
 - 특히 2018년 1/4분기 중 서울시 여성 고용률은 51.0%로 남성 고용률(68.8%)을 17.8%p 하회
- 여성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
 - 21세기 들어 ILO, OECD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고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되어 있는가”로 이동
 - 여성일자리는 남성일자리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비정규직이 많아 일자리의 질이 낮은 편

○ **경력단절 여성 발생 예방 및 재취업 기회 확대로 여성 고용률 제고**

-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 여성이 증가하는 업종, 직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 후 생애주기에 걸친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마련
- 탄력근무제 도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 프로그램 마련,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여성의 경력별·직종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산하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경력별, 직종별로 마련해 인력개발의 실효성 제고

○ **여성청년 니트족 치유 프로그램 마련**

- 고용지원서비스에 청년 니트를 명시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 현재 청년 니트를 명시적으로 고용 지원서비스에 포함한 것은 고용부의 ‘청년내일찾기패키지’가 유일하므로 이를 벤치마킹
- 여성청년 니트족의 구직의욕을 다시 북돋우기 위한 여성청년멘토링 제도 운영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공개강좌) 기반 소셜러닝 플랫폼을 구축한 세션으로 여성청년 니트족을 대상으로 한 참여, 개방, 공유, 협업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시스템 제공 (OECD의 경우 니트족 예방 및 치유의 주된 해법으로 교육을 제시)
- 여성청년 니트를 위한 여성청년재도전프로그램 마련: 여성청년 니트의 교육, 훈련 및 일 찾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

○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 서울시 여성인력 고용 및 활용 우수기업 온라인 DB 구축 및 정보 제공
- 소셜프랜차이즈, 소셜벤처 등 여성이 일하기 적합한 신 분야를 적극 육성해 여성일자리 확대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여성일자리 발굴 및 육성
- 청년여성 좋은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여성일자리 발굴해 연계: 여성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서울형강소기업 등과 시가 연계해 여성구인-여성구직 연계망 구축

○ **5년 주기로 서울시 여성노동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여성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임금실태, 노동계약 방식,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조사
- 실태조사에 기초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의 질 개선
- 일차적으로 여성일자리가 집중된 돌봄 등 사회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좋은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완료		
시행 중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분석	2018.5.1~2018.12.31
시행 예정		

【과제 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공약사항, 협동과 공유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2-①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 사회문제 해결형 생태계 육성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한 것을 말함.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과 같은 4대 중독의 예방, 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과 서울시 관련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근로자 정서심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의 사회적경제 해결형을 제시함
- 알코올, 게임,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의 예방, 상담, 치료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육성
 -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게임중독 현상은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정책대상
 - 지역사회 예방과 치료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조직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 서울시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일환으로 근로자 정서심리서비스를 제공
 -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원, 장애인재가서비스 제공인력 등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 다수는 감정노동자로 이들에 대해 정서심리서비스를 제공
 -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수급과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서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태계 육성에 일조
-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서울시의 소방관, 사회복지, 환경미화, 민원상담 공무원들에게도 정서심리서비스 제공
 -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힘쓰는 관련 공무원들은 정작 본인의 복지와 정신건강을 돌아보지 못해 정신질환 및 장애, 자살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

2-② SIB 확산

- SIB(Social Impact Bond) 확산을 통해 사회적경제 내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유도
- 현재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아동의 지적능력 및 사회성 향상 SIB(11.5억 원 규모)를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
- SIB 사업이 가능한 영역으로는 경계선급 치매노인의 통합재가 서비스,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재구축과 노숙인 주거안정 등 사회재결합, 다중채무자의 가정경제 채무조정, 위기청소년을 위한 Youth Village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가능한데 이들 SIB 사업 적극 확대 필요
 - 경계선급 치매노인의 통합재가 서비스는 경도인지장애자 대상 1:1 맞춤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로의 전환을 막고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기능을 유지하여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과제 3】 지역 밀착형 영세 소상공인 통합 지원 체계 구축(기존정책)

- 소상공인(자영업 포함)은 종사자와 사업체 모두 서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선행
- 서울시와 관련 투자·출연기관(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통합지원 체제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요구
- 자치구-서울시-투자·출연기관-관련 단체의 현황 파악 및 유기적인 협조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역경제과, 생활경제과의 소상공인 관련 업무, 자치구 현황, 관련 자치구 별 지역 상공회의소, 상공인단체 등의 현황 및 경영애로 사항 파악
- 권역별·업종별 핵심사업 선정 및 중점 관리와 지원
 - 소상공인 특화업종, 영세 생계형 업종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자금 및 교육 지원, 창업 및 사업 투자 컨설팅 등 지원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 및 시책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 등을 시행하여 정책의 유효성, 우선순위 결정
- 정책-시행-관리가 통합 가능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및 조직 필요
 - 시의 주요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시행되고 사후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구,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가능한 종합적인 지원 조직 필요
 - 현재 신용보증재단 내에 자영업지원센터가 있으나 조직과 기능에는 한계, 서울시 본청에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수행하고 관련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관련 부서 혹은 조직이 요구

【과제 4】 지역사회가 선도하는 일자리·창업 활성화(신규제안)

- 최근 산업구조와 일자리구조의 질적 변화로 인해 서울경제의 고용창출 잠재력이 날로 악화
- 날로 악화되는 고용여건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방식의 일자리 대책 모색 필요
- 기존의 구인·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대책에 더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일자리 대책에 참여·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도의 일자리 대책 모색 필요
-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특화형 [일자리·창업진흥지구]를 도입 운영
 - 25개 자치구별로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공공의 일자리 지원이 시급하거나 역으로 일자리 및 창업 잠재력이 높은 2-3곳의 '일자리허브'를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창업진흥지구'를 선정
 - '일자리·창업진흥지구'에 대해 [일자리·창업진흥계획]을 수립하되, 동 계획에 '일자리허브'를 중심으로 고용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종합전략을 마련
 - 진흥계획에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인적·물적·재정적 참여)와 협력방안을 구체화

- 서울시는 대상지와 진흥계획의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심의해 행·재정 지원을 제공
 - 대상지의 적정성/진흥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기대효과/추진체계의 실효성(특히, 참여주체 간 연계·협력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지 선정
 - 자치구 매칭사업 형태로 지구별로 50억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
- ‘일자리·창업진흥지구’의 대상지로는 다음과 같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해당 지역의 환경 변화로 인해 단기간에 일자리가 급격하게 축소·소멸되었거나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지역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일자리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대학가 등)
 -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또는 창업의 잠재력으로 매우 높은 지역 등
- ‘일자리·창업진흥지구제’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 1단계에서 3개 정도의 대상지를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전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자치분권 분야】

■ 여건 및 현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민선 6기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
 - 민선 6기 주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주민자치 기반 성숙
- 새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의 주요 전략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선정
 - 주민의 의사와 괴리된 정책결정, 공무원 위주 읍면동 운영, 관 주도 마을정책 수립·집행 등의 문제 인식 아래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와 마을단위 자생적 자치역량 강화 노력

〈그림〉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비 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 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핵심전략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추진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 주민자치를 위한 분권전략 필요
 - 민선 6기 동안 마련한 주민자치 기반을 활용해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제의 해결’이라는 주민자치 이상 실현을 위한 분권전략을 구상 및 실천할 필요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동 중심 행정혁신 가속화
 - 지역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동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개선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혁신을 통해 주민자치 플랫폼 역할 강화

〈그림〉 기존 동주민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교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	주민이 신청하는 것만 제공 (서류발급, 소외계층 지원, 청소민원 등)	≫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 제공
대상선정	주민이 내방 신청해야만 가능 (충족하지 않은 복지 서비스제공)	≫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참여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곳 (통반장, 직능단체회원, 주민자치위원 등)	≫	주민 누구나 이웃을 위해 마을 활동에 직접 참여
공간	특별한 민원업무가 있어야만 찾는 곳 (민원신청, 지원요청 등)	≫	항상 열려있는 주민들의 공간 (커피 마시고, 책 보고, 회의하는 주민개방 공간)

-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분권 전략 마련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구 간 역할 및 기능배분
 -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방안 도출 시 현실에 필요한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하기 위한 분권 전략 개발
- 남북협력 기조 하에서 서울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남북한 협의체 구성
 -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의체 구성

■ 추진과제

【과제 1】 창의적 자치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 실험’ 제도 도입 추진(신규제안)

① 과제내용

-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창의적 정책시도가 많으나 현행 법체계는 상위법의 근거조항 없이는 조례 제정이 곤란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근거 미비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
- 전국 최초 등 창의적 선도정책은 특성상 기존 법체계 내에서 근거조항을 찾기 어렵고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중앙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비용을 초래
- 프랑스는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정책실험의 경우 다양한 제도실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2003 헌법, 제37-1조)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
-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일 경우, 기존 입법제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칭)‘제도실험’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

② 추진방안

-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제도 실험’의 원칙과 관련 법규를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 대안 마련
 - 제도 실험의 원칙, 법률에서 정한 창의적 정책실험에 관한 조건, 지방정부에서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입법 및 규제 조항의 범위 등을 심층 검토
 - 서울시 차원의 ‘제도 실험’ 제도(안) 및 도입방안 마련
-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헌법’ 제정과 지방자치 관련 법 개정(안)에 포함 건의
 - 서울시가 마련한 대안은 단기적으로 현 정부가 가동 중인 소위 ‘국가자치분권회의’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혹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주요 정책 어젠다로 상정하여 우선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적극 주도
 - 장기적으로는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헌법’ 제정과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안)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지방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행정특례 개편방안을 적극 검토
 - 지방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 추진하도록 노력하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경우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된 ‘서울시 행정특례’의 확대개편 방안에도 포함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 자치영향 사전협의 및 정책수단 중심으로	2018.1-현재
시행 완료	서울시와 해외 거대도시의 자치역량 비교연구	2017.4-2017.12

【과제 2】 서울-평양 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한 남북협력 기반 마련(공약사항)

① 과제내용

- 남북통일 기조 하에서 진정한 자치분권은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형성 가능
 - 통일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통일되더라도 남북한의 체제는 상당 기간 각기 존재할 가능성 존재
- 남북한 체제를 통일이라는 관점보다는 자치분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일원화된 통일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한 지역운영 방식의 공존을 허용하는 것이 갈등 없이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
- 남북한의 수도가 선도적으로 협력의 장을 마련
 - 다른 자치단체보다 남북한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한 자치단체의 협력관계를 주도

② 추진방안

- 서울-평양 간 자치분권협의를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 남북한의 서로 다른 행정 및 정치체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활용
- 남북한의 선출직 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으로 추진
 - 서로 만나기 어려운 남북한 공직자들이 정기적 만남으로 인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
- 정기적인 학술교류로 남북한 상호 이해도 제고
 -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
- 남북한 수도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모색
 -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에 있는 서울과 평양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중	해당사항 없음	
시행 완료		
시행 예정		

【과제 3】 마을계획 설계지원 및 경진대회를 통한 마을계획 활성화(신규제안)

① 과제배경

- 동 수준의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한 지역 삶의 조건의 실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필요
- 마을계획 수립 후 시행을 위한 권한 및 재원이 주로 서울시에 있으며 자치구의 역할은 제한적
- 각 지역 주민자치 조직화 수준 및 활성화 정도가 상이해 지역별 주민자치역량 파악 필요
- 마을계획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 촉진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목표

② 추진방안

○ 주민 마을계획 경진대회 개최

- 공원 설치 및 관리, 학교 주변 횡단보도 설치, 주거구역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동 수준 마을계획 경진대회 추진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주민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마을계획 제안을 대상으로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 경진대회 입상 제안의 경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 담당 부서가 구체화
- 구체화한 계획을 주민 스스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 권한 및 재원을 자치구에 이전하여 자치구 수준에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

○ 마을계획 설계지원센터 설립

- 마을계획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조직의 마을계획 수립 시 상위 도시계획 검토, 예산소요액 산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담당할 조직 필요
- 마을계획 대상 사업 개발, 주민자치조직의 설립 및 활성화 지원, 마을계획 수립 방안 교육 등 담당 중간지원조직 필요
- 서울시 조직 내 사업단으로 설치하며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주민자치조직화: 주민자치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조직화 지원
- 마을계획 사업 개발: 마을계획 가능 사업대상 발굴, 시범사업 운영 및 매뉴얼 개발
- 마을계획 사업 검토 및 구체화: 마을계획 사업 타당성 검토(상위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 마을계획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예산 수립·법령 검토·공간설계 및 시각화 등 전문성 기반 지원 기능 제공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중	해당사항 없음	
시행 완료		
시행 예정		

【과제 4】 동장직선제를 통한 동단위 자치 활성화(신규제안)**① 과제내용**

- 서울시 동주민센터는 지역소통의 중심으로 진화 중
- 동행정 및 주민자치의 성공에 있어 동장리더십이 중요한 포인트
- 동 행정 주체 간 단절된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주민자치의 견인차로서 동장의 역할이 중요
- 공동체 활동에서 나아가 스스로 자치하는 마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장직선제가 필요

② 추진방안**○ 선거절차**

- 지역에 애착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장후보 등록
- 동장후보는 지역의 현안을 살피며 선거 캠페인 실시(선거공약 준비, 선거공보 형태로 주민배포 등)
- 주민총회에서 동장선출 투표를 진행(주민총회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거쳐 투표과정 진행_주민총회와 연계하여 마을 축제화)

○ 기대효과

- 주민총회의 지역 안착 및 주민자치의 소중한 경험부여
- 지역에 애착이 있는 동장선출로 책임 있는 동 행정 수행, 주민과의 효과적 협업 관계 구축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수탁)	2018.4-2018.11
시행 완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수탁)	2017.4-2017.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관리 학술용역(수탁)	2016.4-2016.11

【과제 5】 미래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개선(기존정책)**① 과제배경**

-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 정보공시, 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채 발행 등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지침 운영실태 분석
-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② 과제내용 및 추진방안

- 지방재정법의 중앙정부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에 대한 내용 확대 지양
 -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결과공개, 평가와 책임확보를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두는 예측적인 지방재정 법제를 개선

- 중앙부처의 규정·지침을 통한 과도한 통제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훼손 개선
 -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과 형식이 과도하게 적용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 악화
- 지방재정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재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정책수단 축소 방지 필요
-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진단
 - 서울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안을 도출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완료	저성장시대 서울의 재정전략	2017.1-2017.1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의 쟁점과 개선방향-긴급재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2016.8-2017.1
	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추진방안	2014.9-2014.12

【과제 6】 가시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분권 과제 우선 추진(기존정책)

① 과제내용

- 인사조직권의 자율성 확대로 책임행정 구현
- 국고보조금의 제도개혁을 통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 지방소비세 인상, 지역성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 적극 지원

② 추진방안

- 인사조직권의 자율성 확대로 책임행정 구현
 -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세세하게 제시된 조직, 인사 관련 규정을 대체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서울시 인사행정의 자율성 확보
 - 인사조직의 자율성은 확대하더라도 방만한 운영은 자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동시에 마련하여 정부에 역제안
- 국고보조금의 제도개혁을 통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 4대 기초 복지사업 등 전국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무의 재원은 전액 국비로 전환하도록 촉구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지방소비세 인상, 지역성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 정부가 약속한 미이행분 등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국세는 지방세로 이양

○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 적극 지원

-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 이미 가동 중이며, '자치경찰시민회의' 구성, 자치경찰 정책대안 제시 등 선도적인 역할로 정부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 추진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완료	저성장시대 서울의 재정전략	2017.1-2017.1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의 쟁점과 개선방향-긴급재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2016.8-2017.1
	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추진방안	2014.9-2014.12

【과제 7】 입법과정에서 사전영향평가제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 참여기반 마련(기존정책)

① 과제내용

- 지방정부와 합의 없이 진행되는 입법기반 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 정책집행 문제 대두
- 지방분권 관계법령의 '사전영향평가제'를 적극 도입해 지방정부의 국가정책 참여 기반을 실질화할 필요
- 수도로서 서울시에 대한 특례 규정의 실질화를 통해 지방정부 선도자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확대 및 강화

② 추진방안

○ 지방분권 관계법령의 '사전영향평가제'를 적극 도입

- 분권 관계법령 제정, 국정과제의 추진 시 지자체의 참여 및 의견반영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사전영향평가제(가칭)' 도입 등 지방정부의 참여 법제화 방안 마련

○ 서울시 행정특례의 확대개편 방안 마련

- 인사조직 등 서울시의 특성상 일반해의 적용이 곤란한 부분은 서울시 행정특례의 확대개편 등 대안 마련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 자치영향 사전협의 및 정책수단 중심으로	2018.1-현재
시행 완료	서울시와 해외 거대도시의 자치역량 비교연구	2017.4-2017.12

【과제 8】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구 및 시민의 공감대 강화전략(기존정책)

① 과제내용

- 시민감시 및 시민선택권의 강화로 공감대 형성
- 자치구의 권한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 노력
- 서울시 주도의 '시민공감 분권토크쇼'의 확대 실시

② 추진방안

○ 시민감시 및 시민선택권의 강화로 공감대 형성

- 서울시도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경우 여론조사형 주민투표제 도입 등 자율적 시민감시 및 시민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공감대 강화

○ 자치구의 권한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 노력

- 현재도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자치영향평가제'를 시행 중이나 한 걸음 나아가 생활밀착형 사무, 권한 등은 자치구에 적극 이양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

○ 서울시 주도로 '시민공감 분권토크쇼'의 확대 개편 추진

- 현실적으로 자치분권형 입법 활동의 주된 동력은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
- 현재도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 대상으로 '시민공감 토크쇼'를 시행 중이나 모든 자치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확대 개편하고 주요 언론 및 방송과 연계하는 등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 자치영향 사전협의 및 정책수단 중심으로	2018.1-현재
시행 완료	서울시와 해외 거대도시의 자치역량 비교연구	2017.4-2017.12
	지방분권 주요 이슈와 쟁점	2016.2-2016.10

【시정역량제고 분야】

■ 여건 및 현황

○ 시정역량 제고와 국제 신인도 향상 성과 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만족도는 저하

- 정책수출 증가, 도시외교 강화 등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 시민들의 만족도는 정책수준이며 일부 지표에서 만족도가 저하되는 상황

○ 안전, 부패 등 중요 지표에서 낮은 수준의 시정운영결과 도출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평가에서 생활안전, 감염병, 범죄 등에서 낮은 등급 도출

〈표〉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평가('15~'17)

(등급: 1~4등급)

시도	교통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서울특별시	1	1	1	1	2	2	4	5	5	2	1	1	4	4	3	3	3	2	2	3	3
경기도	1	1	1	1	1	2	3	3	3	3	2	2	1	1	1	1	1	1	1	1	1

-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 수준을 유지

〈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16~'17)

기관유형	2년 연속 우수기관	2년 연속 미흡기관
광역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2년 연속 4·5등급: 산업부, 행복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등

○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 역량제고가 필요한 시점

-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제 교류와 협력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필요한 시점

〈표〉 시사매거진 이코노미스트(2017) 미래 인재업무능력

업무능력	내용
맥락 파악	- 이미 존재하거나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보다 깊이 있고 새로운 의미와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
사회적 지능	- 타인과 직접적이고 깊게 교감 및 교류하는 능력
참신하고 적응가능한 사고	-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문화역량	- 문화적 차이를 가진 타인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컴퓨터적 사고력	- 정답이 없어도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하고 데이터에 숨겨진 추상적 의미를 찾는 능력
뉴미디어 리터러시	-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 - 주체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초학문적 능력	-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
디자인 마인드셋	- 요구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표현하는 능력
인지적 부하 관리	-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판별하고 걸러내는 능력
가상 협력	- 가상 팀의 멤버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통합적 시정운영전략 구축을 통한 시정의 질 제고
 -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정운영을 통합적으로 재구축하여 시정역량을 집중
 - 내부 평가와 외부 홍보수단을 뛰어넘는 종합 시정평가제도의 개발을 통해 일반시민의 시정이해도 제고
- 다양한 전문기술의 활용을 통한 시정역량의 제고
 -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과 확산을 통한 정책의 질 제고

〈그림〉 서울시 디지털정책 변화 단계



- 새로운 미래를 대비한 공무원 역량 다변화 및 교육훈련방식 개선
 - 공무원의 지속적인 역량개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대학원의 설립으로 정책역량 제고
 - 공무원의 전문지식 축적과 활용방안 모색

■ 추진과제

【과제 1】 서울연구원내 정책대학원 설치(신규제안)

① 과제내용

- 공무원 실무지식역량의 지속적 개발 필요성
 - 도시가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강화되고 IT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의 역량개발의 필요성이 증가
 -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자 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
- 맞춤형 역량개발 기관이 필요
 -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정책개발,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정책 중심의 실무자로서의 역량개발 필요
 - 서울시와 서울시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대학원이 필요

○ **종합 정책연구기관의 노하우를 활용**

- 서울시의 유일한 종합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 축적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활용정도는 낮은 수준
- 종합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장점을 살려 종합정책교육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

② **추진방안**

○ **국내외 정책대학원의 사례를 검토**

- 다양한 정책대학원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운영 방향과 방식을 결정

○ **서울시 공무원의 역량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분석**

- 직종 및 직급별 다양한 정책교육수요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추진 분야를 결정

○ **서울연구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정책대학원을 설립**

- 석사과정 개설 후 결과를 분석하여 박사과정 추가 개설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완료	미래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시 교육훈련체계 개편방안	2017.8-2018.2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2006.2-2006.11
	서울시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도입방안	2009.7-2009.12

【과제 2】 정책참여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시민청’ 통합구축 사업(신규제안)

① **과제내용**

○ **문화, 휴식 기반 시민참여 공간인 시민청 역할의 확대 모색**

-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민청 모델 방식은 확장가능성에 한계
- 시민이 수혜자가 아닌 시정에 대한 참여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통합추진기제로서 기존 시민청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

② **추진방안**

○ **(사업방식)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생산 기제 플랫폼으로서 시민청 전환**

-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시민참여 플랫폼들을 시민청 브랜드로 온오프라인 통합(시민정책참여 공간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 ‘시민청’ 브랜드를 제도화된 상징적 공간으로 구체화)
- 기존 천만상상 오아시스(현 민주주의 서울), 응답소 등 온라인 중심 시민참여 모델을 고도화하여 온라인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의제를 오프라인 공론화 장으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
- 타운홀 미팅, 정책설명회 등 서울 시정에 대한 정책의제 홍보의 장, 정책의제 해커톤 개최 등 다양한 시정 이슈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동생산
- 이 밖에 생활 속 불편과 개선사항을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창의적 해결방안을 기획·집행하는 사

- 업,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등 기존에 전통적 행정업무 프로세스에서 해결하기 힘든 업무를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제3섹터청으로 전환 추진
-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토대로 자문위원회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위원 양성 등 교육기능으로도 활용
 - (조직구조) 정책 공동생산 플랫폼 기반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역할 외 서울시 참여 최소화
 - 시민주도로 제안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이슈를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험공간 제공에 의의
 - (사업예산) 기존 시민청 예산 외에도 각종 시민참여 정책 관련 예산들을 통합하여 운영
 - (기대효과) 문제해결의 파트너로서 시민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온라인 정책참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적 참여를 극복하고 소통채널의 다변화, 전문가-공무원-시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의 온오프라인 통합
 - 장기적으로 정책에 참여한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문을 명확하게 하여 실시간 민주주의(real time democracy) 및 플랫폼정부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공론화 논의의 플랫폼으로 확산하여 상생분권 차원에서 서울시 - 자치구 통합 공론의 장으로 확대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중	해당사항 없음	-
시행 완료		
시행 예정		

【과제 3】 시정종합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시정성과 가시화(신규제안)

① 과제내용

- 시정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난립한 상태
 - 서울서베이, 각종 영향평가제도, 서울시 내부평가, 국가의 자치단체평가 등 다양한 평가제도가 난립된 상태
 - 일반 시민에게 상황에 따라 유리한 평가결과만 제공하는 홍보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를 저하시키고 신뢰도를 저하시킴
- 평가제도에 맞춰진 결과를 기대한 다양한 사업 진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
 - 평가결과를 기대하고 일관성 없는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 시민보다는 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기대한 사업들이 남발되어 정책의 집중과 선택이 어려움
- 시정운영결과를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서울시 운영의 종합성과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정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
 - 주기적으로 시민에게 결과를 리포트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

② 추진방안

- 시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제도를 개발
 - 부서별 및 개인별 평가결과와 종합적 연계
- 분야별 파편화된 개별 평가 및 난립한 영향평가제도의 정리와 통합
 - 결과보다는 평가를 위한 평가 제도를 정리하여 정책추진에 집중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중	해당사항 없음	-
시행 완료		
시행 예정		

【과제 4】 1공무원 1강사제를 통한 역량제고(기존정책)

① 과제내용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전문지식 전수 없이 퇴직하는 상황
 - 기능직의 일반직화 및 고령화로 인해 사업소 등에서 현장기술력을 갖춘 인력들이 퇴직하면서 그들의 전문지식이 후배공무원들에게 이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암묵지(tacit knowledge) 형태의 전문지식이 형식지로 변형되지 못하면서 서울시 전체의 기술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상황
-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저장하여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제도를 마련
 - 전문지식이 저장된 저장소를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후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② 추진방안

- 공무원 1인마다 1개 이상의 온라인 강의를 녹취하여 저장
 - 암묵지 형태의 전문지식을 온라인 강의방식으로 녹취하여 축적
 - 전문지식 내용에 따라 별도의 온라인 강의로 녹취
-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강의 녹취 가능
 - 특정 주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에게 온라인 강의 선택권을 부여
- 서울시에서 강의 녹취 지원 및 저장
 - 시간, 강의방식 등에 대한 일정 포맷을 만들어 활용이 쉽도록 저장
- 필요한 공무원은 언제든지 강의를 활용
 - 현재 시점에서 강의 수요자가 없다 하더라도 저장하여 추후에 활용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완료	미래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시 교육훈련체계 개편방안	2017.8-2018.2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2006.2-2006.11
	서울시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도입방안	2009.7-2009.12

【과제 5】 서울시 공공행정 DATA_MAP 구축을 통한 정책기반 고도화 (신규제안)

① 과제내용

- 데이터 기반 혁신이 중요한 시점
 - 창의행정 등 공공기반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시점
- 데이터 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공공데이터 활용도 저하
 - 현재 서울시 인사, 조직, 민원 등의 데이터관리는 파편화되어 있어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
- 데이터 맵 작성을 통한 활용가능성 제고
 - 선제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이 필요
 -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이력이 내포된 데이터 맵 작성 필요

② 추진방안

- 서울시 내의 다양한 공공데이터의 존재와 관리 상태를 파악
 -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생성부서와 관리부서를 파악
- 관리의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 데이터 생성, 관리, 배포, 보완 등 데이터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운영형태를 체계화
- 데이터 맵 구축과 제공
 - 서울시의 공공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 맵을 작성하여 서울시 내부에서 활용
 - 외부 공개가 가능한 것은 일반시민에게 제공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활용도 제고
 - 데이터 맵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맵을 보완하여 재작성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중	해당사항 없음	-
시행 완료		
시행 예정		

【지속가능 모빌리티(Sustainable Mobility) 분야】

■ 여건 및 현황

- 친환경수단의 경우 전기차 구매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관련 법/제도개선, 전기버스 시범도입 추진, 수소 버스 도입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음
 -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지속 증가. 수소차도 상용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급격히 기술이 발전함
 -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도 친환경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혼잡통행료 감면,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시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임
- 시민들은 최근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자동차보다는 사람, 친환경수단 중심의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2017년 한양도성안 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이 지역의 자동차 진출입 통행 제어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대중교통 개선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는 전동차’, ‘공기가 탁하고 메스꺼운 만원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의 혼잡도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임
 - 지하철 이용자들은 실제보다 약 25~75%까지 더 높게 혼잡을 체감하고 있어, 이용자와 운영사의 혼잡도에 대한 입장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이 가속화되어 매년 10만 명 이상이 서울과 인천으로 이주하고 있으나 거주지와 달리 직장은 서울에 위치하여 하루 250만 명이 여전히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우리나라 직장인의 출퇴근 소비시간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광역통행자의 경우 통근에 2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음

〈그림〉 수요자 중심의 교통도시 정책방향

❖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 교통 편리성 및 안전성 개성 ❖ 지속적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교통 선도도시 도약 기반 마련			
지속가능	인간중심	스마트	남북교류
미세먼지 해소,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교통체계	통행의 질적 개선, 계층별 지역별 이동권 격차 해소	ICT 서비스 플랫폼을 결합한 도시교통 솔루션 발굴	남북 화해협력 이후 정치경제 중심지로서 서울의 도시기능 구상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 도입 확대 추진
-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확대 시행
- 대중교통의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서비스 질(quality) 고려
- 대중교통 환승거점으로 관문도시 교통체계 구축

■ 추진과제

【과제 1】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 도입 확대(기존정책)

-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지원
 - 민간에 대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확대
 - 공영주차장 충전인프라 설치 확대
 - 가로변 급속 충전인프라 설치
-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추진
 - 서울형 친환경 인프라 표준 정립
 - 친환경버스(전기버스, 수소버스) 도입 전략 및 로드맵 정립
 - 친환경버스 민간 지원 확대
- 공유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도입
 -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공유 개인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 단거리 승용차 통행 억제를 위한 도심지역 공유 개인교통수단 지원

【과제 2】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기존정책, 공약내용: 김종민(정의당))

-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의 차량 진출입 통제 제어
 - 도심 자동차 통행관리를 위한 차량인식 및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서울시 전역에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 차량의 환경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지역과 시간, 제한 방법에 대한 로드맵 정립
 - 서울시 전역으로의 확대에 따른 차량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 제도 시행에 따른 물류, 택시/버스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과제 3】 대중교통 혼잡도를 고려한 지능형 대중교통 관리시스템 구축(기존정책)

- 혼잡도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좌석현황, 혼잡도, 냉난방 등 차내 환경을 확인하여 승객 집중노선(2호선, 9호선 급행열차 등)의 선택적 이용 유도
 - 수송인원을 비롯한 노선별, 차량별, 구간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모니터링
- 수요 맞춤형 운행으로 버스 혼잡 완화 추진
 - 혼잡도 높은 구간의 차량 운행 간격 조정
 -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조정
 - 노선 기종점의 탄력적 조정
- 추가차량 투입으로 지하철 적정 혼잡 수준 유지
 -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혼잡도 기준의 하향 조정 및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정의
 - 추가차량 투입을 통한 혼잡구간의 배차간격 조정

【과제 4】 광역교통 관문지역 교통체계 개편(기존정책)

- 철도 중심의 관문지역 교통체계 개편
 - 12개의 관문도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 교통체계 개편
 - 급행철도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환승 거점으로 관문지역 주변의 차량기지 및 공영차고지를 활용
 - 관문도시와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계 방안 마련
- 시계 유·출입 권역 관리대책 수립
 - 통근·통학버스 전용 정류장 등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개선 방안 마련
 - 광역통행과 물류 운송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 수립
 - GTX를 비롯한 신설 광역철도와 연계 방안 수립
 - 광역교통청 설치 등과 연계 방안 수립

【인간 중심 모빌리티(Human Mobility) 분야】

■ 여건 및 현황

- 차내 혼잡뿐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주거지의 주민이나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해 대중교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환경 제공 필요
 - 통행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보행환경은 친환경성, 지역 활성화, 건강 등의 관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보행의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차 없는 거리 조성,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나 자치구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은 아직 미미한 상황임
 - 서울로7017,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도심 주요도로 차로축소, 전선 지중화 등 지금까지는 주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를 이룸
 - 보행자 사고가 잦은 주거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자치구 소관도로로 시에서 직접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주로 자치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정도에 그침
 - 따라서 자치구 상황에 따라 생활도로 보행환경에 있어 지역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서울시 전역으로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 어디서나 고령 보행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고령자 특성에 맞는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함
 - 그간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보도상의 점자블록 설치 확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
 - 이러한 사업들은 지하철역사,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 장소의 교통약자 수직이동 편의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음
 - 하지만,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 어디서나 고령 보행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특정 장소의 수직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수평보행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이용도, 긴요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효용성 높은 대중교통 접근시설 제공
- 생활도로 재구조화를 통한 보행환경 지속 개선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행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추진과제

【과제 1】 경사지 노후주거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조시설 도입(신규제안)

- 교통약자 및 경사지 주민의 보행편의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
 - 보행기반 인프라 설계 기술

- 시작장애인을 위한 보행안전 향상 기술
- 보행편의 향상을 위한 기술의 적용가능성 검토
- 보행자 특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체계 구축
 - 가파른 경사면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제약되는 지점 파악
 -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설(경사형 엘리베이터, 곤돌라 등) 선정
 - 향후 경사지 주거단지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과제 2】 생활도로 재구조화를 통한 보행환경 지속 개선(신규제안)

- 체계적인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 자치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 유관기관별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의 체계적 연계
 - 생활도로의 재구조화를 위한 표준매뉴얼 정립

【과제 3】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행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신규제안)

- 고령자를 위한 보행 인프라 개선
 - 고령 보행자의 피로도를 고려한 보행쉼터 설치
 - 고령 보행자의 횡단시간을 고려한 보행섬 설치 및 신호시간 조정
 - 고령 보행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보행안내 표지 시인성 개선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분야】

■ 여건 및 현황

- 통신기술과 교통 운영기술의 발전
 - 대용량·초고속 이동통신 기술인 5G의 도입으로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활성화
 - IOT(Internet of Things) 기술 발전으로 모든 교통 시설과 서비스의 연계 가능
 - CV(Connected Vehicle), AV(autonomous Vehicle) 등 새로운 운영체계 기반의 교통수단 등장
- 시민생활 중심의 교통서비스 수요 증대
 -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지속적인 등장
 - 끊임 없는 교통정보 서비스 수요 증가
 - 인공지능기술의 교통서비스분야 적용으로 이용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가능
 - 다양한 교통서비스와 요금체계의 통합운영 필요성 제기
- 공유경제와 친환경교통의 중요성 인지
 - 공유교통 및 공공교통수단 이용 수요 증가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증가
- 고도성장기 시대에 급속하게 건설된 교통인프라는 오랜 사용으로 강도와 기능이 약해져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건설 후 40~50년이 경과하면 대규모 보수나 재건축 시점에 도달하여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신개념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 조성
- 시민(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
- 기존 교통서비스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과 첨단운영기술의 접목
-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인프라 자산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추진과제

【과제 1】 교통선택권 확대와 이동성 제고를 위한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구축(기존정책 확대)

- 공유교통 서비스와 통합모빌리티의 종합 계획 수립
 - 서울시 교통 환경을 둘러싼 환경 변화 및 현황 진단
 - 공유교통 및 매스(MaaS) 이용 여건 및 장래 수요 분석
 - 서울시 교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필요성과 개선방안 마련
 - 공유교통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진단 및 공공(서울시)의 역할 정립

- 부가서비스를 연계한 교통서비스, 교통약자 및 소외계층 교통서비스 강화 플랜 수립
-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시범사업 수행**
 - 공유교통 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위한 법·제도 검토 및 보완
 - 공유서비스의 민간과 공공 부문 적립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다양한 교통서비스 공급주체(민간, 공공)의 통합운영을 위한 플랫폼 구상

【과제 2】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교통운영 및 관리 방안 도입 (신규제안)

- **이동통신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간선도로 교통류 관리 체계 도입**
 - 개인단말기 이동정보 수집 체계 구축 및 민간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 지역별·도로별 통행시간 균일화를 신호미터링 및 통행정보 제공방안 마련
 - 교통사고 자료와 택시 주행정보 등 big data 분석을 통한 사고위험도 평가
- **차세대 교통신호시스템 기반 마련**
 - 경로시간 기반 교통신호운영 방안 마련
 - 차세대 무선통신 기반 신호등 원격 운영 체계 마련
 - 컨넥티드 차량 운영을 위한 교통신호정보 제공 방안 마련
- **IOT 기술을 활용한 주차공유체계**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건물부설주차장에 IOT 센서 설치
 - 원격 실시간 주차예약 및 요금결제 체계 마련

【과제 3】 차세대 첨단교통체계(C-ITS) 구축을 통한 자율주행셔틀 도입(기존정책)

- **자율주행셔틀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자율주행의 교통부문 및 사회적 영향 분석
 - 대중교통 자율주행 정책 추진 현황 진단
 - C-ITS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시범사업 수행 및 운영 방안 수립**
 - 서울형 C-ITS 시범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자율주행셔틀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셔틀 시범사업 수행을 통한 올빼미버스 연계 운영

【과제 4】 서울형 스마트 도시물류시스템 도입(기존정책)

- **스마트 도시물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 도로교통 환경 및 물류인프라 현황 진단
 -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자율주행기술 접목 방안 분석

- 물류체계의 첨단화 및 자율주행기술 도입 효과 분석
- 스마트 도시물류서비스 니즈 조사
- 도시물류 플랫폼 추진 전략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수립
- 미래상 전망 및 시사점 도출
- **효율적인 도시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도시물류 지원시설 구축 및 확대**
 - 기존 물류체계 및 말단물류시설의 문제점 진단
 - 1인 가구 증가와 통신판매의 변화 등에 따른 말단물류시설 수요 분석
 - 스마트 도시물류 거점 확보 및 지원시설 공급 계획 수립
 - 서울시 전역으로의 확대방안을 목표로 로드맵 제시

【한반도 모빌리티(Korean Peninsula Mobility) 분야】

■ 여건 및 현황

- 지난 10여 년간 악화된 남북관계로 2016년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교류·협력 단절 상태
- 그러나 금년 초부터 시작된 화해 분위기를 시작으로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음
- 민선 6기는 남북교류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활동이 제한적이었지만, 민선 7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공약 등 실질적 협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함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및 경평축구 부활
 - 도시 인프라 협력: 평양 상하수도 개량, 평양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등
 - 경제협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식생동물 종자교환 등
 - 문화예술 교류: 서울시향-조선국립관현악단 합동 공연 추진,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 추진, 서울-평양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추진
-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제시하는 등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의 경제적 통일을 추진 중임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험벨트 건설
 - DMZ 환경·관광벨트: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남북협력 관계 이후에도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기능 확보(한반도 신경제지도 연계 추진)
- 지방에서 서울로 집중된 교통망을 서울시 이북으로 연계하기 위한 물류체계 구상
- 남북 간 간선교통망에 접근하기 위한 서울시 내부 접근체계 확보

■ 추진과제

【과제 1】 남북 간 간선도로에 대한 고속 접근체계 확보(기존정책 확대)

- 서울시 동서 간 도시고속도로 신규 건설
 - 서울시 주변의 남북 간 간선도로로는 인근에 서울~문산고속도로(서측), 세종~포천고속도로(동측)가 있으나 외곽을 통과하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동서 간 도시고속도로의 상습정체로 도심에 서의 접근성이 약해짐
 - 남북 간 간선도로에 고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

- 서울시 간선도로와 고속도로의 고속 접근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 체계 강화
 - 서울시 내부에 적정 교차점을 선정하여 간선도로 기능 일부 분담
 -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지하도로, 복층도로 등 다양한 입체도로 검토
 - 도로 사업별 재원조달방안 마련
 - 고속도로로 추진할 경우, 서울시 재정 부담을 덜고 국가간선도로의 완결성 향상

【과제 2】 남북 간 철도망과 서울시 도시철도망 연계강화(기존정책 확대)

- 남북 간 철도망과 연계한 물류체계 구상
 - 기존에 깊게 고려되지 않은 서울 이북과의 물류 연계를 고려한 남북 간 물류체계 구축
 - 진입축별 관문지역 설정 및 거점으로서의 기능 정비사업 시행
 - 서울시 북부 지역 철도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시내/시외) 검토
 - 시외터미널 구축 시, 시내 연계 화물 철도 노선 검토
- 주요 거점 역의 여객수요 처리용량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망 연계 강화
 - 도시철도 남북축 주요 거점역의 처리용량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망 연계 강화
 - 서울 도시철도 남북축의 거점 역으로는 서울역(경의선), 청량리역(경원선) 제시
 - 서울역(신분당선 연장, 신안산선 서북부 연장), 청량리역(분당선 연장)과의 연결을 계획 중인 노선들에 대한 남북 간 철도망 연계 효과 검토
 - GTX-B, C 노선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거점역과 관련된 도시철도 사업의 남북 간 연계효과 검토 요청

【재난안전 분야】

■ 여건 및 현황

○ 민선 6기 시정 성과

- 안전예산 2조 원 시대 개막
- 100대 재난회복력 도시(100RC) 선정
- 지자체 최초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 제정
- 시민 선정 10대 정책에 4년 연속 여성안심특별시 선정
- 재난사고 황금시간 목표제 도입
- 시민참여형 안전대응역량 강화(시민안전파수꾼, 우리동네안전감시단 등)
- 메르스 사태 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보호

○ 민선 6기 시정의 한계

- 다양한 부서 간 협업 및 공동대응이 부족
- 인접 지자체나 해외 도시 간 협력 강화 필요(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공동 대응 등)
-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부족
-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거나 새로이 대두되는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태세 미비
- IoT나 로봇 등 첨단 신기술 활용 강화 필요
-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여전한 안전불감증)
- 시민의 안전욕구 수용도 제고 필요

○ 민선 7기 주요 시장 후보 공약 요약

- 첨단 기술을 접목한 노후 인프라 관리, 재난 대응력 강화
- 학생과 여성 등 안전약자가 공정하게 안전한 사회
- 도시 취약성 재난 대책 강화(지진, 화재, 지하철 사고 등)

○ 정부 안전 정책 기초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모든 재난안전 주체의 통합적 대비태세 강화

- 다양한 부서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실시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대비태세 강화

○ 미래 재난사고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 신종 감염병, 대형지하 다중이용시설 사고, 자율주행차 사고, 사이버 테러 등 신종 대형재난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대응성 강화
 - IoT,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역량 고도화
- 위험지각 능력 향상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정립
 - 체험형 안전교육의 확대, 안전 리더 육성 강화, 안전 공동체 조성

■ 추진과제

【과제 1】 신종 대형재난에 대한 선제적·통합적 안전조치 추진체계 마련(신규제안)

- 현황
 -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전에 작은 징후라도 파악된 경우 담당자가 규정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하나,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이유는 위험징후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신종 재난에 대한 시나리오와 규정 미비, 통합 추진부서의 위상, 연관된 부서의 복잡성, 민원 폭주, 권한의 부족, 관련 업무절차의 미비 등을 들 수 있음
- 대형 재난사고 징후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추진
 - 시장직속의 선제적 통합 안전조치 담당부서를 설치. 위험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재난사고 이력과 지역 취약특성을 빅데이터 스캔하여 계절별, 장소별, 취약집단별 위험요소 징후를 파악
 - 위험요소 발견 시 모든 연관 부서와 기관에 통합적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추진
- 신종 대형재난 대비 안전조치 기반 마련
 - 신종 감염병, 대형 시설물 안전사고, 자율주행차 사고, 사이버테러 등 신종재난에 관한 시나리오를 마련
 - 신종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 구동을 위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

【과제 2】 도시환경 개선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 대응성 고도화(신규제안: 서울시 추진예정)

- 현황
 - 화재 황금시간 5분을 초과한 경우 사망자는 2배, 재산피해는 3배 증가
 - 접근성이 부족한 서울시 현장 대응성 사각지대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
 - 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력의 개선에도 한계가 있어서 첨단기술을 통한 개선도 필요
-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도로에 노면표시, 태양광 조명블록, 안내판, 비상차선 지정, 가변차선 시행, 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구획
 - IoT 신호등을 설치하여 출동차량과 연계를 통해 신호대기 없는 출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고도화

- 119 신고 후 구급차 도착 전까지 신고자와 119 구급전담요원 간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한 심폐 소생술 실시 등 응급처치 지도
- 소방대원 등 재난현장 안전관리요원에 센서를 부착하여 위치파악, 원격 현장지휘 등을 통해 안전 관리요원의 보호 및 현장대응력 제고
- 119 구조 및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산악사고 등 사고현장에 드론과 로봇 활용
- 스마트 태그를 이용해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119신고, 이송 중 응급처치, 의료기관 대처 등에 필요한 응급상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 3】 위험지각 향상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신규제안: 서울시 추진예정)

○ 현황

- 서울 시민들은 시민 안전의식 및 안전 불감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서울시, 2018)
- 안전 불감증을 야기하는 원인은 위험지각이 부족해서인데, 이는 안전지식 부족, 안일함, 조급증, 형식성, 안전문화 조성 미흡 등에 기인
- 관련 법규 개선,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시민 참여활성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

○ 지역 안전공동체 사업 강화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의 역할 확대 추진.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시단을 조직하여 생활밀착형 안전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주기적 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 활동사례 공유를 통한 상시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안전리더 양성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확대. 시민안전파수꾼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도울 수 있게 안전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시민을 의미함. 재난대응 능력을 갖춘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확대 추진

○ 체험형 안전교육 및 홍보 확대

- 안전 홍보 체험 행사 강화. 서울시 안전체험한마당 행사와 안전체험관 교육 확대 강화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문화 홍보 확대
- 대규모 복합 안전체험관 신규 건립 및 첨단기술(증강현실, 로봇 등) 활용 체험성 강화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완료		
시행 중	안전도시 서울플랜(재난회복력 강화계획) 수립 학술 용역	2017.5.15~2018.7.31
시행 예정		

【에너지 분야】

■ 여건 및 현황

-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목표 설정
 - 재생에너지발전량: 2022년까지 10.5%, 2030년까지 20%
 - 재생에너지설비 용량: 2022년까지 27.5GW, 2030년 63.8GW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
 -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는 국내외에 에너지정책의 모범사례로 꼽힘
 - 에너지소비량 관련 공식 통계로는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성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진
 - 2022년까지 태양광 1GW 보급
 - 태양광 발전 비율 3% 달성
 -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대한 성찰
 -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향상 고려
 - 베란다 태양광 확대보급 정책 개선
- 서울의 열환경 개선과 시민편의 증진
 - 열섬과 폭염완화를 위해 녹지와 공존하는 옥상 태양광 정책 추진
 - 시민편의를 고려한 융복합 시설로 진화(예, 학교 스탠드 지붕, 자전거도로 그늘막)
- 생명선으로서의 전력 안정성 제고
 - 비상발전기와 ESS를 연계한 무정전 시스템 구축
 - 연료전지와 ESS를 연계한 무정전 시스템 구축

■ 추진과제

【과제 1】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대한 성찰적 모니터링(신규제안)

① 과제내용

- 서울시 에너지소비량 분석
 - 서울시 에너지소비량 등 통계를 이용한 성과 분석
 - 연간 에너지소비량뿐만 아니라 기상변화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성찰**

- 정책의 비전과 목적에 대한 성찰
- 정책방향 설정 과정의 민주성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의 역할 제고

○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성찰**

-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에 대한 성찰
- 다양한 시각의 시민참여 확대

○ **에너지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성찰**

- 투입비용과 에너지생산 및 절감 효과 분석
- 에너지정책 추진에 따른 서울시민의 편익분석과 시민의 만족도 조사
- 융복합화의 편익증진 효과 분석

○ **모니터링 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목표 조정과 추진방법 개선**

- 목표치 재설정 방안 도출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의 역할 제고방안 도출
-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방안 도출(예, 융복합시설화)
-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도 고려한 추진방안 도출
- 시민선호도, 지불의사 등에 관한 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한 추진 방법 도출

② **추진방안**

○ **추진실적 세부 내용 분석**

- 각 사업별 월 단위 추진실적 분석
- 세부사업별 에너지 절감, 생산 효과 분석

○ **서울시 에너지소비량 및 생산량 통계 분석을 통한 효과 평가**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 에너지원별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경제여건, 사회적 여건, 기상여건 등을 통합 분석

○ **세부사업별 이해당사자 만족도 조사**

- 실제 에너지소비량 증감 효과 검증
- 당사자의 만족도 조사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단위사업의 당위성 등에 대한 조사

○ **사업추진 방안별 시민의 호응도 조사**

-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의 선호도

- 창문의 차양, 운동장 스탠드 지붕, 산책로 지붕, 운동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의 지붕 등 다양한 유형의 선호도 조사

○ 사업 추진 모델의 재설정

- 성과평가결과, 시민의 선호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추진 모델 설정

【과제 2】 융복합형 태양광 보급(공약사항)

① 과제내용

○ 도시기반 시설과 융복합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에 차양형으로 설치하여 녹색교통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
- 시내버스 승강장에 차양형으로 설치하여 폭염과 우천 시 시민 편의 제공
- 공공건물의 차양으로 설치하여 발전효율증진, 냉방에너지절감, 우천 시 창문개방 가능
- 공공시설의 차양: 주차장 그늘 제공 등

○ 학교 및 시민 편의와 시설 연계한 융복합형 태양광 보급

- 학교 및 체육시설에 태양광 지붕 보급: 스탠드 지붕, 배드민턴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 공원시설과 연계한 태양광 보급: 소규모운동시설, 벤치, 정자 등

○ 서울의 열환경을 고려한 태양광 보급

- 녹지와 공존하는 옥상 태양광: 솔라쉐어링 기술을 적용하여 옥상녹화와 태양광발전 공존
- 태양광 시설과 쿨링포그 연계로 폭염 대응력 향상

② 추진방안

○ 융복합형 태양광 보급 모델 설정

- 발전사업용 태양광: 도로 등의 방음시설과 연계, 판상형 아파트의 차양, 자전거도로의 지붕
- 자가용: 베란다 태양광을 차양형으로 개선
- 공공건물: 주차장 지붕
- 공공시설: 횡단보도 등의 폭염 대피용 그늘막 연계, 버스정류장 지붕, 학교(통학로 및 건물과 건물 사이 통행로), 공원의 산책로 지붕(예, 독섬유원지 사례 참조)
- 운동시설: 각종 운동시설 지붕

○ 융복합형 태양광 설치 부지 조사

- 공공건물: 공공청사와 부지, 공공기관 건물과 부지
- 공공시설: 자동차 전용도로,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등)
- 학교: 운동장, 건물, 체육시설, 통학로 등

- 사업모델 설정: 각 부지와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사업유형 설정
 - 정부-서울시 지원 자가용 태양광: 개인 및 공공시설
 - 지역주민 중심의 협동조합형: 학교 및 공공 부지, 아파트단지 등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근무자(학생포함)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
 - 시민펀드형: 공공부지,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펀드 모집
 - 기업 공모형: 공공부지, 공공시설 등에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제 3】 무정전 시스템 구축(기존정책)

① 과제내용

- 정전의 사회적 비용 평가
 - 건물부문(주택 및 상업) 정전비용 평가
 - 공공 및 산업부문(학교,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정전비용 평가
- 비상전원 및 발전설비의 현황분석
 - 비상발전기 현황과 잠재량 분석
 - 소규모 열병합발전설비 현황분석
 - 대형발전설비 현황분석
- 전력공급을 위한 회로 구축
 - 건물 내 무정전 회로 구축
 - 블록단위 2중 배전망 구축
- 정부정책과 연계성 분석
 - ESS 관련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정책과 연계성 확보
 - 시간대별 요금체계와 ESS를 활용한 재무적 타당성 확보
 - ESS를 활용한 수요자원거래시장 참여로 재무성 확보
- 무정전 시스템 구축
 - 비상발전기와 ESS를 연계한 무정전 시스템 구축
 - 연료전지와 ESS를 연계한 무정전 시스템 구축

② 추진방안

- 정전의 사회적 비용 산정 연구용역 추진
 - 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비용 산정
 - 용도별 업종별 사회적 비용 산정

- 비상전원을 비롯한 가용 자원 파악
 - 가용전원 조사(비상발전기, 열병합발전기 등)
 - 신규 전원 보급 잠재량 조사
 - 가용 전원의 부하율 조사
- 건물과 구역 단위의 전력공급망의 취약성 파악
 - 건물의 전력공급 회로 조사분석
 - 구역 단위 전력공급 회로 분석
- 무정전 기반 구축
 - 건물 단위 또는 구역 단위의 무정전회로(2중 배전망) 구축 방안 도출
 - ESS를 이용한 무정전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 ESS 연계운용을 통한 편익 증진 방안 도출(첨두부하 저감, 수요반응거래시장 활용 등)

【자원순환 분야】

■ 여건 및 현황

- 서울은 세계 수위의 재활용도시로, 민선 6기 시정에서도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음(2013년 64%, 2016년 68%)¹⁾
 -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생산성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OECD가 평가했으며 폐자원의 흐름 분석과 결과의 활용을 권고함²⁾. 또한 영국 런던 광역정부에 서울은 폐기물관리의 수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함³⁾
- 생활폐기물 8%(2016년), 건설폐기물의 일부, 하수준설도 등 매립해야 할 폐기물이 발생하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지속적 사용을 반대하고 대체매립지의 확보 가능성도 낮음
 - 2015.6.28. 수도권 3개 행정수장과 환경부장관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에 합의한 바 있으나 이용가능한 면적이 최소 103만㎡, 최대 209만㎡ 등으로 제한되어 향후 20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⁴⁾
 - 103만㎡를 사용하는 동안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해야 하고, 2018년 현재 확보사업이 진행 중이나 넓은 부지의 발굴, 주민 및 행정기관의 설득 등의 과정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서울시가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소각시설, 재활용품 회수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폐기물매립은 수도권의 거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수 있음
-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으로 재활용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이 기대되나 재활용시장은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함
 - 지자체와 사업장에 대한 재활용실적 관리,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시행, 재활용문화 정착 등 재활용육성전략이 담긴 자원순환기본법의 올해 시행으로 사회전반이 재활용에 대해 친화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 그러나 올해 4월에 나타난 비닐류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적체현상은 민간 의존형 공동주택 재활용체계의 취약성을 노출시켰고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금지 같은 외부여건의 변화는 이 문제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음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매립지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게 재활용품 회수기반과 소각처리기반을 늘림
 - 매립쓰레기량을 줄이는 방법은 재활용가능품을 최대한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소각하여 양을 줄이는 것임
 - 재활용가능품을 최대한 회수하려면 수거과정에서 회수하고(적환장), 재활용시설의 선별능력을 높이고(재활용선별장), 저가치품을 고형연료로 활용하는 것임(고형연료 생산시설)

1) 환경부(2017), 2016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 OECD(2017),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3) David Greenfield(2016), INTERNATIONAL RECYCLING RATE COMPARISON PROJECT

4)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2015.6.28.),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의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성능을 높이고(소각시설 현대화), 주변 지하체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임(수도권시설의 공동이용)
- 회수된 재활용품이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재활용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활용시장에 대한 공공지원을 늘림
 - 재활용시장이 침체되어 민간부문의 재활용품 수급능력이 감소할 때는 저가치품에 대한 공공재원을 이용한 보조금 지급 또는 저가치품에 대한 지자체 직접 수거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늘림

■ 추진과제

【과제 1】매립쓰레기 감량기반 조성(신규제안)

- 자치구가 운영하는 적환장을 재활용품 회수기지로 활용
 - 각 자치구는 1~3개의 적환장을 운영 중
 - 가로청소쓰레기, 불법투기물, 가전가구류에서 재활용가능품 및 유기물 분리
 - 공간이 여유 있는 적환장은 종량제봉투에서 재활용가능품 회수
 - 적환장을 건물화하고 재활용품 회수설비 및 보관공간 확보
 - 적환장을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
-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추진
 - 재활용선별장의 선별률 제고를 위한 선별라인 확장 또는 자동선별기 도입
 - 인접자치구와 공동이용을 통한 선별비용 절감 및 운영수지 개선
 - 가연성 잔재물을 활용한 고형연료 생산
- 소각기반 확보
 - 기존 소각시설의 소각용량 증대
 - 여유 공간을 활용한 재활용가능품 또는 고형연료의 원료 회수
 - 노후시설의 성능유지 공사 추진
 - 수도권 신규소각시설 건설에 공동 참여
 - 수도권 소각시설 여유용량의 공동 활용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완료	서울시 폐기물의 중장기적 처리방안	2013.6~2014.8
시행 중		
시행 예정	자원순환기본계획 시행계획	2018.10~2019.9

【과제 2】 공동주택 재활용품 유통 안정화 사업(신규제안)○ **공동주택 재활용품 유통실태 파악**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 및 유통실태 분석
-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계약방법 파악
-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가격 및 유통단계별 가격 분석
- 유통가격의 모니터링 지점 파악

○ **유통 안정화 보조금 지급**

- 보조금 단가 결정
- 보조금 지급시기를 결정할 “재활용품 유통안정화 위원회(가칭)” 운영
- 재활용품 거래량 확인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및 수거업자 등록
- 보조금 지급 주체 운영: 자치구 또는 “재활용품 유통안정화 조합(가칭)”

○ **서울시·지자체·생산자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자치구): 공동주택 및 수거업체 관리, 수거량 관리, 보조금 지급, 수거단계 보조금 재원 확보
- 정부: EPR 제도의 대상품목 및 생산자 책임범위 확대, 재활용품 유통가격 모니터링, 지자체와 생산자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조금 재원확보
- 생산자: 수거에서 처리 전 단계에 대한 비용 확보, 다양한 재활용품 회수경로 개척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완료		
시행 중	공동주택 비유가성 재활용품 안정적 관리방안	2018.5-11
시행 예정		

【스마트시티 분야】

■ 여건 및 현황

-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 추진을 발표
 - 문재인 정부는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강조하면서, 공급자 중심, 관주도의 기존 유비쿼터스 도시 조성과는 차별화하여 민간 참여형,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음
 - 국가 시범단지로서 세종, 부산 일원 신규개발지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는 도시 조성 단계부터 블록체인, 핀테크, 사이버안전,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테스트베드로 최 소규모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임
- 첨단 IT 환경과 인프라 기반의 서울은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잠재력 높은 도시
 - 서울은 전 세계 500개 도시 중 스마트시티 세계 21위로 스마트시티 잠재력이 높은 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표상 서울의 분야별 디지털화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삶의 질 부분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Easy park, 2017)
 - 서울시는 서울디지털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5)을 통해 공공데이터 공유, 소통플랫폼 구축, 디지털 행정포털 구축 등 행정서비스 및 거버넌스 분야 ICT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구조의 재편 측면보다는 IC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차원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민선 7기를 앞둔 박원순 시장의 영역별 핵심공약 6개 부분 48개 공약 중 21개 공약이 스마트시티 분야 과제로, 6대 융합신산업단지 조성, 스마트팩토리 구축, 자율주행 기반 조성, 교통 안전강화 및 서비스 혁신,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유행정 추진,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등 산업, 교통, 행정, 안전, 서비스 분야 스마트도시 과제를 도출하였음
 - 신규 개발지가 적은 서울은 ICT 기술을 기존 도시에 접목하여 공공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존 도시 구조를 재편하여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전략이 우선되어야 함
- 해외 스마트도시 선도 도시들은 각 도시 컨텍스트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해법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현을 추진하고 있음
 - 바르셀로나는 도시 공공 인프라에 ICT기술(센서기술)을 사용한 ‘Sentilo’ 운영, 이산화탄소 제로 스마트교통 시스템 도입, 도시 전역의 버스환승 네트워크 정비, 자전거 공유 시스템,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공공 인프라의 스마트화를 통해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추진 중. 특히, ‘22@바르셀로나 혁신 지구’를 지정하여 기존 도시의 ICT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음
 - 암스테르담은 2009년부터 시민·민간·공공·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참여하며 사용자 중심, 소규모 단위, 분야별 융합을 통한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R&D, 공공 인프라 구축, ICT 서비스 개발, 역량강화 및 산업생태계지원 등 단계별 프로세스로 진행함
 - 런던에서는 “Smart London Plan”을 수립하여 시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제시하되,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음
 - 싱가포르의 2014년 중앙정부 주도의 “Smart Nation”을 발표하고, 건강·교통·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의 현황에 기초하여, 기존 도시 문제의 해결, 시민 체감형 프로젝트의 추진, 지자체 차원의 방향성 제시 등 서울에 적합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도시,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정의할 때, 스마트 시티 분야의 시정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음
 - 스마트 기술의 선정과 적용
 -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민의 삶(생산, 소비)을 지원하는 환경의 조성
-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기반은 네트워크와 플랫폼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할 것이라 기대되지만, 동시에 자연 독과점을 형성하게 됨. 따라서 스마트 시티 분야의 시정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함
 - 스마트 기술은 기존 산업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빈곤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소수자의 가능성과 편익을 증진하거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가?
 - 스마트 시티는 그 편익의 향유에 있어 소외를 줄이는가?
 - 자본에 의한 네트워크나 플랫폼 독점, 정보의 비대칭적 배분과 소외 등을 통제하기 위한 공공의 이니셔티브가 전제되고 있는가?

■ 추진과제

【과제 1】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 도시 서울 차원의 스마트시티 전략과 로드맵 작성
 - 기존 각 국·시·도별(환경, 안전, 에너지, 교통, 산업 등)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전략의 통합적 접근 필요
 -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도시의 운영 및 쇠퇴 지역에 스마트시티 전략 우선 검토
 - 예) 상암DMC, 마곡R&D시티, 양재R&D 혁신지구, G밸리, 홍릉 바이오 허브 등 신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 검토
 - 예) 성동(수제화), 중구(인쇄), 성북·중랑(봉제) 등 도심제조지역 스마트팩토리 건설 예정지역에 스마트시티 조성방향 검토
 - 예)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공공태양광 및 커뮤니티 발전소 확대,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등-의 스마트시티 전략 검토

【과제 2】 스마트 시티 센터 구축 시범사업(신규제안)

- 보행, 녹색교통, 개인교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세권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중심지 내 역세권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스마트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공간으로 조성
 - 역세권 공용주차장 설치
 - 통과교통 우회 유도 및 역세권 내 보행화
 - 개인교통체계 도입(차로 할당, 주차공간 및 충전설비)

- OaaPS 사업 병행

【과제 3】 Office as a Public Service(OaaPS)(신규제안)

- 노동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거리 통근 억제
-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하고 다양한 도시활동이 집결될 수 있는 역세권을 고도이용하고 기능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의 이니셔티브 필요
- 사무공간을 일종의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공간구조 합리화 및 장거리 통근 증가 억제
 - 스마트 라이브러리와 병합된 공용 업무공간을 제공
 - 광역중심 역세권에 도입함으로써 장거리 통근을 억제하고 중심지 기능을 강화함

【과제 4】 스마트 생활가로 조성사업 지원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구도심의 생활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필요
 - 도심 내 골목,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스마트 생활가로로 개선
- 사업대상: 주차장 관리, 전기차 충전, 방범(CCTV, 가로등), 신재생에너지, 쓰레기 처리, 방재(화재, 지진) 등 스마트 기술 도입, 환경개선사업

【스마트시티 분야2】

■ 여건 및 현황

- 서울은 세계 속의 앞서가는 스마트 도시로 알려짐
 - 매년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서울의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견학하기 위해 방문
- 현재 서울시 정보기획관실에서 마닐라개발청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스마트 도시 전수 중
 - 서울의 인터넷 인프라와 ITS 등 서울형 스마트 기술 도입방안 논의
- 서울시는 기존에 구축된 서울의 IT 인프라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지속적인 성과
 - ex) 2017년 국토부와 25개 구청에 분산된 CCTV를 통합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 민선 7기에서도 스마트 도시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
 - 상암DMC 스마트 콘텐츠 기반 혁신 성장 거점 조성
 - 양재 R&D 혁신지구에 AI 빅데이터 특화 단지
 - 마곡단지에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 조성
- 해외도시에서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교통이나 IT분야에 한정하여 경험하는 제한 존재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할 필요
 -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으로 정립
 - ITS뿐 아니라 안전, 폐기물, 상하수도, 복지전달체계 분야에도 스마트한 정책 존재
- 서울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은 개발도상국 도시에 상당히 유의미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우수정책 수출의 새 활로를 찾아야 할 필요
- 서울을 방문하는 개발도상국 도시 방문단에게 서울의 다양한 ‘스마트 정책’ 공유
 - 현재는 TOPIS를 중심으로 교통분야 스마트 정책 공유에 한정

■ 추진과제

【과제 1】 Smart City Seoul Package 구성(신규제안)

-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분야를 망라하는 ‘스마트 정책 패키지’ 마련
 - 다양한 분야 정책의 브리핑 자료(다국어), 현장답사, 전문가 미팅으로 구성
 - 여러 가지 성격의 활동을 일관성 있는 패키지로 엮어내는 작업 필요
-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패키지 활성화
 - 우수정책의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전문가와 관련 기업 등 관계자 참여

- 분야별로 여러 개의 패키지를 만들어 관심에 따라 패키지 가동
 - 예) 인프라 분야(교통, 환경, 안전), 기타 정책 분야 (복지, 여성, 인사 등)

【과제 2】 World Smart City Alliance 추진(신규제안)

- 서울시는 세계 속에서 IT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로 조명 받고 있음
 -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AI,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답보상태
 - 전 세계 타 도시의 스마트 도시 정책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음
- 서울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 세계 스마트 도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정책 공유
 -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상하이 등 신개념의 스마트 도시 정책 공유로부터 우수정책 도입 추진
- 서울연구원 중심의 MeTTA는 타 도시의 연구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기존의 WeGO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도시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타진 필요
- 서울시 국제교류과, 해외도시협력관실과 정보기획관실이 협력하여 TF를 구성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 추진

【지역균형발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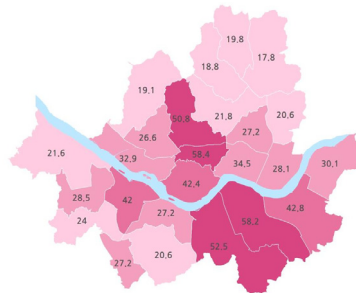
■ 여건 및 현황

○ 민선 6기 시정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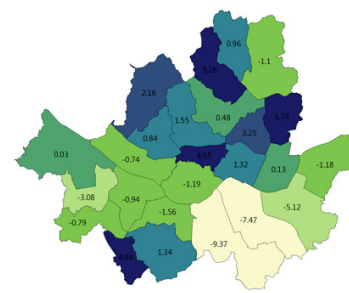
- 목표 및 배경: 민선 6기 시정의 주요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은 1)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 2) ‘4대 권역별 지역발전사업’, 3) ‘2030 생활권 계획 수립’ 등으로 민선 6기 동안 지속적으로 지역별 발전구상을 마련해왔음
 - 1) 낙후된 강북 도심부 중심으로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2) (동북권) 창동상계,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서북권) 수색역세권, (서남권) 마곡
 - 3)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116개 지역생활권계획 단위로 지역별 발전구상 마련
- 진행과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구상(2017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연구 용역(2018년, 진행 중)

○ 민선 6기 시정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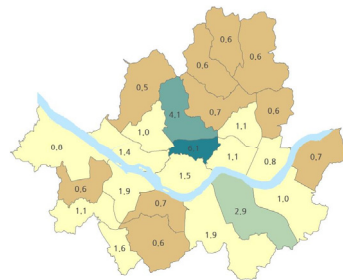
- 한계: 그간의 노력에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성동구 56%, 은평구 21% (머니투데이 '18.6.6)
 - 상업지역 비율: 중구 39.2%, 광진구 1.2% (머니투데이 '17.7.26)
 - 재정자립도: 중구 58.4%, 노원구 17.8% 약 3.3배 차이 (서울연구원)
 - 지역박탈지수: 서초구 -9.37, 종랑구 5.74 약 2.6배 차이 (서울연구원)
 - 직주균형지수(직장인구/취업인구): 중구 6.1%, 은평구 0.5% 약 12배 차이 (서울연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강북구 8.0%, 서초구 1.9% 4.2배 차이 (서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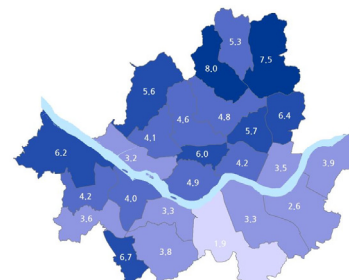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2017)



지역박탈지수 (2013)



직주균형지수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2016)

○ 박원순 시장, '균형발전 서울' 공약 발표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공약으로 '균형발전' 제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
-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균형발전 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 추진
 - 3도심·7광역중심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
 -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 기능 복합화
 - 시 경계에 위치한 12개 지역을 일자리 및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관문도시로 조성(1단계 대상지: 사당·도봉·온수·수색)

○ 안철수 후보, 일자리 마련 및 준공영 개발 추진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제시

- 5대 밸리 인접지역 대상으로 '테크시티' 프로젝트를 통한 낙후지역 일자리 마련 및 창업허브화
 - 창동~신내~홍릉 4차산업·창업밸리(강북권), 마곡~가산 IOT유통밸리(강서권) 등 권역별 특화된 미래 산업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

○ 김문수 후보, '대학가 주변을 일자리 창출지역으로' 강북지역 집중 시행 계획 제시

- 태릉권, 강서·구로권, 동작권 등 서울 대학가 중심으로 4차 산업 적합시설(대학, 기업, 창업, 주거, 문화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및 해소: 생활편의시설 확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

- 기존 지역 간 물리적·기능적 격차에 대한 완화 및 해소 필요
- 지역 간 불균형 발생으로 불필요한 갈등요인 제거
- 주민 수요차원의 생활 편의성원에서 접근
- 낙후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문

○ 지역별 특성화된 경쟁력 강화: '더 기울지 않도록 운동장' 유지

- '바로잡은 운동장' 유지 또는 '더 기울지 않도록 운동장' 관리 차원
- 모든 지역에 대한 획일화된 정책집행을 지양하고, 해당지역에 맞춤 정책 차원으로 접근
- 자원의 균등한 배분이 아닌 지역별 특화부문을 고려한 정책지원 필요
- 이를 위해 지역의 잠재력 즉 지역인재, 지역자산, 지역일자리 등의 현황조사 선행

○ 사람이 중심되는 사회적 배려 고려: '함께 뛰는 운동장'으로 변모

- 성장의 혜택에서 배제된 대상자에 대한 고려
-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이 아닌 함께하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접근

■ 추진과제

【과제 1】 생활편의 중심의 현실성 있는 지역 간 불균형 실태분석 추진(안) (신규제안)

- 지역 간 불균형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 선행
 - 불균형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실태분석 선행
 - 행정 데이터 이외에 주민 인터뷰가 포함되는 질적 조사 병행
 - 수요예측에 따라 필요자원 확보 및 예산편성을 통한 사업의 추진력 강화
 - 실제 필요한 사업만의 지원으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재정 효율성 극대화
 - 실태분석 자료에 대한 DB구축 및 평가·관리·피드백 체계 구축
- 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균형 요인분석
 - 지역사회 내 생활 편리성 차원의 접근 필요
 - 사람이 중심되는 관점 필요(시설 수가 아닌 접근성 차원의 수요분석 필요)
 -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시민 수요조사 등)
 - 생활권 내 건강(병원, 응급시설 등), 문화 및 여가(공연, 도서관, 공원 등), 이동(대중교통, 주차장, 통근시간 등), 쇼핑(백화점, 대형유통, 재래시장 등)의 접근성 고려
 -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 이외에 작은 생활측면의 공공지원이 효과적(예시, 그늘막)
 - 실제 필요사업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지원 대비 만족도 상승
 - 예컨대, 보육시설의 경우 수용률이 43.4%에 불과한 노원구는 약 80%가 수용되는 강동, 중구, 송파, 서초보다 우선공급

【과제 2】 생활권별 맞춤형 중점사업 추진(안) (기존정책)

- 지역별 특성화된 중점전략 수립
 - 생활측면의 불균형 실태분석 자료를 활용한 각 생활권별 중점전략 수립 및 추진(2030 서울생활권계획 자료 병행 활용)
 -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지역별 선택과 집중(중점사업 추진의 성과는 타 부문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확산효과 가능성)
 - 균등한 자원배분이 아닌 특성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자원의 효율성 추구
- 생활권 계획에 근거한 권역별 맞춤형 중점전략
 - 동북권: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 육성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
 - 서남권: 준공업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로 산업·경제 거점지로 육성, 생활기반 시설 확대
 - 서북권: 창조문화산업 경제거점 육성, 교통체계 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교통 및 생활기반 시설확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맞춤형 중점사업 예시: 동북권**

- 기존 계획에서 창동·상계 신경제거점을 통한 약 8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진행이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현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지 못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역량 강화 차원의 “지역기업” 발굴 및 육성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 모색
- 일종의 사회적기업 또는 지역경제 순환형기업 형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
- 또한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하여 사회적 배려 측면에서도 효과적
- 연관효과 기대(관련 창업 및 교육, 유통 등의 확대로 지역기업의 재생산 확대 가능)

〈표〉 동북생활권 맞춤형 중점사업 예시

	취약점	중점 추진사업 제안
동북권	• 주거기능 입지로 일자리 여건 취약	• 지역기업 발굴 및 육성 - 지역역량 강화 -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
	• 교통접근성 취약	• 교통 접근성 개선 - 우이·신설선 창동역(1·4호선)까지 연장

【과제 3】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전담 실행조직 구성(안) (신규제안)

○ **전담 실행조직 구성의 필요성**

- 서울시 국/실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국/실별 사업 간 연계성 부족
- 관련사업 및 국/실 간 연계성 부족으로 유사 및 중복사업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의 목적보다 국/실별 실적 위주의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균형발전 추진부서 운영**

- 지역균형발전의 종합적 기획 및 추진, 집행, 평가, 관리, 피드백 등 종합적 업무수행 조직 구성
- 서울시 각 국/실과의 사업추진 협의 및 통합 진행
- 또한 국가균형발전과의 연계성 및 대응 업무 수행
- 추진부서에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권한 부여로 위상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협력체계) 구성**

- 이해관계자(공무원, 시민, 위원회, 전문가 그룹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 시 이해관계자의 의미를 재 해석하여 구성
 - 예) 시민의 경우 시민단체 관계자 외에 지역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시민을 참여, 관련학과 일부 교수를 전문가그룹이 아닌 시민그룹으로 편성 시도, 전문가 그룹은 지역균형발전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 참여(기업의 관계자 참여 시 해당 관련사업 수행에서 배제 고려),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해 회의 진행을 평일 저녁시간대 또는 주말시간 활용

- 다각적인 관점과 수요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
- 상향식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참여한 시민에게 비중 있는 역할 부여 등
- 원활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균특회계를 통해 직접 재정지원 모색
 - 정부지원을 위한 매칭펀드식 균형발전의 추진은 사업지역의 문제점
 - 또한 자치구의 매칭펀드로 기타 지원 부문 축소 등의 부작용도 예상
 - 따라서 신설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직접 재정지원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
 - 자치구의 매칭펀드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사업도 병행추진
 - 서울시 균특회계지원사업의 결정은 신설되는 전담조직(제안)에서 평가 및 결정

【도시재생 분야】

■ 여건 및 현황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내실화 필요

- 민선 6기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인 도시재생 기반 마련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개정을 통해 1단계 13개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선도 모델과 2017년 2단계 활성화지역 14개 선정 사업 진행 중
- 민선 6기 1차 도시재생활성화 선도사업의 완료시점이 도래하였으나, 앵커사업 및 공공사업부문의 추진 완료 이후 후속적인 재생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전략 구상 수립 필요

- 2018년 민선 7기의 시작과 함께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10개 지역이 본격 추진 예정
- 또한 낙후지역 재생을 위한 서울-경기 접경지 12곳 관문도시로 개발·육성 예정
- 서울역-용산역일대 새로운 국가중추거점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특구로 전략적인 추진 필요

○ 협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주체 간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필요

- 자치분권화 시대에 맞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통해 협치형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마련 필요
-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활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민간참여 강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 주민 간의 협치형 도시재생 추진 강화 필요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주거지 재생에서 전 도시적 재생으로

- 주거지 재생은 서울형 재생모델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실험적 사업 발굴 및 추진
- 중심지, 산업지, 낙후지 등 유형별 도시재생모델 개발과 추진, 특히 도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심지와 산업지 재생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사업 발굴을 통한 선도적 역할의 강화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후한 인프라 확충 강화

- 재생 여건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개선, 확충하는 사업에 투자 우선순위 부여
- 주거지 재생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지원 도시인프라 확충, 4차 산업 및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한 산업인프라 등 재생유형별 인프라 개선, 확충

○ 지방분권시대의 협치형 도시재생 추진 모델 개발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간참여 강화방안 마련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협치형 도시재생 추진
- SH공사 등을 통한 공공의 개입 및 지원 확대

○ 시민 체감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의 성과 강화 방안 마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주거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만들기뿐만 아니라 기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정비수단을 강구
-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모델에 대한 자조적이며 지속가능한 재생모델 정착을 위한 방안 강구

○ SH공사 등을 통한 공공의 개입 및 지원 확대

- 개발이익에 기대어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도시 관리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움
- 재산세 증세 등을 통해 도시 관리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별도의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과제 1】 도시재생 선도도시 도약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신규제안), (공약사항)

○ 민선 7기에는 대상지 유형별 4가지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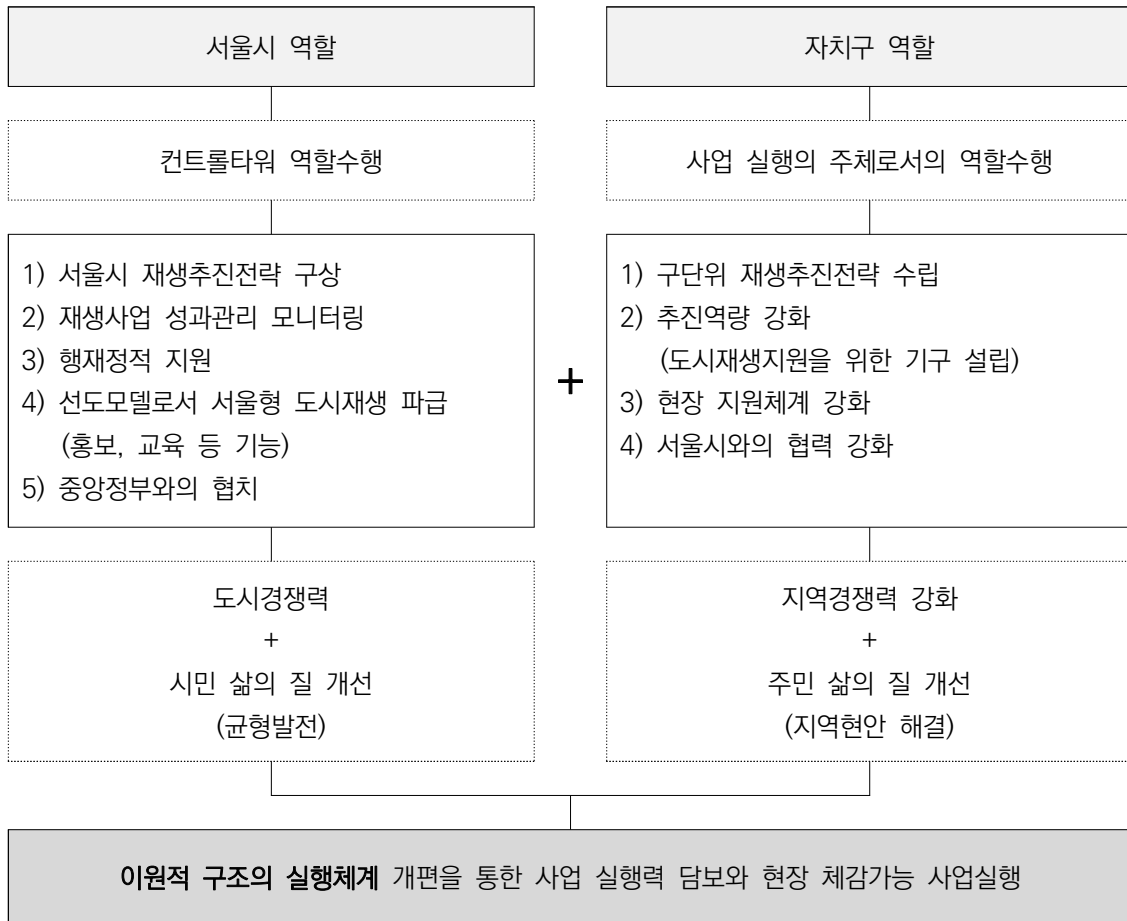
- 주거지 재생, 중심지 재생, 산업지 재생, 낙후지 재생 등 유형별 차별화된 도시재생 추진모델과 전략 마련
- 민선 6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거지 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중심지, 산업지, 낙후지 재생모델의 집중 추진을 통한 전 도시 차원의 재생과 대한민국 재생표준모델 전국 확산

구분	주거지 재생모델	중심지 재생모델	산업지 재생모델	낙후지 재생모델
목표	삶의 질 개선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활력 (일자리창출)	지역산업기반 강화 + 지역활성화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추진 과제	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②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③ 지속가능한 자력 기반 마련(CRC) ④ 해제지역 정비	① 민간활력 증진 (민간참여 강화) ② 도시인프라 확충 (입체결정) ③ 재생특구 활용 (가칭 재생기회지역)	① 4차 산업/스마트 시티 개념의 구현을 통한 산업인프라 혁신 ② 지역산업 보호육성 ③ 전통시장 활성화	① 관문도시육성 전략 수립 ② 인접 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강화 ③ 낙후한 인프라 개선
추진 정책 방향	민선 6기 도시재생의 주요 추진 모델			민선 7기 서울형 도시재생의 주요 추진 모델
	주거지 재생에서			전 도시적 재생으로

【과제 2】 상생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협치형 도시재생사업구조(기존정책), (신규제안)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분권시대의 협치형 실행체계로의 개편

-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 협치형 도시재생사업구조 확립을 통한 사업실행력 담보 강화 필요
- 사업실행체계의 이원적 구조개편으로 공공지원 강화와 현장중심의 체감가능성 향상방안 마련



【과제 3】 지역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견인을 위한 도시재생 신추진전략(기존정책)

- 민선 6기에 추진된 기존 재생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민선 7기 출발과 함께 추진될 신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신전략 구상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필요

기존 재생사업 내실화		
	① 희망지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인큐베이팅	
	② 1차 선도사업(13개) 완료시점	▶ 후속사업 진행이 원활 X (CRC 육성과 운영)
	③ 2차 도시재생사업(14개) 진행 중	
	④ 서울형 도시재생관리: 모니터링의 한계	▶ 관리의 문제 발생(통합관리)
	▶ 민선 6기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성과방안 마련	
성숙 단계		네트워킹 (SH공사/민간기업)
신규사업에 대한 혁신전략 구상		
	① 국가와 함께하는 혁신적 도시재생 추진 (‘18년 10개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	
	② 관문도시 육성 및 정비	후속사업 진행이 원활 X (CRC 육성과 운영)
	③ 용산 등 전략적 특구 육성	
	▶ 새롭게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신전략 구상 마련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을 견인	

〈표〉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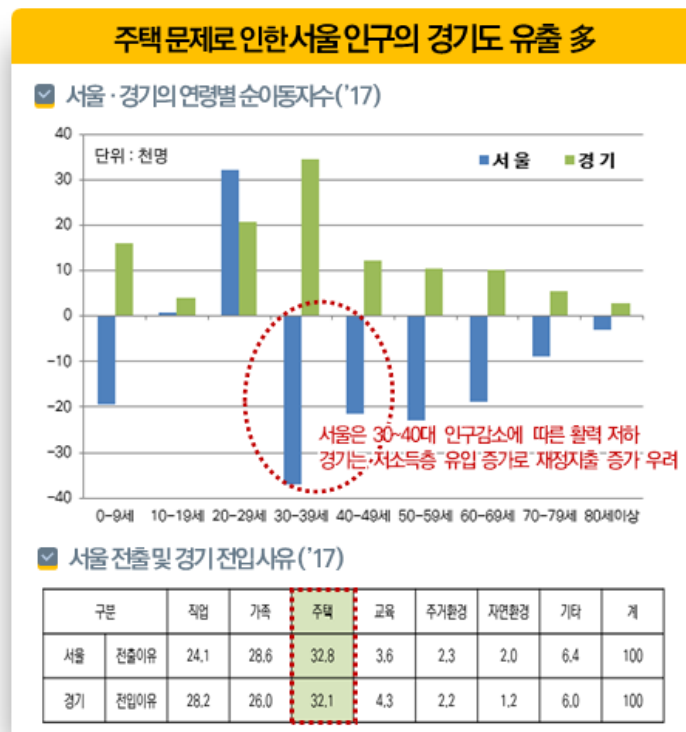
추진현황	과제명	과제기간
시행 완료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맞춤형 주거재생방향 연구	2017.7-2018.2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2017.10-2018.4
시행 중	마을재생을 위한 빈집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2018.1-2018.8
시행 예정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형 지역기반 CRC 육성지원방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모델개발 및 적용방안	
신규과제 구상	뉴타운 해제지역 재생전략 종합계획 수립	
	저층주거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도시재생사업에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 투자 유도방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정책개선방안	
	산업지 도시재생모델 적용을 위한 4차 산업 및 스마트시티 개념의 구현을 통한 산업인프라 혁신방안	
	관문도시 육성전략계획 수립	

【서울 대도시권 협치 분야】

■ 여건 및 현황

- (광역 문제 예시 및 민선 6기 시정성과와 한계) 생활권 확대로 광역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도시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민선 6기에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있음
- (주택) '17년 기준 서울 전출-경기 전입 사유의 30% 이상이 주택. 주택 문제로 인해 서울의 30~40대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유출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은 하나의 주택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시점에서 수립되어 인접 지자체와의 관계 고려 부족

〈그림〉 서울-경기 전출·전입 현황('17)



자료: 메가시티 거버넌스 구축 계획 TF 자료

- (환경) 깨끗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공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내 초미세먼지 농도 20% 이상 감축($25 \rightarrow 20 \mu\text{g}/\text{m}^3$). 2013~2017년 대기질 개선 사업 예산으로 3,930억 원을 들였으나,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25 \mu\text{g}/\text{m}^3 \rightarrow 24 \mu\text{g}/\text{m}^3 \rightarrow 23 \mu\text{g}/\text{m}^3 \rightarrow 26 \mu\text{g}/\text{m}^3 \rightarrow 25 \mu\text{g}/\text{m}^3$ 로 농도 변화가 없었음. 원인 분석 및 대기질 측정 대응까지 광역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교통) 2015년 수도권 내 타 시·도 출근·등교는 일일 278만 통행으로 2010년 대비 29만 통행이 증가함. 서울시 직장인 인구 중 23%가 경기·인천에 거주하여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라 할 수 있으며, GTX 완공 시 이동 속도가 현저히 빨라져 광역화는 더욱 진전될 전망

- (기존 기구 및 제도의 한계) 정부 차원에서 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였으나(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지자체의 협력 난항으로 비효율 극복에 한계를 보임. 또한, 광역행정제도는 법적 구속력, 예산집행권 미비로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력 취약
 - 기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부 산하에 설치(2005)되어, 서울, 인천, 경기도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수도권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의 추진이 더딘 상황이며, 각 대기오염물질의 원인 파악을 위한 측정 조사 또한 각 지자체 단위에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 152조에 근거하여 '14.7. 설치된 바 있으나, 운영 실적은 부재. 법적 구속력, 분쟁해결능력, 집행권, 과세권이 없고, 전담부서의 부재로 지속적 광역문제 해결 및 합의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불가
 - 기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수도권교통본부가 설립되어 있었으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정 규정의 미비로 활동 및 자율성에 제약이 있었음
- (광역문제 해결 기구의 필요성 및 민선 7기 주요 공약) 그러나 광역적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최근 정부는 메가시티의 흐름(대외적) 및 광역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대내적)에 발맞춰 국정과제로 '광역교통청 신설(18년)' 및 '광역 급행열차 도입'을 제시. 서울, 경기, 인천 당선인은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 체결
 - 광역교통청은 2018년 하반기 출범 예정이며, 광역교통에 대한 계획, 개선, 조정 기능을 가지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시철도운송사업, 광역복합환승센터,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총괄
 - 서울시장 당선인 박원순, 경기도지사 당선인 이재명, 인천시장 당선인 박남춘은 지난 6월 3일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서를 체결함. 수도권 차원에서 추진할 7가지 공동정책(광역교통청 설립, 재난대책체계 마련,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미세먼지 저감, 수도권 남북교류 활성화,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청년일자리 확대) 발표

〈그림〉 2018.6.3.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서 체결



자료: 한국경제, 2018.6.3

- (정부의 정책방향 - 분권화) 현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은 분권화. 소극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으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헌법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분권화를 실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시정운영 방향

- 광역화된 서울대도시권의 공간구조 결정 및 광역적 문제를 아우르는 정책에 대하여 조정·논의하는 기구 설립 필요. 또한 현재 경기도는 도종합계획 수립 중, 서울·인천도 기본계획 재정비 필요
 -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교통망 등 내용을 일치시켜 수도권의 광역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
- (협치체계 및 기구 설립) 광역화된 서울대도시권을 아우르는 정책에 대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협치 체계 및 기구 마련
 -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 및 분권을 지지하는 법률 개정과 발맞추어 추진
-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존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목표연도 도래.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경기도종합계획 및 서울·인천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동시 수립을 통해 계획의 실질적 실효성 확보
-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관계 정립)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각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 시행) 광역적 문제 대응, 광역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도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권역 단위에서 공동의 시범 프로젝트 발굴
 - 이동 편의성 확보와 신교통수단 도입 - 인구 및 일자리 밀집지를 고려한 GTX 노선 조정, 수도권 공간구조와 연계하여 Regional Mobility Hub와 유사한 대중교통센터 조성
 - 수도권 차원에서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 마련 및 구체적 계획 시행
 - 생활권 단위의 저렴한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 인접 시가 제공한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 선발권 일부를 행사하는 방식
 - 문화·교류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공간 마련 -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건립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연구와 협약

■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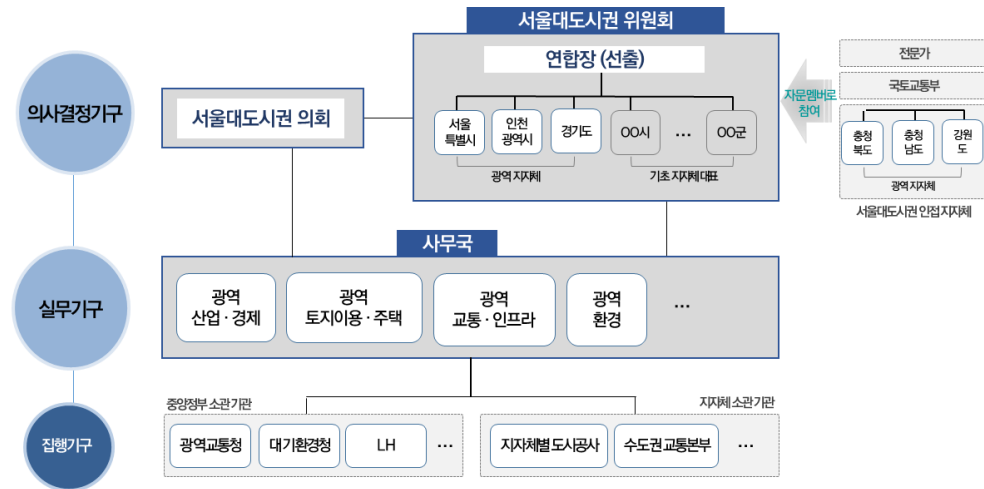
【과제 1】 협치체계 마련 및 기구 설립: “수도권 협치기구”(신규제안)⁵⁾

- 자율적으로 대도시권 차원의 광역 문제를 통합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고, 계획 수립·승인 및 예산 집행력을 지닌 실행기구 마련
 -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실질적 권한을 지닌 통합적 정부 협의 창구로서의 역할 기대
 - 교통·인프라, 토지이용·주택, 산업·경제, 환경 등 부문별 광역이슈의 통합적 기획 및 조정 역할 수행

5)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기구

- 현행 ‘지방자치법(제2조)’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는 있으나, 설치 절차 및 운영 등 위임 사항이 포함된 대통령령상 규정은 부재한 상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기관구성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령 개정 필요
 - 구성원, 구역, 자치권 등 기본적인 구성요소 및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불비
 -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유사제도인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행정협의회 등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개정이 타당
 - 헌법상 자치권이 보장된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사무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규칙 제정권 부여 필요
-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 ‘의회’, 그리고 실무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 자문멤버로 전문가, 국토교통부, 서울대도시권 인접 지자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전문성 확보 및 연접지역과의 연관성 유지
 - 의회는 주민 대표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 행사를 위해 소속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 일부를 의회 구성원으로 선임
 - 위원회는 소속 지자체의 장(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대표)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속 지자체의 장 중에서 투표로 선출
 - 사무국은 관할 지자체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하고, 대도시권 계획을 수립

〈그림〉 수도권 협치기구 조직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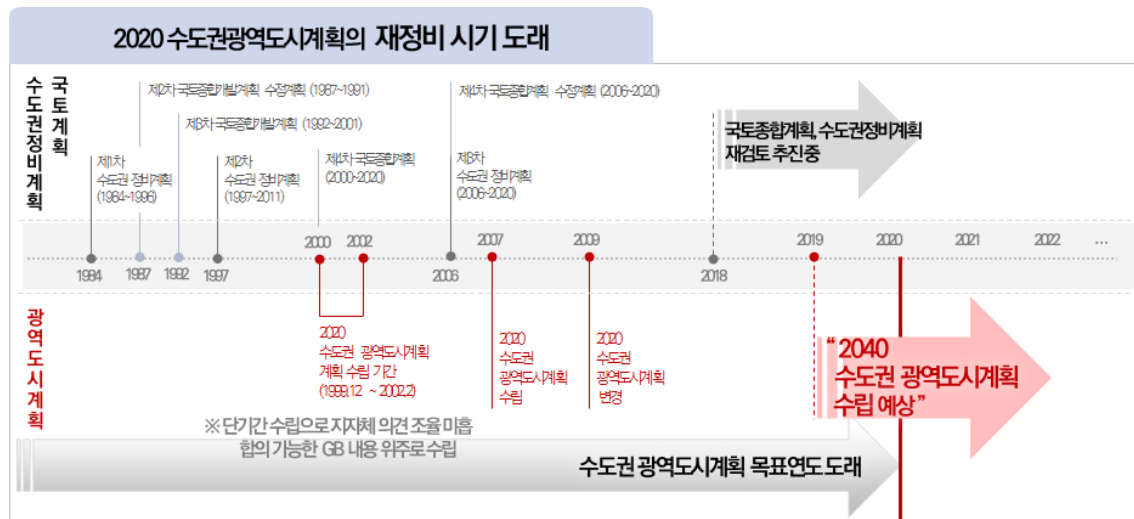


자료: 메가시티 거버넌스 구축 계획 TF 자료

【과제 2】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존정책)⁶⁾

- 기존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목표연도 도래.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계획 수립 연구에 맞춰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 착수 및 타 계획과 동시 수립 진행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2040경기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상위계획 및 수도권 각 지자체의 광역적 사안을 고려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
 - 앞서 제안한 ‘수도권 협치기구’를 통하여 계획 수립, 혹은 각 지자체 및 연구원의 도시계획 수립 주체들이 모여 공간구조, 토지이용·주택, 교통·인프라, 환경, 산업·경제 등 광역적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
 -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

〈그림〉 국토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현황



자료: 서울연구원,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2차) 보고자료

【과제 3】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정립(신규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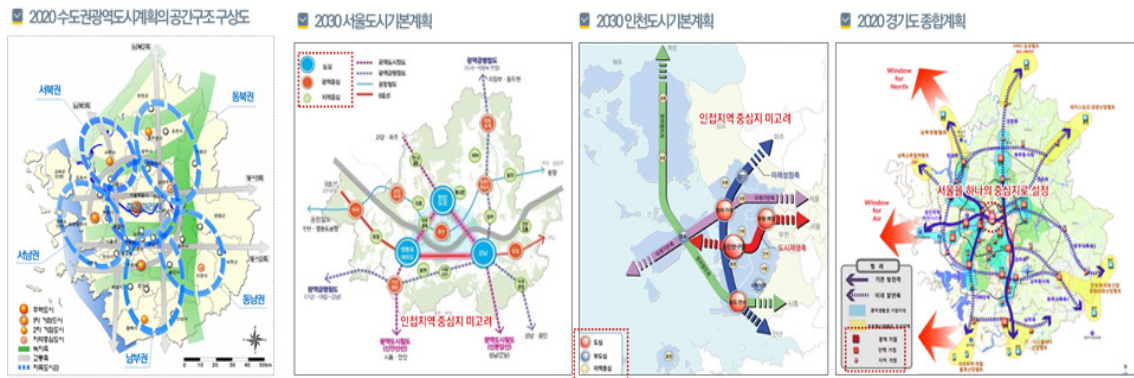
⇒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 공간구조, 교통망 계획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행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각 시도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공간구조 및 중심지는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제3절, 1-3-1에 따르면 ‘지역계획 중 광역권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 되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러한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6)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40경기도종합계획, 서울·인천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
타 계획의 수립 예정 일정에 맞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 연구 착수. 관련 계획들과 동시에 수립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실질적 실효성 확보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제3절, 1-3-2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군계획체계상의 최상위 계획으로, 광역계획권내 시·군들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 그러나 공간구조 부문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각 지자체에 대하여 지침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서울과 인천은 각각 1개의 중심지만을 설정하고 있으나, 기초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세부 중심지를 설정하고 있으며, 발전축 또한 상이한 양상을 보임

〈그림〉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각 지자체 기본계획의 공간구조



- 광역도시계획에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공간구조 및 교통망 계획을 세우고,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이를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중 공간구조, 기반시설 부문에 근거 마련 필요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제1장 3절 지위와 성격’ 1-3-1에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중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부문의 기본원칙에 상위계획 내용 적극 반영과 관련한 내용 부재
- 조항 마련에 난항이 있을 경우, 협치체계(수도권 협치기구)를 마련하고, 본 기구를 통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조정
 - 도시·군기본계획(서울, 인천)의 승인 권한 및 도시·군기본계획(경기도)의 조정, 심의 권한을 수도권 협치 기구에 이양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와 내용에 상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